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Ocean & Fisheries Innovation Projects
in Coastal Regions in Korea

2019. 04.

최지연 | 황재희 | 전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진	최지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부연구위원 황재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전문연구원 전현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정책동향연구본부 연구원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최지연 연구총괄, 제1장~제2장, 제3장 제1절~제2절 일부, 제4장
연구진	황재희 제3장 제1절~제2절 일부 전현주 제3장 제1절~제2절 일부

목차

❖ 요약 · i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제 2 장 시·도의 해양수산 여건 진단과 정책 분석 · 5

제1절 연안·해양지역의 여건 진단	5
1. 연안·해양의 자연환경	5
2. 연안·해양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9
3. 해양수산 산업·경제 현황	18
4. 시·도 해양수산 특화도 분석	24
제2절 국가와 시·도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분석	30
1. 국토·지역계획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 분석	30
2. 해양수산부의 지역 관련 정책 분석	36
3. 시·도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분석	42

제 3 장 시·도별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사업 분석 · 49

제1절 광역시의 해양수산 현안 및 정책과제	49
1. 부산광역시	49

2. 인천광역시	55
3. 울산광역시	60
제2절 도의 해양수산 현안 및 정책과제	64
1. 경기도	64
2. 강원도	67
3. 충청남도	72
4. 전라북도	79
5. 전라남도	84
6. 경상북도	90
7. 경상남도	95
8. 제주도	101

제 4 장	해양수산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사업 제안 · 109
제1절 해양수산 지역혁신 추진방향	109
1. 기본 추진 방향	109
2. 목표 및 추진전략(안)	111
제2절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안) 제안	139
1. 제안 개요	139
2.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안)	140

❖	참고문헌 · 157
----------	-------------------

❖	부록 · 163
부록 1. 제주	164
부록 2. 전남	172
부록 3. 부산	179
부록 4. 충남	183

표 목차

❖	
〈표 2-1〉 연안지역별 해안선 및 도서현황	6
〈표 2-2〉 한반도 해역의 해수면 상승률과 가속화	8
〈표 2-3〉 연안 인구의 특성(2017년)	10
〈표 2-4〉 연안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2017년)	11
〈표 2-5〉 연안 지역별 경제 현황	12
〈표 2-6〉 연안 지역별 전사업체 및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13
〈표 2-7〉 연안 지역별 재정 현황	16
〈표 2-8〉 연안 지역별 등록외국인수와 독거노인가구 비율	17
〈표 2-9〉 2014년 해양수산 산업의 부가가치와 비중	18
〈표 2-10〉 수산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매출액(2016년)	20
〈표 2-11〉 연안 지역별 어업 및 수산물가공 생산 현황 (2017년)	21
〈표 2-12〉 연안 지역별 어촌계 현황	22
〈표 2-13〉 해양레저·관광 주요 현황	23
〈표 2-14〉 연안·해양 지역별 유형분류 지표(안)	25
〈표 2-15〉 사·도의 어업·수산 지표 현황	25
〈표 2-16〉 사·도의 해운·항만 지표 현황	26
〈표 2-17〉 사·도의 관광·레저 지표 현황	27
〈표 2-18〉 주요 국가계획 중 연안·해양 지역발전 관련 주요 내용	30
〈표 2-19〉 국가 균형발전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32
〈표 2-20〉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중 해양수산 관련 과제(안)	33
〈표 2-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중 해양수산 부문	34
〈표 2-22〉 연안·해양지역 관련 혁신도시 특화발전계획	35
〈표 2-23〉 해양수산 부문 지역 관련 국가계획	36
〈표 2-24〉 해양수산부의 주요정책	37

〈표 2-25〉 어촌뉴딜 300의 추진방안	38
〈표 2-26〉 항만 지역 활성화 관련 주요정책	39
〈표 2-27〉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41
〈표 3-1〉 부산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52
〈표 3-2〉 부산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53
〈표 3-3〉 인천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56
〈표 3-4〉 인천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58
〈표 3-5〉 울산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61
〈표 3-6〉 울산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63
〈표 3-7〉 경기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65
〈표 3-8〉 경기도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67
〈표 3-9〉 강원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69
〈표 3-10〉 강원도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71
〈표 3-11〉 충남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76
〈표 3-12〉 충남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78
〈표 3-13〉 전북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81
〈표 3-14〉 전북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83
〈표 3-15〉 전남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88
〈표 3-16〉 전남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89
〈표 3-17〉 경북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93
〈표 3-18〉 경북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94
〈표 3-19〉 경남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99
〈표 3-20〉 경남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100
〈표 3-21〉 제주 해양수산업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105
〈표 3-22〉 제주의 해양수산업 주요 정책과 사업	106
〈표 4-1〉 어촌지역의 법적 정의	147

그림 목차

◆	
〈그림 1-1〉	시·도 해양수산 현안 및 혁신정책 간담회 현장 4
〈그림 2-1〉	갯벌 분포도 7
〈그림 2-2〉	지역별 갯벌 분포 7
〈그림 2-3〉	생태기반 해수수질평가 결과 9
〈그림 2-4〉	해양생태도 등급분포 9
〈그림 2-5〉	최근 5년간(12~17년) 연평균 연안 인구증가율과 도시지역 인구증가율 11
〈그림 2-6〉	연안 시·군 전사업체 및 제조업 종사자 수 분포(2015년) 14
〈그림 2-7〉	연안지역의 산업 다양성 지수와 특화지수 (2015년) 15
〈그림 2-8〉	해양산업의 사업체와 사업체 지역별 분포 19
〈그림 2-9〉	전국 항만물동량 처리현황 20
〈그림 2-10〉	전국 어가인구 추이와 지역별 어가인구 분포·변화율 22
〈그림 2-11〉	연도별 해역이용협의 건수 추이 24
〈그림 2-12〉	시·도별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기반 역량 비교 29
〈그림 2-13〉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 40
〈그림 4-1〉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추진방향 110
〈그림 4-2〉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의 목표와 전략(안) 112
〈그림 4-3〉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기본구상(안) 115
〈그림 4-4〉	공존경제해역권의 이용현황도 117
〈그림 4-5〉	공존경제해역권의 기본구상도(안) 119
〈그림 4-6〉	환황해연계해역권의 이용현황도 121
〈그림 4-7〉	환황해연계해역권의 기본구상도(안) 123
〈그림 4-8〉	섬·新경제해역권 이용현황도 125
〈그림 4-9〉	섬·新경제해역권의 중점추진과제(안) 127
〈그림 4-10〉	동북아거점해역권 이용현황도 129

〈그림 4-11〉 동북아거점해역권 기본구상도(안)	131
〈그림 4-12〉 북방·심해해역권의 이용현황도	133
〈그림 4-13〉 북방·심해해역권의 기본구상도(안)	135
〈그림 4-14〉 청정·평화해역권의 이용현황도	136
〈그림 4-15〉 청정·평화해역권의 기본구상도	138
〈그림 4-16〉 내륙해양영토권의 기본구상도	139
〈그림 4-17〉 연안·해양가치가 살아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안)	141
〈그림 4-18〉 해양 국제교류도시 조성·육성 추진 (안)	142
〈그림 4-19〉 항만배후지역 자유무역지대 확대 설정	144
〈그림 4-20〉 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의 지식 허브화	149
〈그림 4-21〉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역수산 성장거점화	150
〈그림 4-22〉 지역 수산시장의 활성화	151
〈그림 4-23〉 해양수산 관련 스타트업 예시	156

요 약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지역의 지속적 발전 여부는 노동력과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존한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 노력은 국가 주도의 지역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던 정책 이행결과의 반성과 지역발전의 한계를 지역 스스로 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연안·해양은 국가의 고도성장을 이끈 핵심공간이다. 연안·해양 지역에 전국 인구의 32.9%(17년), 전체 제조업종사자수의 45.7%(15년)가 분포해 있고, 연안 지역의 도시화율은 90.7%(17년)에 이른다. 연안·해양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해양수산업은 위축되었고, 연안·해양공간의 질은 저하되었으며, 지역 해양수산 자원의 관리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항만물류, 수산, 해양과학기술, 해양안전·안보, 해양관광·레저, 해양환경·생태 등의

분야에서 세계 12위권의 해양국으로 성장했으나, 국가 해양수산의 정책성과가 지역의 해양수산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최근 들어 해양수산 경제의 중요성과 지역혁신성장이 국가정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해양수산에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을 지식·기술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으로 전환해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꾀하고 있다. 연안·해양의 11개 시·도는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조례 제정, 종합발전체계 수립과 해양수산 전담조직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있다.

부산시는 해양혁신성장의 거점으로 STEM 빌리지, 해운항만 지식 서비스산업 기반 확충, 스마트 수산혁신,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등을 통해 동북아 해양수도로 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한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조성 사업과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항만물류체계 정비, 항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해양조선 플랜트 기술과 산업역량을 융·복합한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해 해양레저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양레저 엔진, 보트제조·판매, 마리나 등과 관련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 충남도는 어항·어촌을 지역경제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 전통 해양수산업을 해양치유·관광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지식·기술집약적 산업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과 재정계획을 마련하였다. 전북도는 새만금산업으로 축소된 해양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고의 내수면 어

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과 새만금 수상 태양광 조성과 해상풍력 실증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최대 수산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ICT 기반 첨단양식과 어장과학관리 기반의 수산재해 대응사업 등을 추진하고, 해양관광·힐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요트마린 실크로드 사업’, ‘순천만 등 갯벌 문화유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패류양식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생산·가공·위생·유통·수출 통합형 패류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 해양항노화산업과 친환경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 산업의 고도화, 제주 수산가공산업의 창업과 투자지원 등을 위한 수산혁신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살아있는 인류문화유산인 해녀문화의 보전·전승을 위해 세계 유일의 해녀메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경북도는 지역에 집적해 있는 해양과학기술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포항항 구항에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철강도시에서 신해양산업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도는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명태·다시마 자원 회복, 오징어 등 회유성 어족자원 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핑 해양레저특화지구 지정을 통해 서핑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마린워킹 등 다양한 해양레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은 주도적으로 스마트항만·물류산업, 수산생명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첨단양식업, 해양관광·레저산업, 해양첨단제조업, 해양법률·금융서비스업, 해양에너지산업, 해양생태산업, 해양문화산업, 해양수산 클러스터 조성 등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의 추진은 민간수요를 기반으로

한 내생적 지역발전요인을 발굴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스스로 끌어 올리고 안정적인 지역발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은 스스로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는 지역을 제도적·재정적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역의 협력형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해양수산부와 시·도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 해소와 지역의 혁신사업 기획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사업에 관한 지속적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앙부처간의 협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광역단위의 해양경제권을 설정해 해양수산부와 시·도, 시·군·구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할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발굴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는 해양수산을 비롯한 연안·해양지역에 적용되는 중앙부처의 사업과 시·도 해양수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지역 혁신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의 규제개혁이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혁신역량과 경험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양지역의 특성과 발전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의 혁신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연안·해양, 국가 고도성장의 핵심공간으로 활용

■ 연안·해양, 국가 경제발전과 국가 해양력 증진에 크게 기여

- 연안지역은 전국 인구·경제 규모의 1/3를 차지하고, 도시화율은 90.7%, 제조업특화지수는 1.41로 국가 경제발전의 핵심공간으로 활용
 - 연안지역 인구¹⁾는 17,021.8천 명('17년), 전국의 32.9%이고, 지역내총생산은 587조 원('15년), 전국의 37.5%를 차지함
 - 연안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17년 기준 각각 64.4%, 62.9%로, 전국(63.4%, 61.4%)보다 높았고, 등록 외국인인 연안지역에 전체 37.1%가 분포해 있음

〈표〉 전국·연안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비교

구분	인구 (천명, 17년)	도시지역 인구 비율 (%, 17년)	지역내 총생산 (조원 15년)	제조업 종사자수 (15년 천명)	산업 다양성 지수 (15년)	등록 외국인수 (천명, 17년)
전국	51,778.5	91.8	1,565.2	4,043	10.1	1,717.7
연안	17,021.8	90.7	587	1,847.2	7.9	434.4
연안/전국(%)	32.9	-	37.5	45.7	-	37.1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08.21.)

- 산업다양도 지수²⁾는 전국은 10.1인데 비해 연안지역은 7.9로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산업다양성이 낮았고, 연안지역에 제조업이 특화(제조업 LQ 1.41)되어 있음

1) 연안·해양 인구통계는 연안에 접한 55개 시군(부산시, 인천시, 울산시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에 속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산업다양성지수는 특정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산업이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산업다양도 지수가 높일수록 산업 간 교류와 연계 등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증진할 수 있음.

- '15년 기준, 전사업체종사자수의 32.5%, 전체 제조업종사자수의 45.7%로, 연안지역에 분포할 정도로 제조업이 특화되고 있고, 일자리와 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공간임
- 1996년 해양수산통합행정체계가 마련된 이후³⁾, 우리나라는 해양·연안관리, 수산·어촌, 해운·해사, 항만,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레저 등에서 많은 성과가 이루어 세계 12위권의 해양국가로 성장하였음
-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연안·해양의 세계경쟁력은 성장하는 추세이나, 해양수산 정책·사업이 사업·기능 위주로 이행됨에 따라 연안·해양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음
- 해양수산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 산업의 6.4%를 차지하고, 이중 조선업은 37.1%, 수산업 13.5%, 해운항만물류업 12.5% 순으로 차지함
 - 연안·해양지역에 집적된 조선산업은 국내 수출·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를 차지하고, 국내항만의 화물처리실적은 15억 7,434만 톤('17년)으로 2009년 이후에 증가추세임
 - 어업생산금액은 7조 4,216억 원('17년), 수산물가공생산액은 5조 9,167억 원('17년)을 차지하나,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증가하는 데 반해,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임
 - '17년 기준 해양레저·관광 이용객은 580만 명으로, 해양레저·관광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음

3) 13개 부처로 분산되어 있던 해양행정을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1996년 8월에 출범하였음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 수산자원관리, 해양안전, 해난심판, 공유수면 매립·관리, 해양환경보전,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해양자원 개발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행정을 통합관리 수행(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통합 행정 20년사, 2016, p.39)

■ 전통적 해양수산업의 위축과 연안·해양공간의 질(質) 저하

- 연안지역의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는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나, 수산업, 선박제조·수리업, 해운업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위축과 발전시설·산업단지, 항만의 입지 등으로 연안·해양환경의 질 저하
 - 연안 고령화지수는 '17년 기준 108.2로 전국(104.8)보다 높았고, 독거노인가구 비중도 12.7%로 전국(7.0)보다 높게 나타났고, 재정자립도('18년)는 전국 53.4%에 비해 연안지역은 27.2%에 불과함
 - 어가인구는 '17년 기준 121.7천 명으로 최근 5년간('12~'17년) 4.48%P씩 감소하였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난류성 어종(멸치, 갈치 등)은 증가하였으나,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감소 추세
 - 선박 및 보트건조업과 해상운송업의 전사업체종사자수는 '16년 기준 각각 132,258명, 18,064명이고, 최근 5년간('11~'16년) 연평균 각각 1.72%P, 2.63%P씩 감소하였음
 - 육지부해안선 중 자연해안선 비율은 48.6%이고, 연안습지는 2003년에 비해 63km² 감소하였고,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는 심각한 수준임

〈표〉 연안·해양의 사회경제적 변화

구분	고령화지수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천톤)	어가인구 (천명)	전사업체종사자수 (명)	
				선박 및 보트건조업	해상운송업
12년	79.7	1,091.0	153.1	('11년) 144,273	('11년) 20,644
17년	108.2	926.9	121.7	('16년) 132,258	('16년) 18,064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08.21.)

연안 지역 간 불균형 발전과 지역별 해양수산 발전역량의 차이

■ 연안 지역 간 사회경제적 발전과 삶의 질 수준에서 큰 격차

- 전체 연안인구 중 38.6%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37.2%가 인천·경기·충남지역에 집중해 있었고, 부산 인구밀도는 4,507.1인/k㎡로 가장 많았고, 강원 인구밀도는 135.3인/k㎡로 가장 낮았음
- 최근 5년간(12~17년) 인구증가율이 높은 지역 경기, 충남, 제주지역은 유입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높았고,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경북지역은 유출인구와 노령인구 비율이 높았음
- 연안 지역내총생산 중 42.6%가 인천·경기·충남에, 35.3%가 부산·울산·경남에 집중되어 있었고,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인 인천, 울산, 경기, 충남 등에서는 산업다양도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연안지역의 등록외국인수는 경기도에 37.3%를 차지함
- 재정자립도는 부산, 인천, 울산, 경기 등 대도시권 지역과 강원, 전북, 전남 등 비도시권 지역과의 격차가 컸음

〈표〉 연안 지역별 인구·경제·산업·재정 수준 격차

구분	인구 비중 (17년, %)	지역내 총생산 (15년, 조원)	제조업 특화지수 (15년)	산업다양도 지수 (15년)	등록 외국인수 비중(%)	재정자립도 (18년, %)
부산연안	20.4	78.2	0.8	10.3	9.9	58.7
인천연안	17.3	75.7	1.3	8.5	14.4	67.0
울산연안	6.8	69.7	1.8	6.0	4.7	66.0
경기연안	15.6	111.4	2.4	4.1	37.3	53.5
강원연안	3.0	12.9	0.4	10.4	1.3	18.9
충남연안	5.7	63	1.9	5.9	7.7	27.6
전북연안	2.8	15.1	1.3	8.4	2.0	17.4
전남연안	9.2	56.1	0.8	10.5	5.7	18.2

구분	인구 비중 (17년, %)	지역내 총생산 (15년, 조원)	제조업 특화지수 (15년)	산업다양도 지수 (15년)	등록 외국인수 비중(%)	재정자립도 (18년, %)
경북연안	5.1	30	1.6	6.8	4.2	22.3
경남연안	10	59.6	1.2	8.8	7.9	24.8
제주연안	3.9	15.4	0.2	10.0	5.0	42.5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08.21.)

-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율은 고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진 인천(28.9%), 경기(29.4%), 울산(31.2%)에서 낮게 나타났고, 강원(69.1%), 제주(60.3%), 경북(58.6%)은 자연해안선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사회적으로 자연환경의 질과 힐링, 행복 등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짐에 따라, 연안·해양의 자연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속가능 발전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됨.
- 연안지역 간 삶의 질 격차는 크게 나타났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독거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율과 인구 10만 명당 자살율이 높게 나타났음
 - 독거노인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많은 연구에서 고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분석되고 있음
 - 연안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보건 등에 관한 포용적 균형발전 정책수립이 시급함
 - 하수도보급율의 경우, 경북(63.1%), 충남(65.5%), 전남(66.3%), 전북(71.3%) 순으로 낮게 나타나 지역 간 환경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났음 이 지역들은 어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육상하수가 직접 바다로 유입될 경우 해양환경 오염에 원인으로 작용함

〈표〉 연안 지역별 사회·환경·건강의 수준 격차

구분	육지부 자연해안선 비율 (17년, %)	하수도보급율 (16년, %)	독거 노인가구 비중 (17년, %)	비만율 (17년, %)	인구 10만명당 자살율 (17년, 명)
부산연안	43.5	99.1	8.1	25.8	26.3
인천연안	28.9	97.5	5.4	29.8	24.0
울산연안	31.2	99.0	4.9	26.7	24.4
경기연안	29.4	88.8	4.2	30.2	24.2
강원연안	69.1	87.9	11.5	31.1	31.2
충남연안	49.0	65.5	10.9	29.5	35.0
전북연안	40.4	71.3	16.5	29.7	36.0
전남연안	51.0	66.3	16.9	28.6	27.2
경북연안	58.6	63.1	13.5	29.0	26.5
경남연안	45.5	80.4	13.0	28.2	23.7
제주연안	60.3	92.4	6.4	29.5	26.7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공표자료(2017),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0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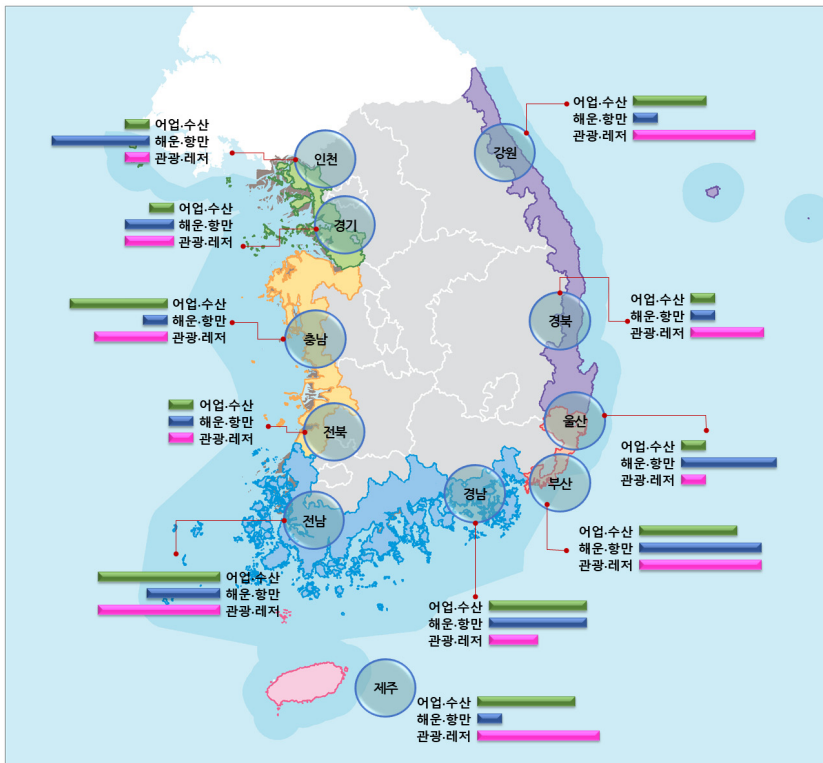
■ 연안 지역별로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 발전기반 역량 등에서 차이

- 시·도별로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부문의 9개 지표를 활용해 지역별 특화기반 역량을 비교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어업·수산부문에서는 전남, 경남, 제주, 강원, 충남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었는데, 어업생산은 전남, 경남, 제주 등이, 수산가공에서는 부산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
- 해운·항만부문에서는 항만과 국가산단, 조선단지 등이 위치한 부산, 울산, 인천 등이 상대적 우위를 점했고, 해상운송에서는 부산이, 선박·보트건조업은 울산, 경남, 전남이 상대적 우위를 점함

- 관광·레저부문에서는 바다·섬·해변 등 자연자원이 풍부한 강원, 제주, 부산, 전남, 경북이 상대적 우위를 보였고, 해수욕장이용객은 부산, 강원, 충남 등의 해변을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으로 부산이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에서 발전기반 역량이 집중됨에 따라 부산 외 지역 간의 발전기반 역량에서 큰 격차를 보였음

〈그림〉 시·도별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기반 역량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시·도, 해양수산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체제 정비 추진

■ 연안 11개 시·도는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전담조직 확대·정비 추진

- 시·도에서는 지역의 해양수산 자원과 공간의 종합적 활용, 해양수산 전통·신산업 육성, 해양수산 관련 자치 권한 강화 등을 위한 자체적으로 해양수산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역에 맞는 해양수산 비전 제시
 - 부산과 제주는 해양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이행에 관한 법제도 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
 - 강원과 경북은 환동해 지역발전과 해양수산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동해본부를 설치하였고, 울산, 충남, 전남 등에서는 지역 해양수산행정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확대 개편하였음
- 시·도의 해양수산 발전계획과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지역 해양수산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연안 시·도의 해양수산 관련 종합계획 추진과 전담조직 현황

구분	해양수산 관련 종합계획 (수립년도)	비전 및 기본방향	전담조직
부산	제2차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16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해양농수산물국
인천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17년)	시민에게 열린바다, 미래세대를 위한 인천	해양항공국
울산	해양수산발전 종합계획 (추진 중, 2019년 상반기 수립 완료 예정)	글로벌 신해양도시, 해양신산업 도시, 지속가능한 연안도시	일자리경제국

구분	해양수산 관련 종합계획 (수립년도)	비전 및 기본방향	전담조직
경기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12년)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新경기해양	농정해양국
강원*	2040 강원비전 (17년)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환동해본부
충남	해양수산발전계획 (15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	해양수산국
전북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17년)	바다의 힘, 전북	농축산식품국
전남	제3차 해양수산발전계획 (15년)	살고 싶고 소득 높은 어촌 건설	해양수산국
경북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 (14년)	바다의 시대 개막으로 해양경북 실현	환동해지역본부
경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중)	수산업·수산물, 항만물류, 어촌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해양수산국
제주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 (14년)	제주바다, 세계 해양도시를 품다!	해양수산국

주 : * 강원은 '2040 강원 비전'에 해양수산 부문을 포함하여 작성

자료 : 시·도의 관련 계획을 저자 정리

■ 국가 해양수산 관련 정책·사업은 여전히 기능적·부문적 이행방식 적용

-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해운항만산업, 혁신형 해양수산업, 연안·어촌, 해양환경·생태 등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 기반의 정책이행체계는 미흡함
 - 지난 20년간 국가 해양수산 정책 이행으로, 해양경쟁력을 올리는데 성과가 있었으나, 그 성과가 지역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항만·수산·어촌·해변·갯벌·도서·해양관광 등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정책과 지역의 해양수산발전 체계와 연계 구조가 미흡함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 토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최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에서는 해양수산 부문의 발전전략 · 과제가 확대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을 통해 국토와 해양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수산 · 어촌의 혁신성장을 통한 어촌조성을 목표로 어촌 소득 · 복지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혁신성장 도모, 수산물 유통 · 가공 · 수출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 수산산업 육성을 제안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⁴⁾에서는 “계획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중심으로 하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을 고려한다고 밝히면서 해양 · 섬 · 산지 등 국토 경계지역과 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명시

〈표〉 해양수산부의 지역 활성화 관련 주요정책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어촌뉴딜 300	- 30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 추진
항만 지역 활성화	-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 항만거점개발, 항만·도시 지역 통합개발, 노후·유휴항만의 재생사업 추진 등
수산혁신	- 동·서·남해안 거점지역의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수산물 가공클러스터 조성,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마리나·크루즈·수중레저·해양치유 산업 육성, 어촌관광 활성화, 해양레저관광공간 조성,
해양환경·생태 보전·복원	- 특별관리해역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이행, 항만도시의 미세 먼지 저감 대책 마련 - 갯벌복원사업 추진, 해양보호구역 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를 저자 정리

4)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 국토계획연구단, 2018)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별 계획안에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

시·도 주도로 해양수산 현안 해소와 지역혁신사업의 발굴·추진

■ 부산, 해양과학기술 STEM 빌리지, 스마트 수산혁신, 북항 통합 협력 개발 등 추진

- 부산시는 지역에 집적된 해양·항만·수산·관광·해양과학기술과 금융·문화·교육·글로벌 네트워크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최대한 연계·활용한 다양한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⁵⁾을 마련·추진하고 있음
 - 부산시는 동삼해양혁신지구⁶⁾에 해양과학기술 STEM⁶⁾ 빌리지를 조성해 해양 신산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스마트 수산혁신체계를 구축해 해양생태·수산자원 관리, 스마트 양식, 수산식품의 글로벌화, 해운·항만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은 4개 혁신지구⁷⁾와 연계하여 해양·금융·산업·관광·문화가 살아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참여 정책모델로 추진함
 - 부산시는 해양·항만·해양레저·수산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수산 자치권한 강화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규제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음

5)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역특화산업'은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 일자리와 창출·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말함(「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1의2, 제11조)

6) STEM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약자로, 해양 신산업의 연구개발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

7) 해양수산 동삼혁신지구, 금융산업 문현혁신지구, 공동주거지 대연혁신지구, 영화·영상 센텀혁신지구

■ 인천,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항만·공항·철도 연계물류체계, 해양문명도시 조성사업 등 추진

- 인천시는 해양과 도시의 통합적 계획·관리를 통한 해양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관문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공항·철도 연계 인프라 구축, 해양·항만의 자치권 확대 등을 추진함
 -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함께 유류 대형 곡물창고를 활용해 청년창업, 가상현실·드론 등 미래성장산업 지원, 문화·예술·쇼핑기능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인천항~배후단지~철도수송체계와 연계한 항만물류체계 정비와 항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서해5도 등의 섬발전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해양관광산업 육성을 추진하고자 함
 - 인천의 해양역사·문화 정체성과 자산 등을 활용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등 해양문명도시 조성사업과 해양철책선 제거, 해안변 시민 여가공간 조성사업 등 추진함

■ 울산,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북방물류산업 등 추진

- 울산시는 침체되는 조선·해양산업의 대체산업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해양플랜트 지식·기술·인력 등을 부유식 해상풍력시설 인프라로 활용하고, 북방경제 활성화에 대비한 북방경제협력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울산시는 플랜트 기술과 산업역량을 융·복합한 해양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1년에 사용이 끝나는 동해 가스전을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로 조성하고, 해중·해저 공간

은 수산양식·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

- 울산시는 북방물류산업 지원과 활성화를 통한 북방해양 경제협력의 거점을 조성하여 울산항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고래문화특구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연계한 어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복지 어촌건설사업을 추진함

■ 경기, 해양레저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관상어 생산, 해운·물류 청년 취업 등 추진

- 경기도는 수도권에 속해 있는 입지적 우위를 살려 해양레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창업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패류양식·관상어 생산단지 조성, 해운물류 청년 취업체계 마련 등을 추진함
 - 경기도는 해양레저·관광인프라를 활용한 ‘경기해양레저인력양성센터’를 건립해 해양레저 전문인력을 양성해 해양레저 엔진, 보트제조·판매, 마리나 등과 관련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음
 - 친환경 어업 패류양식 경쟁력 강화, 아쿠아팻랜드 관상어 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친환경 김양식어장과 수산식품 산업 지원체계 등을 추진함
 - 평택항의 화물유치와 항만산업화를 위한 해운·물류 전문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 강원,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 추진과 서핑레저특화산업 육성 등 추진

- 강원도는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를 통해 남북 공동의 수산자원 회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서핑 해양레저특화지구 지정, 서핑 서비스업 활성화와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함
 - 지속 가능한 남북교류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는 공동어로 조업, 명태·다시마 자원회복, 오징어 등 회유성 어족자원 보호, 동북아 크루즈 전진기지 등이 주요 내용임

- 전국 서핑업체의 58%가 강원 양양에 입지함에 따라, 이를 활용한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를 추진하여 레저인의 체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서핑특화산업 활성화를 추진함

■ 충남, 어촌·어항의 지역경제 핵심공간 조성 및 지식·기술 집약적 해양수산으로 전환 등 추진

- 충남도는 해양수산 자원과 공간을 지역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해양바이오·치유산업 등 해양 신산업 육성, 어촌산업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해양이용·개발수요가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해양공간의 통합관리 기반 구축과 항만·어촌·도서지역의 계획적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미래 해양도시 육성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함
 - 충남의 우수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치유·관광산업, 해양바이오 산업 등을 육성하고, 그간 개발로 훼손된 연안·하구·갯벌의 해양보호·복원사업을 추진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 ‘이야기가 있는 바다, 삶이 있는 바다’로 만들기 위한 해양역사·문화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고, 어촌·어항을 지역경제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어촌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함

■ 전북,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 등 내수면 산업과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등 추진

- 전북도는 전국 최고의 내수면 어업을 활성화하고, 새만금사업으로 축소된 해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도는 내수면 산업과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수면 양식의 마케팅 지원, 유통·가공·체험·관광 등 복합기능이 조화된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연계한 해양 신산업을 확대하고, 새만금 최대 수상 태양광 조성 및 서남해 해양풍력 실증단지 조성 등을 해양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추진함
 - 군산 근대문화역사~새만금~고군산군도~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 신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함

■ 전남, ICT 스마트 양식과 과학기반의 어장관리체계 적용,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 전남은 수산업과 식품산업, ICT 기술을 결합한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과학기반의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재해 대응체계 구축, 섬·갯벌 등 문화유산·생태복원사업, 소형 선박수리 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
 - 전남도는 국내 최대 수산생산력을 기반으로 수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등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수산식품 클러스터, 노후 양식장·간척지 등에 ICT 스마트 첨단양식과 어장과과학관리 기반의 수산재해 대응사업 등을 마련·추진함
 - 전남의 해양관광·힐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요트마린 실크로드 사업’, ‘순천만 등 갯벌 문화유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지역 조선산업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해 소형선박 해양테스트 기반 구축과 레저 선박 기자재 고급화 등을 위한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하고 있음

■ 경북, 해양과학기술 벨트 구축, 신해양·항만도시 육성, 울릉도의 에너지 자립섬 등 추진

- 경북도는 해양과학기술 R&D의 거점화, 항만·도시체계를 연계한 신해양산업도시로의 전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 대게·오징어 등 자원회복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경북도는 지역에 집적해 있는 해양과학기술의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신산업을 결합한 해양과학기술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포항항 구항에 항만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한 ICT 기반 해양산업 플랫폼 조성을 통해 '철강도시에서 신해양산업도시'로 도약을 추진함
 - 대게·오징어 등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강원도와 협력을 추진하고,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LNG 등 에너지안전클러스터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울릉도를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으로 개발하여 해양영토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함

■ 경남, 패류양식산업의 혁신성장, 해양항노화산업의 활성화, LNG 병커링 클러스터 등 추진

- 경남도는 패류산업 체계적 육성사업과 스마트양식을 추진하고, 해양항노화산업의 집중적 발전체계 구축과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한 LNG 병커링 클러스터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
 - 경남도는 패류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해역별·품종별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소규모 업체의 인프라를 구조화하여 생산·가공·위생·유통·수출 통합형 패류 양식산업 클러스

터를 조성하고자 함

- 경남도와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발전소 유희용지를 활용해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와 다기능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경남도는 첨단 해양항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해양치유·웰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한 LNG 병커링 클러스터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

■ 제주, 미래 전통 수산업의 육성, 해녀 문화유산사업, 해양관광 허브 도시 조성 등 추진

- 제주도는 전통 수산업의 미래화와 고도화, 해녀문화유산사업의 체계적 추진, 제주의 청정·공존 가치 유지를 위한 자연해안·해양환경 보전사업, 동북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화 사업 등을 추진함
 - 제주도는 전통 수산업의 1조 원 시대를 맞이해, 청정 수산물 유통·가공산업의 고도화, 제주 수산가공산업의 창업과 투자지원 등을 위한 수산혁신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음
 - 인류문화유산인 해녀문화의 보전·전승을 위해 세계 유일의 해녀메카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청정제주바다 지키기’ 제도를 통해 깨끗한 해안변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를 해양관광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과 남북 평화 크루즈라인 개설 등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크루즈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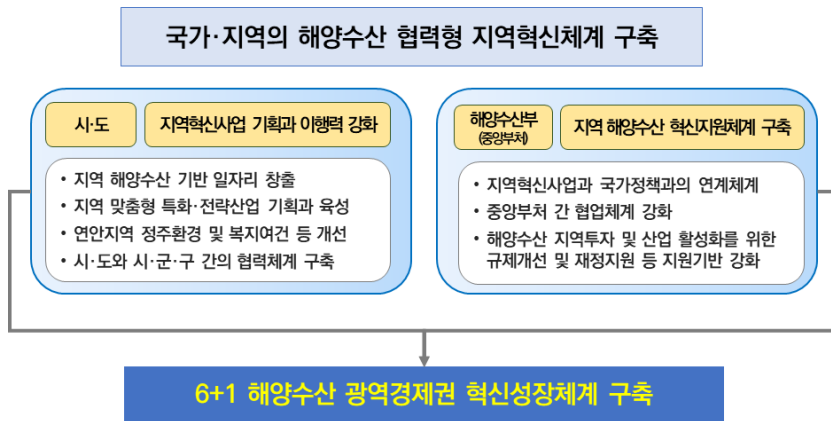
지역 주도의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 시급

■ 연안·해양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 필요

-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은 스스로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는 제도적·재정적 안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지역의 협력형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와 시·도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은 해양수산 혁신사업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사업에 관한 지속적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이행을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양의 동질성과 차이성에 기초한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해 해양수산부와 시·도간과 시·도간, 시·도와 시·군·구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양수산 등을 비롯한 연안·해양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중앙부처와 사업과 시·도 해양수산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 해양·연안권역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앙부처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허용하고, 지역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혁신역량과 경험을 길러야 함

- 연안·해양지역의 특성과 발전역량, 일자리·주거안전·복지·친수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의 연계 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그림〉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구축 기본방향



주: 저자 작성

■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설정을 통해 지역 해양수산 혁신성장 추진

-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은 해양의 개방성·동질성에 초점을 맞춘 상호협력 관계에서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 구축이 필요함
 -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 연안·해양의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통한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도약
 - 환황해연계해역권(충남·전북): 환황해 연계 해양신산업 거점지 육성과 해양생태벨트로 구축
 - 섬·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 전통적 수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

-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 · 울산): 해양수산과 지역고유산업의 융 · 복합화, 첨단화와 해양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해양수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상생발전 기반 구축
- 심해 · 북방해역권(경북 · 강원): 남북교류와 북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동해 경제권을 구축하고, 해양에너지 · 해양자원 개발 등 관련 해양에너지 · 과학벨트 구축
- 청정 · 평화해역권(제주): 제주 고유의 ‘섬’, ‘평화’와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 마련하고, 건강한 해양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청정 · 힐링 도시로 발전
- 내륙해양영토권(육상내수면): 내수면 수산 · 관광자원의 지속가능 관리 ·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강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추진

〈그림〉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기본구상(안)



주: 저자 작성

■ 연안·해양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 발굴 필요

- 연안·해양지역의 개방성, 고유성,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함
 -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정비, 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연안·해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중앙부처의 획일적 법령·계획 등을 개선하기보다는 연안·해양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간 연계구조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정책결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작은 사업이더라도 규제해소와 함께 근거법률 등을 개선하여 추진력을 확보해야 함

〈표〉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제안(안)

사업명	주요 내용
연안·해양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 지역 주도의 섬·해안 등의 고유생활양식(의식주), 전통어구·어업 등 해양생활유산, 항만·어항 등 해양근대산업유산 등의 보호·활용·지원 등을 위한 제도 마련 등
해양국제교류도시 조성·육성	-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교류와 협력 등을 위한 축적된 지역역량을 활용한 국제 해양지식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글로벌화 - UN해양법 및 해양수산 관련 국제법 연구와 소도서국을 비롯한 해양 개도국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해양국제교류 거점연구센터 설치
항만배후지역 자유무역지대 확대 설정	- (단기)항만법(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자유무역지역법상 스타트업 활성화 및 부가가치 물류활동 저해 규제조항 개정 - (장기) 자유무역지역을 근간으로 규제 프리의 동일 원칙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대'로 전환

사업명	주요 내용
지역맞춤형 해양관광· 섬관광	- 도서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도서접근시설·도서교통체계 개 선과 관광상품 등 개발 - 유선·도선사업의 활성화 추진과 도서관광 거버넌스 구축 등
바다·강의 어촌혁신과 어촌비즈니스의 확대	- 어촌비즈니스업 추진모델과 도시어촌·강어촌 등 종합적 어촌개발 체계 구축
해양과학기술 지식허브 클러스터 조성	-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개발특구 등 연계와 해양수산 기업 지원 등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 해양수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역수산 성장 거점화	-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과 어촌지역 발전과 연계발전 방안 - 수출전략형 수산가공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 수산식품 클러스 터 조성과 지역수산 성장거점으로 활용
지역 수산전통시장의 활성화	- 지역 수산시장의 위생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수산물보관· 처리시설의 현대화 추진 - 수산시장 실태조사와 지역 수산시장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 - 수산시장의 명품화와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민간주도의 첨단양식 활성화	- ICT 기술과 양식기술을 융합한 첨단 양식산업의 활성화 - 간척지 활용 첨단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 실시
도서지역의 대중교통화 사업	- 연안항·여객선박 등 국가기간교통시설로 지정 추진과 연 안해운의 대중교통화 추진 -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와 여객선 현대화 등 추진
연안지역의 통합재생체계 구축	- 낙후된 연안 원도심, 항만, 어촌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safety), 생태적으로 건강하며(ecosystem) 쾌적한(amenity) 연안지역을 조성 - 연안에 위치한 노후·유휴부지(폐조선소, 폐양식장, 노후항 만·어항 등)와 미준공 매립지 등 재활용 부지로 지정 및 사업화
연안 Startup 육성사업	- 연안지역의 우수한 발전 잠재력에 기반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기회 마련을 통해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 - 해양수산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규 제정보서비스 등의 일원화 추진

자료: 저자 작성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은 효율과 경쟁에서 혁신성장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지역의 지속적 발전 여부는 노동력과 토지 등 전통적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추진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전환 노력은 국가 주도의 지역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켰고, 조선,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의 위기로 이어졌던 정책 이행결과의 반성과 지역발전의 한계를 지역 스스로 넘겠다는 적극적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도성장기에 이루어진 연안·해양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 해양수산업은 위축되었고, 연안·해양공간의 질은 저하되었으며, 지역 해양수산 자원의 관리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

위권⁸⁾의 해양국으로 성장했으나, 국가 해양수산 정책성과가 지역의 해양수산발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즉, 국가의 세계적 해양수산 정책성과와 연안·해양 지역발전과의 연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해양수산 경제의 중요성과 지역혁신성장이 국가정책의 주요 화두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해양수산에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는 저성장의 고착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을 지식·기술집약적 해양수산 산업으로 전환해 지역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창업 활성화,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꾀하고 있다.

연안·해양지역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국가 해양수산 정책과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연계한 연안·해양지역 혁신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역간 협업체계를 통해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혁신사업을 발굴·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해양수산의 미래가치를 활용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해양수산 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통해 세계적인 국가·지역경쟁력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혁신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안·해양지역의 혁신성장의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연안·해양지역의 혁신성장 방향은 지역 특화 기반의 융·복합형 해양수산 혁신사업 기획·이행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활용의 방향과 연관된다.

연안·해양의 사업·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결집한 지역혁신체계

8) 해양수산부·ADL, 2006, p.43

를 구축해 국가발전 전략이 조화된 융합형 해양수산 발전정책 수립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지역 범위는 연안·해양에 접한 11개 시·도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연안·해양지역에 관한 자연환경, 사회경제, 해양수산 부문 등에 관한 여건을 진단하고, 시·도의 해양수산 특화도를 분석하였다. 국토·지역계획에서 해양수산과 관련된 지역사업을,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서는 지역계획·사업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시·도별로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사업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 지역혁신의 추진방향과 사업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연안·해양지역과 시·도의 해양수산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통계청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구, 지역경제, 삶의 질, 해양수산 부문 등과 관련된 통계를 수집·분석하였다. 그리고 국가·지역 차원의 해양수산 정책방향과 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생

산한 해양수산 관련 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시·도의 해양수산 관련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 등을 분석하였다.

시·도 해양수산의 지역 현안과 정책 등을 발굴하여 다차원적인 지역혁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해양수산 지역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시·도별 해양수산 현안 및 혁신 간담회를 개최·운영하였다. 그리고, 이 혁신간담회는 시·도의 담당 공무원과 시·도연구원과 함께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다.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 **地·中·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 ‘지역과 중앙이 해양으로 상생한다.’**
-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발전 동력과 지역 가치·역량을 연계한 신(新)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 해양수산의 열린 광장’으로 활용

〈그림 1-1〉 시·도 해양수산 현안 및 혁신정책 간담회 현장



〈제주 (18. 5. 16)〉



〈전남 (18. 6. 8)〉



〈충남 (18. 10. 9)〉



〈부산 (18. 10. 4)〉

주: 저자 촬영

제2장

시·도의 해양수산 여건 진단과 정책 분석

제1절 연안·해양지역의 여건 진단

1. 연안·해양의 자연환경

우리나라 전체 해안선은 14,962.8km이고, 육지부 해안선 7,752.5km 중 자연해안선은 48.6%, 인공해안선은 51.4%를 차지한다. 지역별로 보면, 육지부 해안선 중 자연해안선 비율이 낮은 곳은 인천연안이 28.9%, 경기연안 29.4%, 울산연안 31.2%이다. 우리나라 해역에 분포해 있는 도서는 유인섬 486개소, 무인도서 2,876개소이다. 유인섬 중 개발대상도서⁹⁾는 371개소, 무인도서 중 관리유형으로 지정된 도서는 2,291개소¹⁰⁾이다.

9)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10) 관리유형이 지정된 무인도서 중 이용가능무인도서 53.9%, 준보전무인도서 26.9%, 개발가능무인도서 12.7%, 절대보전무인도서 6.4% 분포(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현황(2018.6.25))

〈표 2-1〉 연안지역별 해안선 및 도서현황

구분	해안선 (km)	육지부 해안선		도서수(개소)		
		총길이(km)	자연해안선 비율(%)	유인도서		무인 도서
				유인섬	개발대상도서	
합계	14,962.8	7,752.5	48.6	486	371	2,876
부산연안	379.8	298.43	43.5	4	0	45
인천연안	1,078.8	388.38	28.9	41	32	111
울산연안	166.8	159.93	31.2	0	0	3
경기연안	260.1	217.56	29.4	4	4	41
강원연안	401.9	372.39	69.1	1	0	34
충남연안	1,242.0	808.08	49.0	37	24	236
전북연안	548.5	249.02	40.4	25	23	80
전남연안	6,743.3	2,682.25	51.0	276	215	1,744
경북연안	537.0	442.72	58.6	4	2	40
경남연안	2,512.8	1,718.19	45.5	85	63	484
제주연안	551.8	415.56	60.3	9	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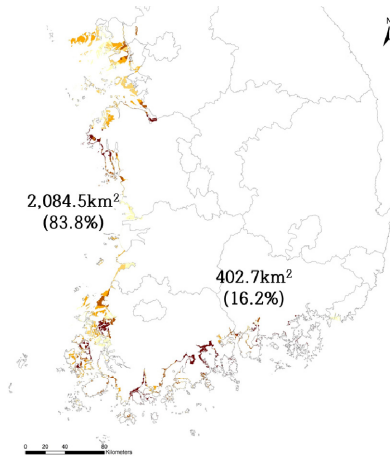
주: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한 2,631개 도서 중 330개소를 제외하고 2,291개소가 관리유형으로 지정(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현황(2018.6.25))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공표통계자료, 2017;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 2015; 국토교통부 2016 지적통계, 201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0호 개발대상도서 지정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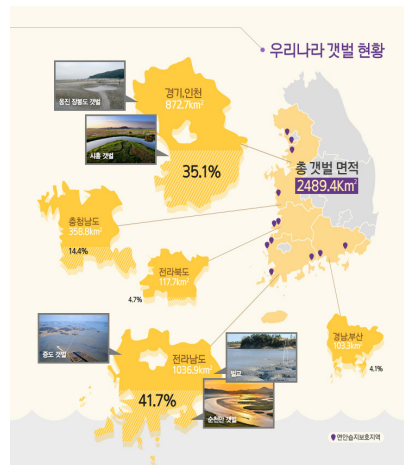
우리나라 연안습지 면적은 2,487.2km² 중 83.8%가 서해안에 분포하고, 서해·남해서부 연안습지에서 403종의 저서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¹⁾. 연안습지 면적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2003년에 비해 63km² 감소하였으나, 최근 갯벌복원계획이 수립되어 2023년까지 3km² 갯벌 면적과 3km 갯벌목질을 복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연안습지 중 강화, 가로림만, 증도, 순천만이 타 갯벌 지역에 비해 높은 생물다양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해양수산부(2014)에 따르면, 갯벌의 단위면적(1km²)당 연간 제공가치는 63억 원,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16조 원에 달하였다.¹²⁾

11) 해양수산부, 2015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2016

〈그림 2-1〉 갯벌 분포도



〈그림 2-2〉 지역별 갯벌 분포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기본조사, 2015, p.44; 바다생태 정보나라(검색일자 : 2018.03.04.)

기후변화의 영향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한반도 해역의 해수면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연안 자연재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2017)에 따르면, 1989~2016년간 해수면 높이의 평균 상승률은 2.96mm/yr로, 전체적으로 0.1mm/yr²의 가속도라고 밝혔고, 제주 주변해역의 해수면 상승이 가장 높았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10~15년) 자연재해 피해액은 3,920억 원으로 전국 피해액의 66%를 차지하고¹³⁾, 대부분 태풍에 의한 피해가 컸다.

12) 해양수산부, 2013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2014.

13) 행정안전부, 각 년도 재해연보를 참고하여 재정리

〈표 2-2〉 한반도 해역의 해수면 상승률과 가속화

지역	해수면 상승률	상승률의 가속화	세부지역
제주부근	4.55mm/yr	-0.10mm/yr ²	제주, 서귀포, 거문도
동해안	3.78mm/yr	0.17mm/yr ²	울산, 포항, 묵호, 속초, 울릉도
남해안	2.48mm/yr	0.13mm/yr ²	추자도, 완도, 여수, 통영, 가덕도, 부산
서해안	1.47mm/yr	0.11mm/yr ²	안흥, 군산, 목포, 흑산도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속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7. 12. 21일 보도자료

2016년 연안침식우심률을 보면, 동해안 8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서해안, 47.1%, 남해안 35.9% 순으로, 2015년과 비교하면 동해안은 10.3%가 증가했다.¹⁴⁾ 지역차원의 종합적 연안침식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관리구역을 지정하였는데, 맹방해변(강원 삼척시), 봉편해변(경북 울진군), 대광해변(전남 신안군), 원평해변(강원 삼척시), 금읍해변(경북 울진군), 꽃지해변(충남 태안군)이다.

우리나라의 해역수질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으로, 2017년 기준 해양환경측정망 425개 측정지점 중 85%가 해수수질지수(WQI)¹⁵⁾ II등급 이상으로 좋은 상태¹⁶⁾이고, 2013~2017년간 해수수질지수 I·II등급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5~2016년간 실시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따르면, 전체 126개 단위격자 중 1등급 권역은 44개(34.9%), 2등급 권역은 80개(63.5%), 3등급 권역이 2개(1.6%)¹⁷⁾로 나타났고, 연안·해양에 지정된

14) 연안 침식우심률은 전체 모니터링 대상지구 중 C, D등급에 해당하는 지구들의 비율을 %로 나타냄. 숫자가 클수록 해당 지역의 침식이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해양수산부, 2016년 연안침식실태 조사 종합보고서, 2016,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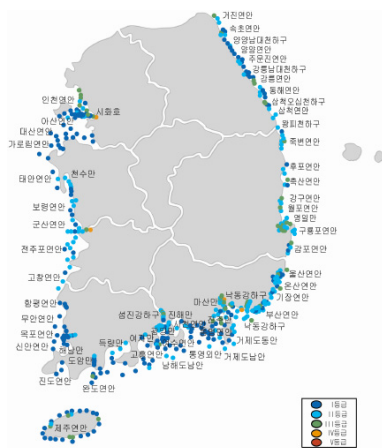
15) 해수수질지수(WQI, Water Quality Index)는 해수의 수질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용존산소 농도, 식물플랑크톤 농도, 투명도, 용존무기질소와 무기인 농도)로 산정한 수치로, I 등급(매우 좋음, WQI 23 이하), II등급(좋은 WQI 24-33), III등급(보통, WQI 34-46), IV등급(나쁨, WQI 47-59), V등급(아주 나쁨, 60 이상)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0호).

16)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2017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2018, pp.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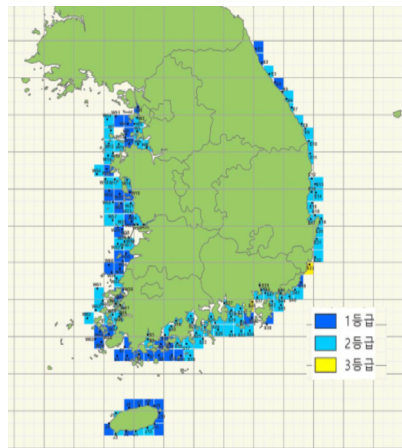
17)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2017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조사연보, 2017, p. 57

보호구역으로는 습지보호지역 14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3개소, 해양생물보호구역 1개소가 있다.

〈그림 2-3〉 생태기반 해수수질평가 결과



〈그림 2-4〉 해양생태도 등급분포



자료: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2017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2018, p.18;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2017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조사연보, 2017, p. 57

2. 연안·해양지역의 사회경제 여건

2017년 기준 연안인구¹⁸⁾는 17,021.8천 명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한다. 연안 인구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38.6%, 인천·경기·충남 37.2%, 전북·전남·제주 15.9%, 강원·경북 8.1% 순으로 분포해 있다. 연안 지역의 인구밀도는 519.4명/㎢로 전국 515.9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 순이동율¹⁹⁾은 0.18%로 연안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입인구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2017년 기준 경기,

18) 연안 인구통계는 연안에 접한 55개 시군(부산시, 인천시, 울산시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강원, 제주에 속한 시군)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말한다.

19) 순이동율(%) = (전입자수 - 전출자수)/주민등록연앙인구 × 100

강원, 충남, 제주는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인 반면, 부산, 인천, 울산, 전북, 전남, 경남은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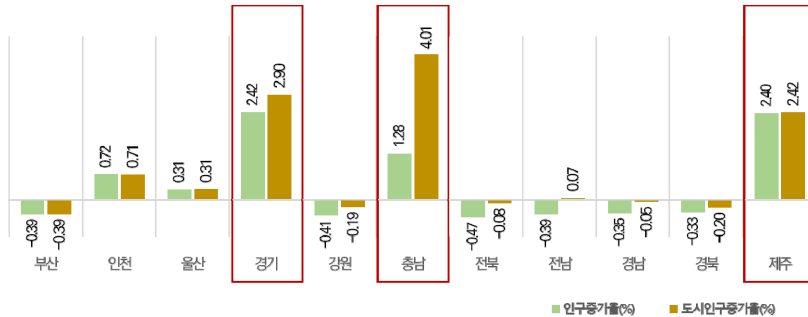
〈표 2-3〉 연안 인구의 특성(2017년)

구분	연안인구		연안 도시지역 인구비율(%)	인구밀도 (인/ km ²)	순이동율(%)
	천명	비율(%)			
연안	17,021.8	100	90.7	519.4	0.18
부산연안	3,470.7	20.4	100	4,507.1	-0.82
인천연안	2,948.5	17.3	97.5	2,773.5	-0.06
울산연안	1,165.1	6.8	99.8	1,098.0	-1.03
경기연안	2,662.1	15.6	93.6	1,546.4	3.17
강원연안	514.8	3.0	86.0	135.3	0.08
충남연안	974.4	5.7	67.1	250.7	0.99
전북연안	478.5	2.8	69.8	234.2	-0.59
전남연안	1,570.6	9.2	74.0	175.0	-0.59
경북연안	871.2	5.1	86.4	204.6	-0.60
경남연안	1,708.7	10.0	87.0	511.6	-0.99
제주연안	657.1	3.9	90.7	355.1	2.17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 8. 21)

최근 5년간(2012~2017년) 연평균 연안 인구증가율은 매년 0.47%p씩 증가하고 있었다. 이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제주인 반면, 감소지역은 부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이었다. 연안인구 중 90.7%는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도시지역 인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0.73%p씩 증가하였다. 현재 연안 인구증가율보다 연안 도시지역 인구증가율이 높았고, 경기(2.9%p), 충남(4.01%p), 제주(2.42%p)의 도시지역 인구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 최근 5년간(12~17년) 연평균 연안 인구증가율과 도시지역 인구증가율



자료: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통계, 2012와 2017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기준 연안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살펴보면, 유소년인구 13.4%, 생산가능인구 72.1%, 노년인구 14.5%로 구성되어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 인천, 부산, 경남 순이었다.

2017년 노령인구 비율이 유소년 인구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화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2012년에는 79.7이었던데 반해 2017년에 108.2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은 전북(181.7), 강원(170.6), 전남(163.6), 부산(144.3)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노령인구 비율이 유소년 인구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고령화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 2012년에는 79.7이었던데 반해 2017년에 108.2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노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은 전북(181.7), 강원(170.6), 전남(163.6), 부산(14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연안지역의 인구구조 특성 (2017년)

구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령인구(%)	노령화지수	
					12년	17년
연안	12년	15.1	72.9	12.0	79.7	108.2
	17년	13.4	72.1	14.5		

구분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노령인구(%)	노령화지수	
				12년	17년
부산연안	11.3	72.4	16.3	99.9	144.3
인천연안	13.4	74.9	11.7	61.5	87.4
울산연안	14.4	75.6	10.0	46.0	69.4
경기연안	16.1	74.4	9.5	45.2	59.2
강원연안	11.3	69.5	19.2	118.3	170.6
충남연안	14.5	67.5	18.0	103.2	124.0
전북연안	12.0	66.1	21.9	135.7	181.7
전남연안	12.6	66.8	20.6	122.7	163.6
경북연안	12.1	70.5	17.4	102.2	144.1
경남연안	13.8	72.3	13.9	70.8	100.2
제주연안	15.0	70.8	14.2	76.1	94.3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 8. 21)

2015년 기준, 연안 지역내총생산 587조 원으로 전국의 37.5%를 차지한다. 연안 지역내총생산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인천·경기·충남 250.1조 원(42.6%), 부산·울산·경남 207.5조 원(35.3%), 전북·전남·제주 86.5조 원(14.7%), 경북·강원 42.8조 원(7.3%) 순이다.

2017년 기준 연안 경제활동 참가율²⁰⁾은 64.4%로 고용률은 62.9%로 나타났다. 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수준보다 약간 높았고, 제주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높았고, 부산이 낮았다.

〈표 2-5〉 연안 지역별 경제 현황

구분	GRDP(조원) (15년)	경제활동참가율(%) (17년)	고용률(%) (17년)
전국	1,565.2	63.4	61.4
연안	587.0	64.4	62.9
부산연안	78.2	58.5	56.3

20) 경제활동참가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GRDP(조원) (15년)	경제활동참가율(%) (17년)	고용률(%) (17년)
인천연안	75.7	65.1	62.6
울산연안	69.7	62.0	59.9
경기연안	111.4	62.2	59.8
강원연안	12.9	59.9	59.0
충남연안	63.0	66.4	65.0
전북연안	15.1	62.5	61.7
전남연안	56.1	66.0	65.1
경북연안	30.0	65.7	64.4
경남연안	59.6	63.8	61.3
제주연안	15.4	69.5	68.1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 8. 21)

2015년 기준 연안 전사업체종사자수는 6,787.1천 명으로 전국의 32.5%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2010~2015년) 연평균 3.6%P씩 증가하였다. 연안 전사업체종사자수 중 부산에 20.2%, 경기도에 18.3%, 인천에 14.5%, 경남에 10.6%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6.16%P), 경기(5.33%P), 제주(4.29%P) 순으로 나타났다. 연안 제조업 종사자수는 전국의 45.7%를 차지하고, 최근 5년간 연평균 3.7%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안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기(31.2%), 인천(13.2%), 부산(12%) 순이고, 연평균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충남(7.54%P), 제주(5.34%P), 경기(4.74%P) 순이다.

〈표 2-6〉 연안 지역별 전사업체 및 제조업 종사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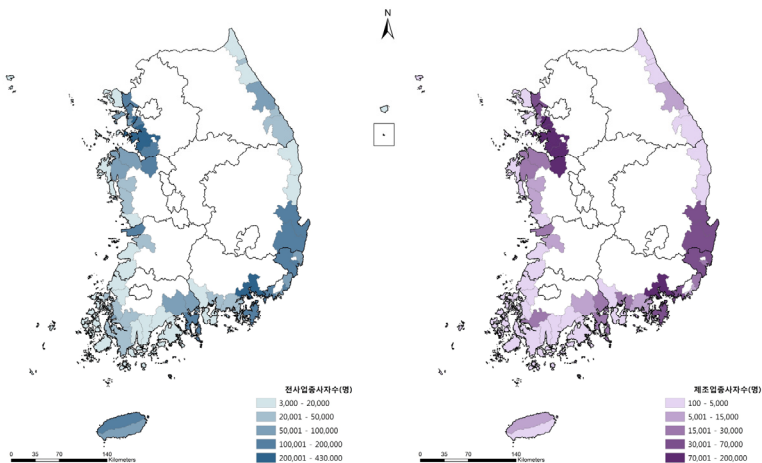
구분	전사업체종사자수(천명)			제조업종사자수(천명)		
	15년	비중(%)	10~15년간 연평균 증가율(%P)	15년	비중(%)	10~15년간 연평균 증가율(%P)
전국	20,889.3		3.43	4,043.0		3.42
연안	6,787.1	100(32.5)	3.60	1,847.2	100(45.7)	3.71

구분	전사업체종사자수(천명)			제조업종사자수(천명)		
	15년	비중(%)	10~15년간 연평균 증가율(% P)	15년	비중(%)	10~15년간 연평균 증가율(% P)
부산연안	1,371.8	20.2	2.63	221.0	12.0	2.66
인천연안	984.7	14.5	3.53	242.9	13.2	2.11
울산연안	519.5	7.7	3.65	184.7	10.0	4.50
경기연안	1,242.6	18.3	5.33	577.2	31.2	4.74
강원연안	192.7	2.8	2.44	15.1	0.8	3.33
충남연안	407.6	6.0	6.16	146.3	7.9	7.54
전북연안	176.7	2.6	2.89	43.3	2.3	3.83
전남연안	568.7	8.4	3.64	92.4	5.0	4.35
경북연안	350.1	5.2	1.88	83.0	4.5	3.00
경남연안	722.7	10.6	2.55	230.1	12.5	1.28
제주연안	250.0	3.7	4.29	11.1	0.6	5.43

주 : () 연안 종사자수 / 전국 종사자수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0년과 2015년 기준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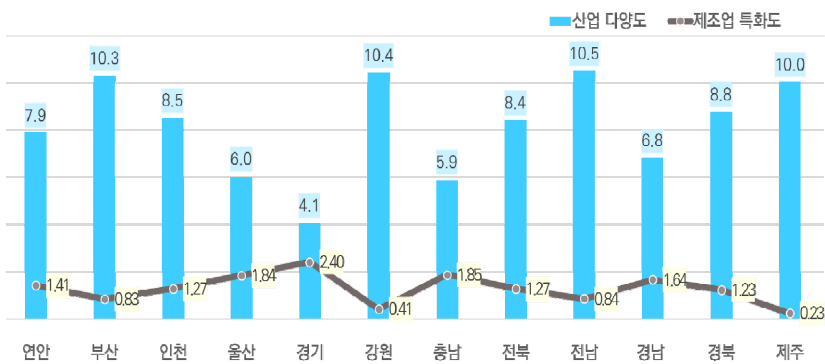
〈그림 2-6〉 연안 시·군 전사업체 및 제조업 종사자 수 분포(2015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2015년 기준, 연안 산업의 다양성 지수²¹⁾는 7.9로 전국 10.1에 비해 낮았고, 제조업 특화지수²²⁾는 1.41로, 산업적 다양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안 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기(31.2%), 인천(13.2%), 부산(12%) 순이었고, 산업 다양도가 높은 지역은 부산을 제외하고,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덜 집중된 전남, 강원, 제주 순이었다.

〈그림 2-7〉 연안지역의 산업 다양성 지수와 특화지수 (2015년)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년 기준자료를 활용해 저자 작성

연안 1인당 지방세(15년)는 1,056.3천 원, 재정자립도(18년) 27.2%, 재정자주도(18년) 65.3%이다. 연안 1인당 지방세는 전국 838.8천 원보다 높고, 연안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국보다 낮았으며, 지역간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1인당 지방세의 경우, 경기도는 1,642.8천 원인데 반해, 전북 770.7천 원으로 경기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연안 재정자립도 27.2%로 전국 53.4%에 비해 낮고, 울산 66%에

21) 김정홍 외(2010, p.82)는, “다양성 지수(diversity)는 1개 지역 내 관련 업종이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허쉬만-허핀달 지수의 역수 형태로 구함. 다양성 지수(DI)가 높을수록 지역경제의 특정업종에 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산업활동이 지역 내 분포함에 따라 산업 간 지식의 확산 및 교류 등에 의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지역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다.” 하였음.

22) 특화지수는 특정지역에 특정산업이 특화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입지계수를 활용함

비해 강원은 18.9%에 불과했다. 연안 재정자주도²³⁾는 65.3%로, 연안 지역간 재정역량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2-7〉 연안 지역별 재정 현황

구분	1인당 지방세 (15년, 천원)	재정자립도 (18년, %)	재정자주도 (18년, %)
전국	838.8	53.4	75.3
연안	1,056.3	27.2	65.3
부산연안	1,361.7	58.7	68.3
인천연안	1,098.7	67.0	77.3
울산연안	1,509.2	66.0	76.0
경기연안	1,642.8	53.5	70.0
강원연안	832.7	18.9	66.5
충남연안	1,266.8	27.6	65.7
전북연안	770.7	17.4	59.4
전남연안	805.9	18.2	62.5
경북연안	1,191.5	22.3	65.0
경남연안	1,032.3	24.8	63.8
제주연안	1,442.2	42.5	74.8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 8. 21)

연안·해양지역에 전체 등록외국인 중 37.1%가 체류하고 있고, 최근 5년간(2012~2017년) 6.1%P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연안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²⁴⁾은 434.4천 명으로, 전체 37.1% 차지하고 최근 5년간(12~17년) 연평균증가율은 6.1%로 전국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경기 37.3%, 인천 14.4%, 부산 9.9%, 경남 7.9% 순이었고,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은 제주 19.95%P, 경북 7.6%P, 충남 7.38%P 순이었다.

23)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이용 재량권을 말함.

2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2017년 기준, 독거노인가구²⁵⁾비율을 보면 전국 7%에 비해 연안이 12.7%로 높게 나타났다. 전남 16.9%, 전북 16.5%, 경북 13.5%, 경남 13% 순으로 고령화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독거노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비만율²⁶⁾은 29.2%로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더 높았다. 연안지역의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17년 기준 28.3명으로, 전북 36명, 충남 35명, 강원 31.2명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8〉 연안 지역별 등록외국인수와 독거노인가구 비율

구분	등록외국인(17년)			독거노인 가구비율 (17년 %)	비만율 (17년 %)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 (17년, 명)
	명	비중(%)	12~17년간 연평균증가율 (% P)			
연안	434,442	100(37.1)	6.1	12.7	29.2	28.3
부산연안	42,837	9.9	4.1	8.1	25.8	26.3
인천연안	62,596	14.4	5.8	5.4	29.8	24.0
울산연안	20,513	4.7	1.3	4.9	26.7	24.4
경기연안	161,960	37.3	7.2	4.2	30.2	24.2
강원연안	5,600	1.3	6.2	11.5	31.1	31.2
충남연안	33,262	7.7	7.4	10.9	29.5	35.0
전북연안	8,810	2.0	4.2	16.5	29.7	36.0
전남연안	24,824	5.7	5.9	16.9	28.6	27.2
경북연안	18,032	4.2	7.6	13.5	29.0	26.5
경남연안	34,319	7.9	1.0	13.0	28.2	23.7
제주연안	21,689	5.0	19.9	6.4	29.5	26.7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 8. 21)

25) 독거노인가구, 전체 일반가구 중 혼자 살고 있는 노인가구의 비율 (65세이상 1인가구 수÷전체 일반가구 수)×100)

26)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가 25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3. 해양수산 산업·경제 현황

2014년 기준 국내 해양수산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 산업의 6.4%를 차지했는데, 국내 해양산업 부가가치액은 2014년 기준 86.8조 원으로 전 산업의 6.4%, 산출액 155.2조 원으로 전 산업의 4.4%를 차지하였다. 해양수산 산업 부가가치액 중 조선업이 3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산업 13.5%, 해운항만물류업 12.5% 순이었다.

〈표 2-9〉 2014년 해양수산 산업의 부가가치와 비중

구분	부가가치(억 원)	해양수산산업 내 비중(%)
국내산업 전체	13,548,553억 원	
해양수산 산업 전체	868,510억 원 (6.4%)	
수산업	116,938	13.5%
해양자원개발업	5,951	0.7%
해양건설업	41,958	4.8%
해운항만물류업	108,826	12.5%
해양수산기기·장비제조업	63,255	7.3%
조선업	321,778	37.1%
해양수산서비스업	76,464	8.8%
해양수산공공활동	60,306	6.9%
해양레저관광업	58,465	6.7%
해양환경업	14,569	1.7%

자료: KIMST, 「해양수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및 성장전망 분석」, 2016을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11~2020)」, 2017, p. 4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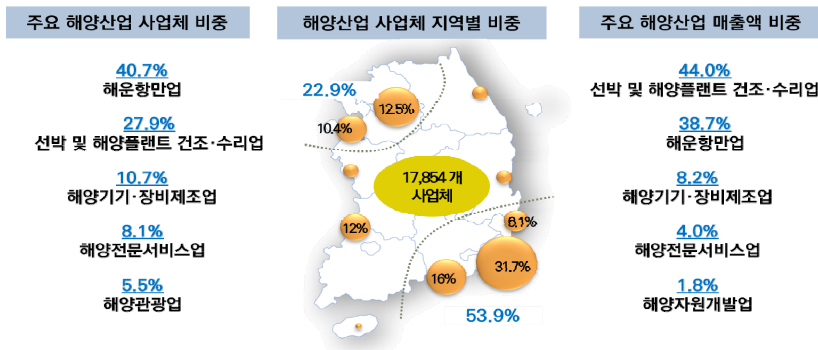
2016년 기준 해양산업 사업체 수는 17,854개, 매출액은 116조 9천 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해양산업²⁷⁾사업체 기준, 해운항만업(7,261개)

27) 해양산업 통계조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해양산업 5,257개 기업체를 표본으로 심층 조사 해양산업은 9개 분류(① 해양관광업 ② 해운항만업 ③ 해양건설업 ④ 해양자원개발업 ⑤ 해양환경관리업 ⑥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⑦ 해양기기·장비제조업 ⑧ 해양전문서비스업 ⑨ 해양공공서비스업)로 구분

이 40.7%로 가장 많았고,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27.9%, 해양기기·장비제조업 10.7% 순이었다. 해양산업 사업체 지역별 비중을 보면, 부산·울산·경남 53.9%, 서울·경인 22.9%, 전라권 12% 등 경인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해양산업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116조 9천억 원으로,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44.0%)과 해운항만업(38.7%)이 전체 해양산업 매출액의 80% 이상 차지하였다.

조선산업은 국내 수출 및 고용의 7%, 제조업 생산의 4% 차지²⁸⁾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제조업 고용 중 조선업의 지역별 비중을 보면, 울산 19.5%, 전남 16.3%, 경남 6.7%, 부산 2.5%, 전북 1.4% 순으로 울산과 전남에 집중해 있다.

〈그림 2-8〉 해양산업의 사업체와 사업체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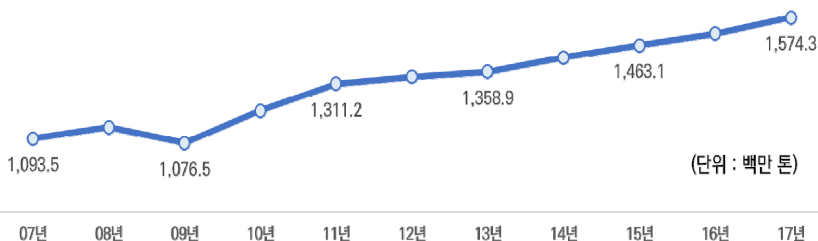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해양산업 통계조사, 2016년 기준) (검색일자: 2018.09.04.)

2017년 기준, 국내 항만의 화물처리실적은 1,574.3백만톤(RT)으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 처리실적을 보면, 부산항 25.5%, 광양항 18.6%, 울산항 12.9%, 인천항 10.5% 순이다.

28)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발전전략, 2018

〈그림 2-9〉 전국 항만물동량 처리현황



자료: e-나라지표(검색일자: 2018.08.21)

2016년 수산업 통계조사 결과, 수산업 사업체 종사자수 927.3천명, 수산업 매출액 65.8조 원 정도로, 종사자수 중 수산물생산업 509.3천명으로 가장 많고, 매출액 부문에서는 수산물 유통업 2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표 2-10〉 수산업 사업체 종사자수와 매출액(2016년)

구분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총계	927,328	65,896,332
수산물 생산업	509,307	10,942,141
수산물 가공업	63,782	10,802,367
수산물 유통업	134,306	29,002,784
수산여가 관련 서비스업	3,601	92,309
어선 및 낚시선박 건조업	63,492	4,216,151
수산 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9,438	1,569,502
어선, 낚시선박 및 수산 기자재 유통업	9,223	436,037
수산 관련 서비스업	134,179	8,835,041

자료: 해양수산부, 2016년 기준 수산업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017년 기준 우리 해역의 어업생산량은 3,273천 톤, 어업생산금액 7조 4, 216억 원으로, 전남지역이 어업생산량과 생산금액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산물가공생산 부문의 경우, 2017년 수산가공

생산량은 1,291.6천 톤, 수산물가공생산액은 5조 9,167억원으로, 수산물가공생산량과 생산액은 부산이 각각 27.1%, 23.7%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전남 26.4%, 22.9%를 차지하였다.

〈표 2-11〉 연안 지역별 어업 및 수산물가공 생산 현황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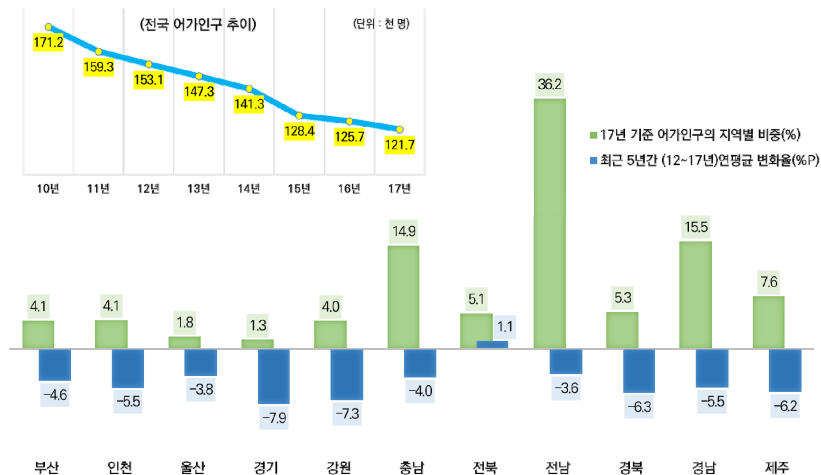
구분	어업생산량		어업생산금액		수산물가공생산량		수산물가공생산액	
	천톤	%	십억원	%	천톤	%	십억원	%
전국	3,273.0	100	7,421.6	100	1,291.6	100.0	5,916.7	100.0
부산연안	263.6	8.1	599.6	8.1	349.9	27.1	1,404.4	23.7
인천연안	21.1	0.6	170.8	2.3	13.3	1.0	103.3	1.7
울산연안	15.4	0.5	63.8	0.9	2.7	0.2	14.6	0.2
경기연안	26.0	0.8	76.9	1.0	84.2	6.5	519.9	8.8
강원연안	50.4	1.5	268.8	3.6	70.6	5.5	433.1	7.3
충남연안	163.0	5.0	505.8	6.8	58.3	4.5	299.5	5.1
전북연안	79.2	2.4	272.4	3.7	11.7	0.9	194.6	3.3
전남연안	1,844.9	56.4	2,695.5	36.3	340.7	26.4	1,355.1	22.9
경북연안	114.8	3.5	586.8	7.9	204.7	15.8	738.5	12.5
경남연안	601.1	18.4	1,258.7	17.0	125.3	9.7	590.0	10.0
제주연안	90.6	2.8	897.0	12.1	12.6	1.0	90.0	1.5
기타	2.9	0.1	25.7	0.3	17.7	1.4	173.7	2.9

주: 시·도 어업생산량은 연·근해어업, 천해양식어업, 내수면 어업 포함(원양어업은 제외), 기타는 대구, 광주, 세종, 충북지역에 해당

자료: 통계청, 2017년 어업생산동량조사결과(잠정),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통계, 2018

2017년 기준 어가인구는 121.7천 명이고, 최근 5년간(12~17년) 4.48%P씩 감소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전남 어가인구가 전체 36.2%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고, 경남 15.5%, 제주 7.6% 순이었다. 최근 5년간(12~17년) 어가인구의 지역별 연평균 변화율을 보면, 경기 어가인구가 연평균 -7.9%P씩 감소했지만, 전북은 1.1%P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전국 어가인구 추이와 지역별 어가인구 분포·변화율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2018. 8. 21)

2016년 기준 전국 어촌계수는 2,018개소, 구성원수는 138천 명, 호당 평균소득은 28,614.2천 원이다. 전남의 어촌계수가 848개소로 전체 42%를 차지하고, 경남 464개소 23%, 충청 163개소 8.1% 순으로 차지했다. 호당 평균소득을 보면 전남 32,614천 원, 부산 31,807.2천 원, 강원 31,796.9천 원 순이다.

〈표 2-12〉 연안 지역별 어촌계 현황

구분	어촌계수 (개소)	어촌계 구성원수 (명)				호당 평균소득 (천원)
		계	전업	겸업	피용	
합계	2,018	138,055	55,418	77,000	5,637	28,614.2
경인	110	9,900	3,976	5,780	144	25,704.5
강원	75	5,039	3,139	1,060	840	31,796.9
충청	163	15,362	5,182	10,025	155	29,518.9
전북	64	6,746	2,976	3,762	8	27,395.8
전남	848	51,622	18,753	31,105	1,764	32,614.8
경북	153	7,306	3,835	3,033	438	21,522.6

구분	어촌계수 (개소)	어촌계 구성원수 (명)				호당 평균소득 (천원)
		계	전업	겸업	피용	
경남	464	27,045	12,143	12,719	2,183	26,729.5
부산	41	3,456	2,890	483	83	31,807.2
제주	100	11,579	2,524	9,033	22	20,306.6

자료: 수협(내부자료), 「2016년 어촌계분류평정」, 2017.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양레저관광 이용객은 해수욕장(1억), 서핑(10만), 수중레저(108만), 카누·카약(1.5만) 등 580만 명으로 해양레저·관광수요는 매우 증가하고 있다.²⁹⁾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18)에 따르면 해양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해 2016년 343만 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⁰⁾ 지역별로 보면 경남 84만 명(24.6%), 충남 64만 명(18.6%), 전남 54만명(15.7%) 순이다.

〈표 2-13〉 해양레저·관광 주요 현황

구분	주요 내용
해양레저·관광 이용객	• 580만명 (낚시 700만명, 해수욕장 1억명, 서핑(10만명, 수중레저(108만명), 카누·카약(105만명))
마리나항만	• 34선석 (2,355선석), 거점형 마리나 6개소 조성(~22년) •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계획
크루즈관광객	• 크루즈 기항지 : 제주항, 서귀포 강정항(19년 개장),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속초항 • 16년 195만 → '17년 39만명 • 크루즈 체험단 확대 ('17년 100명→'18년 200명)
어촌체험마을	• 110개 운영 (131만명 방문, 방문소득 258억원) • 어촌·어항 관광거점(어촌체험마을 110개소, 어촌뉴딜 300개)

29)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2018. 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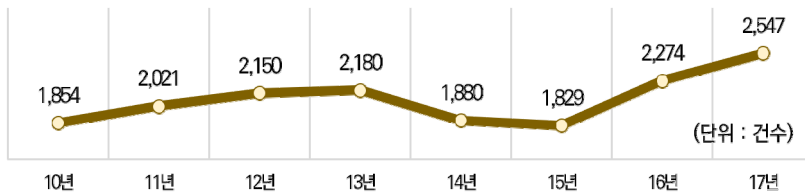
30) 홍장원 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양, KMI 동향분석69호, 2018. p.5

구분	주요 내용
해양관광이용경험	• 국내 6대 광역시 조사: 해수욕장 99%, 도서관광 45%, 해양레저 26%, 어촌마을 26%, 해양스포츠 21%
해양치유산업 육성	• 해양치유 협력 지자체: 충남 태안군, 전남 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 해양치유시범지구, 해양치유자원관리 설치 계획
기타	• 해수욕장 260개소, 해안누리길 53개 노선 등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2018. 7. 11 재정리

해역이용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역이용협의 2,547건으로 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역이용협의 유형 중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57.4%로 가장 많았고, 바닷물 인·배수 활용 18.1%이었다.

〈그림 2-11〉 연도별 해역이용협의 건수 추이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 2018. 2. 3

4. 시·도 해양수산 특화도 분석

1) 목적 및 방법

시·도의 해양수산 특화도를 알아보기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 부문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이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시·도의 특화 부문을 도출해 향후 연안·해양지역의 발전 방향 설정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표 2-14〉 연안·해양 지역별 유형분류 지표(안)

3개 분야	지표	자료
어업·수산	1.1 시·도의 어가인구 비율 (%)	농어업조사 (2017년)
	1.2 시·도의 어업생산액 비율(%)	어업생산동향 (2017년)
	1.3 시·도의 수산물가공금액 비율(%)	수산물가공업통계(2017년)
해운·항만	2.1 해상운송업 입지계수 (LQ)	전사업체조사(2015년)
	2.2 보관 및 창고업 입지계수 (LQ)	전사업체조사 (2015년)
	2.3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입지계수 (LQ)	전사업체조사(2015년)
해양관광·레저	3.1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 비율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2017년)
	3.2 해수욕장 이용객수 비율 (%)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2016년)
	3.3 숙박 및 음식점업 입지계수(LQ)	전사업체조사(2015년)

주: 저자 작성

2) 분석결과

(1) 어업·수산 부문

어업·수산부문이 특화된 지역은 전남, 경남, 제주, 강원, 충남이 상대적으로 특화 우위를 나타냈고, 경기, 인천, 울산 등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냈다. 전남은 어가인구와 1인당 어업생산액이 높게 나타나 어업생산이 높았고, 부산은 수산물가공 부문이 특화되었다. 제주와 충남은 1인당 어업생산액이 높게 나타났지만, 1인당 수산물가공업체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남은 어가인구, 1인당 어업생산액과 수산물가공업생산액 모두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수산물가공부문에서는 부산, 전남, 경북 등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2-15〉 시·도의 어업·수산 지표 현황

구분	어가인구비율(%)	어업생산액 비율(%)	수산물가공생산액 비율(%)
부산	4.1	8.1	23.7
인천	4.1	2.3	1.7

구분	어가인구비율(%)	어업생산액 비율(%)	수산물가공생산액 비율(%)
울산	1.8	0.9	0.2
경기	1.3	1	8.8
강원	4.0	3.6	7.3
충남	14.9	6.8	5.1
전북	5.1	3.7	3.3
전남	36.2	36.3	22.9
경북	5.3	7.9	12.5
경남	15.5	17	10
제주	7.6	12.1	1.5

자료: 국가통계포털(검색일자 : 2018. 8. 21)

(2) 해운·항만 부문

해운·항만 부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표적 항만·산업도시인 부산, 울산, 인천과 광양·여수 등 전남과 거제 등 경남이 상대적 높은 특화도를 보였다. 해상운송업 입지계수(LQ)는 부산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였고, 전남, 제주, 인천, 울산도 높게 나타났다.

보관창고업 입지계수(LQ)를 보면, 인천과 울산, 경기도가 높게 특화도를 보였다. 선박·보트건조업 입지계수(LQ)는 조선업이 발달한 경남과 울산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북, 전남에서도 입지적 우위를 보였다.

〈표 2-16〉 시·도의 해운·항만 지표 현황

구분	해상운송업(LQ)	보관창고업(LQ)	선박 및 보트 건조업(LQ)
부산	4.88	0.90	0.59
인천	1.14	1.44	0.02
울산	1.43	1.57	12.71
경기	0.11	1.49	0.01
강원	0.63	0.85	0.03
충남	0.68	0.61	0.05

구분	해상운송업(LQ)	보관창고업(LQ)	선박 및 보트 건조업(LQ)
전북	0.62	0.61	1.74
전남	3.05	1.03	5.07
경북	1.99	0.37	0.80
경남	0.75	0.88	13.15
제주	2.23	0.33	0.01

주: 통계청의 2015년 기준 전사업체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관광·레저 부문

시·도의 해양관광·레저 특화역량은 어촌체험마을, 마리나, 해수욕장, 크루즈 등 지역별 해양관광·레저자원의 분포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다. 어촌체험마을의 체험객수³¹⁾를 보면,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는데, 경기 중에서도 수상레저 체험과 바다 선상낚시가 가능한 전곡어촌체험마을에 많은 체험객이 방문하고 있었다. 어촌체험마을 개수는 전남과 경남이 많았으나 주로 갯벌체험 등 소규모의 이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체험객수는 적었다.

해수욕장 이용객수³²⁾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부산이 45%를 차지하고, 강원, 충남, 경북 순이다. 숙박 및 음식업의 입지계수를 보면, 제주, 강원, 경북이 높게 나타났고, 경기, 울산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17〉 시·도의 관광·레저 지표 현황

구분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 비율(%)	해수욕장 이용객수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 (LQ)
부산	1.2	45.0	1.07
인천	2.2	0.3	1.00
울산	0.7	2.2	0.92
경기	34.2	0.1	0.72

31) 2017년 기준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는 1,306,250명임(해양수산부 내부자료)

32) 해수욕장 이용객수는 지정과 미지정 해수욕장 이용객수를 합한 것으로, 2016년 기준 해수욕장 총 이용객수는 1억 4백여명임(해양수산부 내부자료)

구분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 비율(%)	해수욕장 이용객수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 (LQ)
부산	1.2	45.0	1.07
강원	13.5	23.5	1.72
충남	7.2	17.5	1.02
전북	12.1	0.3	1.04
전남	6.0	1.5	1.07
경북	1.8	5.3	1.23
경남	16.6	0.8	1.06
제주	4.4	3.4	1.88

주: 해양수산부 내부자료와 통계청의 2015년 전사업체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3) 시·도별 종합

시·도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산은 수산물가공업, 해운업, 해양관광 등에서 높은 특화를 보인 반면, 어가인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인천은 보관창고업에서는 높은 특화를 보인 반면, 어업생산과 선박건조, 해양관광 부문에서는 낮은 특화도를 보였다. 울산은 선박건조와 해상운송업, 보관창고업에서 높은 특화를 보인 반면, 어업·수산과 관광·레저 부문에서는 낮은 특화를 보였다.

경기는 보관창고업과 어촌체험마을 체험객수에서 높은 특화를 보였고, 어업·수산과 해운·항만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원은 해양관광·레저부문에서는 높은 특화를 보였으나 어업·수산과 해운·항만 부문은 전반적으로 낮은 특화를 보였다. 충남은 어업·수산 부문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특화를 보였고, 해수욕장이용객은 다른 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북은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 부문이 전반적으로 낮은 특화를 보였다. 전남은 어가인구와 어업생산, 선박건조 부문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어촌관광을 제외한 다른 관광·레저 부문은 상대적

종합적으로 부산은 어업·수산, 해운·항만, 관광·레저에서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특화를 보이는 등 다른 지역과의 해양수산 발전 기반 역량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The map illustrate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three industries in South Korea: Fisheries (green), Maritime Tourism (blue), and Recreation (orange). The regions are labeled with blue circles, and their respective industry strengths are shown by horizontal bars to the right of each label. The legend in the top right corner identifies the colors for each industry: green for Fisheries, blue for Maritime Tourism, and orange for Recreation. The scale bar indicates distances in kilometers (0, 100, 200 km).

Region	Fisheries (Green)	Maritime Tourism (Blue)	Recreation (Orange)
Jeonnam (전남)	Strong	Weak	Weak
Jeonbuk (전북)	Weak	Strong	Weak
Chungnam (충남)	Weak	Weak	Strong
Chungbuk (충북)	Weak	Weak	Strong
Seoul (서울)	Weak	Weak	Strong
Gyeonggi (경기)	Weak	Weak	Strong
Seoul (서울)	Weak	Weak	Strong
Jeonju (전주)	Weak	Weak	Strong
Jeollanam (전라남도)	Strong	Weak	Weak
Jeollabuk (전라북도)	Weak	Strong	Weak
Gwangju (광주)	Weak	Weak	Strong
Daegu (대구)	Weak	Weak	Strong
Busan (부산)	Weak	Weak	Strong
Ulsan (울산)	Weak	Weak	Strong
Gyeongnam (경남)	Weak	Weak	Strong
Gyeongbuk (경북)	Weak	Weak	Strong
Chollanam (충청남도)	Weak	Weak	Strong
Chollabuk (충청북도)	Weak	Weak	Strong
Sejong (세종)	Weak	Weak	Strong
Jeju (제주)	Weak	Weak	Strong

29 ↘

제2절 국가와 시·도의 해양수산 정책방향 분석

1. 국토·지역계획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 분석

전반적으로 국토·지역발전계획에 해양수산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은 부족한 편이었다. 국토·지역 등 발전계획에서 여전히 연안·해양지역별 발전방향은 국토 확장, 기존 국가기간산업 유지·발전 등에 주력하는 수준이었고, 국토, 지역개발, 농림축산, 환경 등 종합계획간 연계가 추진되고 있으나 연안·해양특성을 반영하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해양의 관리 및 지원체계 등을 고려하면 국가 해양수산정책 및 지역 해양수산자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2-18〉 주요 국가계획 중 연안·해양 지역발전 관련 주요 내용

구분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4~2018)	동·서·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2010~2020)
부산 연안	동북아 항만물류경제권, 해양문화·과학·생태 등의 중심지	원도심 재생, 북항재개발, 해양특화금융중심지 조성, 해양경제특구 조성	국제크루즈 기반조성 조선산업육성
인천 연안	해양물류산업과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명품 섬개발, 송도-영종-청라-검단 광역발전축 형성	인천항, 국제공항 등 물류 인프라기반과 BTMICE산업
울산 연안	자동차, 조선 등 다핵발전거점 육성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울산동부권 해양관광거점화	트라이앵글 산업권
경기 연안	해양물류산업과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국제물류·첨단산업축, 마리나해양관광지 활성화	국제비즈니스, 물류· 첨단산업 육성
강원 연안	환동해권 복합 교통물류거점 기반 구축	북방자원 물류벨트 구축 붉은대게타운 조성 등	환동해 국제물류·관광권
충남 연안	항만·물류기능 강화	서해안 국제교류· 해양관광축 내포신도시 조기 개발	국제관광·휴양산업 등 융 ·복합형 산업거점

구분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1~2020)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4~2018)	동·서·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2010~2020)
전북 연안	새만금권의 글로벌경쟁거점	새만금 국가성정거점 조성 첨단 농생명벨트 조성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
전남 연안	목포권의 해양관광 및 대중국 교역중심지, 광양만권의 국제적 산업· 물류중심지	물류·에너지·해양관광 흑산도 공항개발 및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	친환경 해양관광· 휴양단지 조성, 조선산업 육성, 해양바이오
경북 연안	해양과학·에너지산업과 해양관광산업 육성	환동해 해양산업벨트	동해 해양과학권 트라이앵글 산업권
경남 연안	조선·해양플랜트 발전거점 육성	나노융합, 로봇·기계, 조선 ·해양플랜트 벨트 조성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제주 연안	국제적 관광휴양지역화 및 고부가가치 해양산업 육성	해양생태관광지구, 휴양거주 청정환경단지 조성 등	-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2;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4~2018), 2014;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권종합계획(2010~2020), 2010에서 해당부문 발췌하여 저자 재정리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계획(2017)」에서 5대 국정목표 중
에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2018)에
서는 ‘분권’, ‘포용’, ‘혁신’을 3대 가치³³⁾로 정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
을 ‘지역 주도의 지역을 통한 국가적 문제해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
고 있다. 특히 혁신 부문에서 지역의 자립적 혁신역량 제고와 지역
유휴자원(산림·해양·문화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
도록 하였다.³⁴⁾

33)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분권은 지역주도 자립역량 축적과 지역맞춤형 문제해결, 포용은 헌법적 가치 실현과 지역내 균형발전, 혁신은 혁신역량 제고와 혁신성장을 말함.

34) 「국가균형발전법 개정(18.2.28)」으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위상 강화, 지역혁신위원회 등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 가동,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 포괄지원협약체 운영 등 추진

해양수산 부문과 직접 관련된 핵심과제와 실천과제는 ‘Ⅱ-1.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어촌 Ⅱ-1-5.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Ⅲ-3.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Ⅲ-3-5. 해양자원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창조’이다.

〈표 2-19〉 국가 균형발전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Ⅰ.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Ⅰ -1.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Ⅰ -2.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Ⅰ -3.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Ⅱ. (공간) 방방곡곡 생기는 공간	Ⅱ -1.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Ⅱ -2. 도시재생 뉴딜과 중소도시 재도약
	Ⅱ -3.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Ⅲ.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Ⅲ -1. 혁신도시 시즌2
	Ⅲ -2. 지역산업 3대 혁신
	Ⅲ -3.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자료: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2. 1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에서는 해양수산 부문 관련 전략·과제를 확대하고 있다.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에서는 수산·어촌의 혁신성장을 통한 어촌조성을 목표로 어촌 소득·복지 증대 및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혁신성장 도모,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산업 혁신을 통해 지역 수산산업 육성을 제안하였다.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역 재창조’에서는 연안지역 U자형 성장축을 통한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어촌·도서지역 재창조, 연안도시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개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을 제안하였다.

〈표 2-20〉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안) 중 해양수산 관련 과제(안)

과제 번호	해양수산 관련 실천과제	해양수산 부문 세부과제	
		세부과제	세세부과제
Ⅱ - 1-5	• 활력과 매력이 넘치는 어촌 조성	• 어촌 소득·복지 증대 및 지속 가능한 어업기반 조성	• 정주여건 개선 및 어촌특화산업 육성 • 어촌 복지망 확충 • 어업생산기반 정비
		• 고부가가치 스마트 양식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혁 신성장 도모	• 스마트 양식산업 활성화
		•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산업혁신을 통해 지역 수 산산업 육성	• 지역별 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 거점형 청정위판장 조성 •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 •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Ⅱ - 1-6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태양광·해상풍력·조력 ·파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 지역 특화 해양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Ⅲ - 2-2	• (거점혁신) 혁신성장 4대 거점 육성	•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사 업 추진 및 개발 본격화	• 새만금 신항만
Ⅲ - 3-5	• 해양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서지 역 재창조	• 어촌·도서지역 재창조	• 어촌뉴딜 300사업 • 도시지역 접근성 개선
		• 연안도시를 지역경제 거 점으로 개발	• 항만재개발을 통한 해양문화·산업 도시 육성 •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 국제물류 거점 조성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항만 인 프라 확충
		•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 관광·레저산업 육성	• 마리나, 크루즈 산업 육성 • 新해양관광·레저산업 개발·육성 •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조성

주: 본 과제(안)는 미확정된 것으로 수정·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부문별 계획 초안, 2018. 9 (미발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정책방향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³⁵⁾에서는 “계획

35)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국토계획연구원, 2018)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
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별 계획안에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작성

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를 중심으로 하되,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전역”을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토계획에서는 해양·섬·산지 등 국토경계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항만’ 부문은 허브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항만의 도시·산업·서비스 기능의 강화 방향 제시하고 있고, ‘해양자원’부문에서는 어촌·어항의 복합적 활용성, 연안·해양통합관리, 해양영토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1〉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중 해양수산 부문

구분	기본방향	계획과제
항만	• 허브항만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 • 항만시설 내진 보강 등 안전한 항만 구축 • 친환경 스마트 항만 구축 • 항만의 서비스 기능 강화	•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항만의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복합화·다양화 • 항만 안전성 강화 • 친환경 스마트 항만 구축
해양 자원	• 해양(해역)과 연안(육지)에 대한 통합적 공간관리 • 해양수산과학기술과 스마트 기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 혁신성장을 통한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및 섬 등 해양자원의 잠재력 극대화	•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 • 해양수산 과학기술과 스마트 기반의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및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해양, 섬 등 해양자원의 잠재력 극대화와 해양영토의 지속적 보호 • 해양재해와 해양오염에 대응한 안전시스템과 인프라 구축

자료: 국토교통부·국토계획연구원,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2018. p.45, p.77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재정지원 등과 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도 주도로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제안하고, 중앙부처는 규제·제도개선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지자체 혁신프로젝트로 정하

여, 이를 조선해양산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해상풍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고, 동해가스전 시설물의 해상풍력 용도로 재활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전략(2018.2.23 발표)에서는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역리더십 구축→혁신주체 성장→혁신체계 고도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지역내 기술사업화 촉진시스템 강화’,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성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세계·보조금·금융·규제특례·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심쇠퇴지역, 산단 및 대학 내 유휴지 등을 활용한 혁신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2018.10.25 발표)’에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新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혁신도시 별 특화발전 지원,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역의 자립적 기반 조성 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22〉 연안·해양지역 관련 혁신도시 특화발전계획

구분	발전테마	주요사업
부산	첨단 해양신산업	•첨단 해양과학기술 혁신거점 STEM 빌리지 건립 •드론을 활용한 해양안전·환경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안전한 해양레포츠와 어업활동 지원
울산	친환경 에너지 (해상풍력 등)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관련 기술개발, 실증화 등을 위해 테스트 베드 구축과 실증연구센터 건립
제주	스마트 MICE	•마이스발전협의체 구축,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자료: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주요내용, 2018. 10. 25

2. 해양수산부의 지역 관련 정책 분석

해양수산정책은 대부분 연안·해양 고유의 자원과 지역역량을 결집해 경쟁력 있는 발전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수준은 해양산업, 수산·어촌, 항만, 해양환경, 토지개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응이라기보다는 산업 분야별 정책 이행의 장(場)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즉, 항만·수산·어촌·해변·갯벌·도서·해양관광 등 해양수산 부문의 국가계획과 지역의 연안·해양 활용수요와 지역 성장 이 연계된 지역발전전략은 부족하고, 연안·해양의 지역 현안을 해양수산 관련 계획에서는 개별적·부문적으로 다루어 종합적 지역발전 정책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연안·해양지역의 해양수산 발전역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표 2-23〉 해양수산 부문 지역 관련 국가계획

구분	주요계획
연안·해양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기본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 해양환경종합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등
어촌·수산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특화발전계획, 농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 수산자원관리계획, 어장관리기본계획 등 • 내수면어업진흥계획
항만·산업	• 항만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마리나항만기본계획 •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
해양관광·레저	•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 •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 해수욕장기본계획

주: 저자 작성

해양수산부는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운항만산업, 혁신형 해양수산업, 연안·어촌, 해양환경·생태, 해양영토 관리, 해양문화 등 다양한 해양수산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기반의 해양수산정책 추진은 미흡하다.

〈표 2-24〉 해양수산부의 주요정책

구분	주요내용
해운항만산업의 재도약	•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7), 선박신조(50척) 지원,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 도입, 인천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18.4),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
혁신형 해양수산업	• 스마트 해상물류 구축전략 마련('18.4),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시범조성 • 참다랑어 상업출하 개시('18.5),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 추진(2개소), 산지거점 유통센터 확충(3개소),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1개소)
연안·어촌개발로 지역균형발전	• 어촌뉴딜300사업,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조건불리수산물직불금 대상 확대(수도서), 해중경관지구 시범지정, 해안누리길(53개) 테마코스화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	• 어린명태 방류(100만 마리), 휴어제 및 낚시 관리제 도입 검토, 「해양공간계획법」제정, 수산물 안전검사 확대,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착수
해양영토 수호와 안전한 바다	• 대형어업지도선 신규 투입, 한·중 공동단속시스템 운영, 연근해 어선 위치확인시스템 구축, 협수로 통항안전성 개선, 낚시전용선 도입 검토
해양문화 확산 국제적 위상 제고	• 해녀어업의 세계중요어업유산(FAO) 등재 추진, 국립 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조성 추진

자료: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어촌뉴딜 300’, ‘항만지역 활성화’, ‘지역별 수산혁신사업’,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등이다. ‘어촌뉴딜 300’은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것으로, 어항과 어촌의 이원화된 개발·관리체계에서 벗어나 어항-어촌 통합개발을 통해 300여개의 어촌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촌뉴딜 300’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강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25〉 어촌뉴딜 300의 추진방안

3대 추진방안	세부 내용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 도서민·국민들의 해상교통 접근성 강화 • 안전시설 보강 및 안전관리 강화 • 여객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시설 마련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 어촌과 연안지역 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특화개발 추진 • 해양레저 대중화 및 국민관광 이용권 확대 기반 마련 •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어촌의 재생 및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 어촌뉴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 지속가능한 어촌경제 생태계 조성

자료: 관계부처 합동,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2018. 6. 28

항만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노후·유향항만을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재개발하고,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하는 등 항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항만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연관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항만정책 개발·이행을 추진하고, 클러스터 소재 지자체의 전략사업과 연계된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부산항은 독북아 물류허브로서 위상 강화와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하여 항만 관련 산업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울산항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광양항은 국내 최대 항만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고, 묘도

매립지에 물류·산업시설과 미래신소재 산업유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기타 지역거점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택·당진항, 동해항, 고현항 등에서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26〉 항만 지역 활성화 관련 주요정책

구분	세부 내용
부산항	• 동북아 물류허브 위상 강화와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기업 등 유치 • 해양산업클러스터(부산항 우암부두) 지정 •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 마련
인천항	• 대중국 수도권 물류거점으로 육성 •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광양항	• 국내 최대 항만산업클러스터로 육성 • 해양산업클러스터(광양항 중마부두) 지정 • 묘도 항만매립지를 물류·산업시설, 미래신소재 산업시설 유치
울산항	•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
지역거점항만의 경쟁력 강화	• 수도권 산업거점(평택·당진항), 강원권 산업거점(동해항), 새만금 신항 등 조기 조성 추진, 고현항·목포항 등 항만재개발 사업 추진

자료: 해양수산부 내부자료

항만재개발과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항 북항을 대상으로 통합개발 기본구상을 마련해 해운·금융·산업·관광문화가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부산항북항의 통합개발은 국민참여정책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북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 인천내항 1·8부두에 있는 대형곡물창고를 활용해 상상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창업과 문화·예술·쇼핑 기능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2-13〉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기본구상과 인천내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시민이 주도하는'부산항 북항 통합개발'본격 시동(2018 4. 27일자), 인천 내항 곡물창고, 상상 펼쳐는 미래공간으로 재탄생한다.(2018. 2. 27일자)

지역별 스마트양식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 육성 등을 통한 수산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양식은 양식산업을 지역 핵심산업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해 첨단·친환경 양식모델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동·서·남해 거점지역에 스마트 양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스마트양식장과 양식생산·가공·유통·수출과 연구개발, 고급인력 등이 집적된 곳을 말한다. 지자체 수산식품 정책과 해역별 생산여건을 고려하여 R&D지원센터, 협력지원센터, 수산물 가공단지 등을 집적·연계하는 권역별 수산물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에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과 목포에 생산·가공·연구개발·수출 지원 등이 집약된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³⁶⁾³⁷⁾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천만명 달성을 위해 U자형 해양관광·레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리나, 크루즈 등 주력 해양레저산업은 인프라 확충, 국내외 수요 촉진, 연관산업 육성을 추진하여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치유, 수중레저산업, 등대문화 공간 등은 시범사업, 사업모델 개발, 특구 지정 등을 통해 새로운 해양관광·레저 산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27〉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 방향	세부 내용	
고품격·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 육성	• 마리나 산업 기반 조성 • 크루즈 산업 체질개선 • 수중레저 산업 활성화 지원 • 사계절 해양치유 산업 육성	• 해양치유산업육성은 '태안, 완도, 경남 고성, 울진'과 협력하여 추진
해양레저관광 하드·소프트웨어 구비	• 어촌관광 활성화 • 해양레저관광 공간 조성 • 해양레저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 해양관광복합지구 조성 • 어촌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U자형 바다관광 항로 개발 • 섬·해수욕장·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한 관광루트(바다路)
해양레저관광 저변 확대	• 해양레저관광 체험활동 강화 • 안전한 해양레저관광 환경 조성 • 해양교육·문화 확산	• 해양레저 체험교육과 지역관광을 결합하여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가능한 복합형 해양레저체험교실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2018. 7. 11

36) 부산일보, "부산 수산가공 클러스터 2022년 개장(2018.02.01.)" (검색일자 : 2018 09.02.)

37) 수산식품거점단지: 부산, 전북(부안, 군산, 고창), 전남(목포, 여수, 영광), 경북(영덕, 포항, 울진), 충북(괴산), 경남(통영) 등

3. 시·도의 해양수산정책 방향 분석

시·도에서는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 해양수산자원과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 해양수산 발전방안 수립과 해양수산 전담조직 확대·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부산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2009년 제정, 2016년 개정)」를 근거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16년에 제2차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전반적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해 6대 전략과 25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해양수산과 관련된 전담부서는 해양농수산물 내 해양수도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유통가공과이다.

【 제2차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16) 】

- 비전: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
- 3대 핵심가치: 혁신과 활력, 창조와 도전, 공생과 조화
- 6대 산업분야별 추진전략: ①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해운항만물류 ② 동북아 수산식품 산업 혁신거점 성장 ③ 조선 해양플랜트산업의 글로벌리더 ④ 해양과학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해양경제 주도 ⑤ 동북아 해양관광 거점도시 도약 ⑥ 깨끗하고 건강한 부산바다 ⑦ 미래 신해양문화와 해양지식산업 선도
- 25개 세부 전략과제 도출

인천은 해안지역의 통합적 계획·관리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해양·항만 주권 강화를 위한 해양친수도시 미래비전과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을 2017년에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해양친수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

립 예정에 있다. 현재 해양수산 진단부서는 해양항공국 내 해양도서 정책과, 수산과이다.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17)】

- 비전: 시민에게 열린바다,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 인천!
- 기본방향: 개방성, 공공성, 접근성, 연계성, 환경성/생태계 지속가능성, 장소성 및 역사성, 이용성 및 복합성, 확장성
- 해양친수거점 구상: 경인항(해양레저·교육), 내항(도심 역사문화 재생), 송도(해양문화·레저), 소래(해양생태 체험), 영종(국제해양관광), 강화(생태·문화체험)
- 세부 친수공간 조성: ① 인천 대표 해안친수공간(송도 해양랜드마크 등), ② 해안개방공간(청라산단 해양데크 등) 과 시민 여가·체험공간(여차리 갯벌정원 등) ③ 포구문화공간(북성 문학포구 등), ④ 해양산업기능공간(경인항 해양레저·교육단지 등)
- 실행화 방안: 항만계획권 강화, 준성토투기장 및 매립지계획 강화, 환경보전제도 적용, 사라진 섬 찾기 프로젝트 등

울산은 현재 체계적인 해양항만물류와 수산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계획(안)에서는 해양관광, 항만물류, 해양신산업, 수산자원, 연안공간 개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추진전략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울산의 해양수산 전담부서는 일자리경제국 내 해양수산과이다.

【울산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중(18~)】

- 기본목표(안): 글로벌 신해양도시, 해양신산업 중심도시, 지속가능한 연안도시
- 분야별 추진과제(안): ① 해운항만(친환경 스마트항만, 고부가가치 항만건설, 항만연관산업 육성), ② 에너지·물류(동북아 에너지 허브조성, 환동해 물류거점항만, 북방경제교류 중심도시 건설), ③ 문화·관광·레저(해양관광인프라, 콘텐츠 등 개발), ④ 해양신산업(해양에너지 및 첨단장비산업 육성, 전통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해양과학기술 R&D 확충), ⑤ 어촌·어항(어촌활성화,사업, 생태어촌마을 조성, 어촌뉴딜), ⑥ 연안환경·안전(연안생태복원, 안전한 해양공간 조성, 건강한 해양수산 먹거리)
- 현재 울산 해양수산발전종합계획(안)은 수립 추진 중이므로 본 내용은 미확정 (안)임.

경기는 2012년에 수립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에서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新경기해양’의 비전을 제하고 있다. 최근 경기는 해양레저산업의 국제화와 일자리 창출, 산업성장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의 해양수산 전담부서난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와 수산과이다.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12~)】

- 비전 : 4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新경기 해양
- 목표 : 돈버는 “생산”의 공간 경기바다, 해양을 즐기는 “문화관광”의 공간 경기바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경기바다
- 추진전략: ① 경쟁력을 가진 자생력 높은 수산업 실현 ② 세계화에 부합하는 글로벌 경기해양수산 건설 ③ 해양수산자원 효율적 이용·개발, ④ 선진국형 해양관광선도, ⑤ 동북아 해양레포츠/레저거점 건설, ⑥ 전후방 연계산업 발전을 통한 해양클러스터 구축, ⑦ 지속가능한 녹색 수산업 기반 구축, ⑧ 해양환경·생태의 보호체계 구축, ⑨ 살고 싶은 활력 어촌 건설

강원은 「강원비전 2040」에서 해양수산 관련 정책·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은 남북 동해안 해양수산 교류협력을 위해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을 마련하였고, 농수산업의 첨단화, 환동해 첨단 수산물류 허브 구축, 활력있는 농어촌 건성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의 전담부서는 환동해본부 내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해양항만과이다.

【2040 강원비전 (17)】

- 비전: 자연과 사람의 미래, Login 강원
- 실현전략(4WD): Well-Come, Wonderful-Stay, Dream-Works, Dramatic-Nature
- 실현전략별 해양수산 관련 과제: ① Well-Come(동해안 항만기능 고도화 및 물류처리 기반능력 확충, 평화의 바다 조성), ② Dream-Works (농수산업의 첨단화, 해양심층수

【 2040 강원비전 (17) 】

산업 벨트 조성, 환동해 첨단 수산물류 허브 구축, 동해안 수산업의 Blue Revolution, 활력있는 농어촌 건설, 해양에너지 실증연구센터 건립 등)

충남은 2015년에 해양수산발전계획에 수립하고,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건도(建道) 충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해양수산정책·사업의 적극적 개발하고 있다. 특히, 충남은 민선 7기 해양수산발전계획 보고회에서 2022년까지 해양수산분야 4조 6,904 억원 투자, 10,204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³⁸⁾ 충남의 전담부서는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수산산업과,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이다.

【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15) 】

- 비전: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 해양 건도(建道) 충남
- 기본목표: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풍요와 역동의 바다, 세계를 향한 교류의 바다
- 6대 추진전략: ① 지속가능한 해양안전·환경 조성 ② 바다와 교류하는 해양레저·관광 ③ 살기 좋은 풍요로운 어촌·아름다운 어항 ④ 충남 미래성장동력 해양신산업 창출 ⑤ 국제물류·항만거점 조성 ⑥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98개 추진과제 도출

전북은 새만금사업으로 축소된 해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산업·해양관광 등의 활성화와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에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전북의 해양수산 전담부서는 농축수산물식품국 해양수산과이다.

38) 충남도 내부자료 활용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17)】

- 비전: 바다의 힘, 큰 전북
- 기본목표: 상생하는 창조의 바다, 살아있는 생명의 바다, 삶이 있는 소통의 바다
- 6대 추진전략: ① 미래성장엔진 해양신산업 조성, ② 휴먼웨어 투자와 활용을 통한 공간과 자원의 융복합 기반 구축, ③ 지속가능한 해양생태환경 조성, ④ 안심·안전한 연안환경 조성, ⑤ 맛과 멋이 있는 연안만들기, ⑥ 가고 싶은 어촌만들기

전남은 2015년에 제3차 5개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해 수산양식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고싶은 섬’ 만들기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해양수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해양수산 제도개선 발굴 추진단’ 구성하여 해양수산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의 해양수산 전담부서는 해양수산국 내 해운항만과, 섬해양정책과, 수산자원과, 수산유통가공과이다.

【전라남도 제3차 5개년 해양수산발전계획(15)】

- 비전: 살고 싶고 소득 높은 어촌 건설
- 기본목표: 수산양식업 경쟁력 강화와 저비용 고소득 수산업 실현, 해양수산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소득과 연계한 ‘가고 싶은 섬’ 고도화
- 11개 역점시책: ① ‘가고 싶은 섬’ 가꾸기, ②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③ 항만 활성화 및 항만기반시설 구축 ④ 어촌정주여건 조성 ⑤ 해양관광 및 해양휴양공간 조성 ⑥ 어업경영 안정 및 수산업 육성 ⑦ 수산자원 조성 및 보전 ⑧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⑨ 고부가 수산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 ⑩ 수산업 유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⑪ 천일염 산업 육성
- 35개 추진과제 도출

경북은 2014년에 신동해안 해양수산마스터플랜을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해안 바다시대를 열고, 해양수산 신산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동해지역본부 청사를 2018년 1월에 포항으로 이전했다. 포항으로 이전한 환동해지역본부는 동해안권 발전거점과 북방

경제의 중심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북의 해양수산 전담부서는 환동해전략산업국(동해안정책과, 에너지산업과, 원자력정책과)과 해양수산국(해양수산물, 항만물류과, 독도정책과)이 있다.

【 경상북도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14) 】

- 비전: 바다의 시대 개막으로 해양경복 실현
- 기본목표: 창조적 바다, 힐링의 바다, 교류의 바다
- 7대 추진전략: ① 경북 신성장 엔진, 해양신산업 ② 인간과 자원, 문화가 공존하는 해양 관광 ③ 신해양 실크로드 전진기지 ④ 원자력산업 1번지, 경북 ⑤ 어업인이 잘사는 행복한 어촌 ⑥ 세계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독도 ⑦ 누구나 믿고 찾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⑧ 소프트파워가 강한 해양수산 경북
- 73개 세부과제 도출

경남은 수산·양식업, 항만물류, 어촌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한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중에 있다. 전담부서는 해양수산국 내 해양수산물, 어업진흥과, 항만정책과이다.

【 경상남도 해양수산 발전 도정 4개년 추진과제(18) 】

- 통영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수산식품 연구·홍보·전시·판매·가공 등 복합단지 건립
-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해역별 특화품종의 전략적 육성, 지역 어업인의 기술이전 등
- 어촌뉴딜 300사업: 섬·해안 등 수려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해양레저 및 국민휴양, 수산특화, 재생기반 시설 등 추진
- 스마트양식 실증센터 구축과 배후부지 기반 조성: 경남 고성군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 발전 본부 유휴부지에 스마트 양식 실증센터 구축(300억 원)과 스마트 양식 다기능복합단지 배후부지 기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2011년 제정, 2016년 전면개정)」에 따라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에서는 수산업의 고도화, 해양신

산업 육성, 해녀문화 콘텐츠사업 육성, 항만인프라 확충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 해양수산 전담부서는 해양수산국 내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14) 】

- 비전: 제주 바다, 세계 해양도시를 품다!
- 6대 해양산업: ① 동북아 해양관광 명품 지역화, ② 해양문화와 콘텐츠가 결합된 글로벌 문화 선도, ③ 모든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조성, ④ 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거점 배후 조성, ⑤ 해양물류 부가가치 창출, ⑥ 아열대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 육성
- 4대 관리기반: ① 안전하고 깨끗한 친 해양환경 조성 ② 제주해양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적용 ③ 해양정보 통합구축과 금융제도 개선 ④ 해양산업 특화 교육과 실용적인 산업 인력 양성
- 68개 세부과제 도출

제3장

시·도별 해양수산 현안과 정책·사업 분석

제1절 광역시의 해양수산 현안 및 정책과제

1. 부산광역시

1) 주요 여건과 현안³⁹⁾

부산은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목표로 종합적인 해양수산 기반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 구축, 해양산업 기본계획과 해양산업 육성시행계획 등 수립과 선진 해양생태·안전 관리기반, 수산산업의 미래화 기반 구축 등이 있다.

분야별 주요 현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글로벌 해양도시 구현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측면에서 해양산업 육성전략 마련과 해양혁신클

39)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중 부산시 토론회문과 부산시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정리

러스터 조성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세계항구도시협회 가입, 선박평형수 기술협력,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부산은 유라시아 관문으로서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사업내역으로는 부산항 신항 건설, 물류기지 개발, 부산항 통합개발, 해운지식 서비스업 육성, 크루즈 모항 기반 조성을 꼽을 수 있다. 셋째, 해양관광 측면에서는 체류형 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국제보트쇼, 아시아세일링위크, 마리나 비즈니스 R&D 센터 건립 추진, 송도 해양레저타운 조성 등 해양관광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넷째, 수산업 분야는 세계수산대학원 운영, 수산산업의 창업 투자, 수산자원 조성플랫폼,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과 유통기반 선진화체계 구축, 어촌·어항 복합 다기능화 추진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부산은 국가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해양권 형성·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항만 측면에서는 글로벌 항만들과의 연결성을 높인 Tri-Port 구축, 동남해안 기간산업의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해양경제권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양도시와 광역단위에서 연합하는 상호 의존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역의 혁신성장체계 구축 차원에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해양·항만 인프라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 집적된 해양수산 분야 인프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해양·항만·수산·해양레저·관광 등 인프라가 부산지역에 집적되어 있음에도 해양·항만 권한의 중앙집중으로 여타 글로벌 항만도시와의 경쟁력 저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자치

27년 동안 해양항만권한의 지방이양은 45.2%에 불과하며, 이에 부산은 분권형 헌법 개헌 시대 대비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분야 자치권 확보를 위한 지역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해양인프라 활용 측면에서 동삼혁신지구 내 해양기관 간의 네트워킹 강화, 기업유치 등을 통한 해양신산업의 혁신성장거점으로 활용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수상레저업, 해양 레저장비·용품 제작 및 수리업 등 국내 해양레저·관광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먼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진행 중이다. 부산은 해양레저 전담조직 설치, 중·장기 계획 수립, 예산지원, 전문인력 양성, 전문가 자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2016년 제정)」 등을 통한 해양레저·관광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둘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차원에서 지자체 중심의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사례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시행 권한과 마리나서비스업 관련 일부 권한(마리나업의 등록, 승계, 폐업의 신고 등) 등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 위해 민관합동 토론회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⁴⁰⁾. 또한 자연친화형 친수공간 개발 등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적용 완화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현상 변경 허가에 대한 지자체 권한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 해양레저활동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류 작성의 편리성 제고 등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식품 산업육성 분야에서는 현행 양적 성장구조에서 나아가 질적 성장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0)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민관합동 토론회 자료, 2018

일차적인 수산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창업·투자지원, 수산업 실증산업단지 조성 등 수산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과 유관 기자재산업 육성이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 수산식품산업의 인프라 확충 및 생산량 증대에서 고부가가치화와 글로벌화로 전환하고자 한다.

〈표 3-1〉 부산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권한 이양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 및 해양자치권 확보	• 지방자치권 강화 개헌 논의 부진,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부처의 소극적 입장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	• BPA 출자·출연, 사업추진 제약 완화 • 「항만공사법」 상 사업 범위 확대
	유류 항만개발 관리권 지방이양 및 지역 산업 특성 반영	• 북항을 지방관리무역항으로 변경·지정 • BPA에 기존 컨부두 관리사업 위탁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권한 지방이양	• 마리나항만 개발·업 등록 권한 지방이양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행권한 지방이양	• 레저사업 인허가권 일원화(기초·광역지자체)
	해사전문법원 설립	• 해사전문법원 설치 및 부산 유치 근거 마련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부산 이전	•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용역에 포함 검토
항만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계획	• 1부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사업 지연 • 북항 재개발(2단계) 부지확보에 대한 기재부의 부정적 의견
	부산항(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 국비지원, 입주기업 국세감면 등 미흡 • 사업성 관련 해수부의 부정적 의견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해수부·BPA 종합대책의 기준 강화
해양 관광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 실시협약 변경(시설규모 변경, 초과수익 이익배분 등)
수산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 필수시설 등을 위한 총사업비 증액 필요
	자갈치글로벌 수산명소화	• 「자갈치 수산명소화시장 관리조례」 제정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씨푸드밸리) 조성	• 기재부 예타 통과 대응 • 국립수산식품연구소 조직·인력 확충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수산	수산분야 남북경제 교류사업	•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 부산 내 대북채널·육성책 부재
	근해어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대응	•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수산업계 경영난

자료: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8.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을 도모하는 부산의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산업, 해운, 항만, 수산, 어업인·어촌, 해양환경 분야로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해양산업 및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해운·항만 환경정비, 수산업의 글로벌화를 통해 해양수산 부문을 넘어 다양한 정책부문과 연계한 해양도시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이다.

〈표 3-2〉 부산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양산업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 해양수도 기반 확충 및 역량 강화 • 해양수도 글로벌 리더십 강화 및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 및 활성화 추진
	해양과학기술 기반의 新해양산업 육성	• 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 조성 및 미래 新해양산업 육성 • 극지 허브도시 선점을 위한 기반조성
해운	선도적인 해양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 IMO 협력을 통한 해양산업 발전기반 마련 • 해양안전 관리기반 구축
	해운항만 지식서비스 산업 및 뿌리산업 기반 구축	• 해양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해운·항만산업 지원기반 확충 • 해운지식서비스산업 육성 기반 구축 • 부산항 뿌리산업 시장 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 기반구축
항만	부산항 신항 글로벌 고부가 복합물류기지 개발	• 글로벌 新해양산업 중심지 조성을 위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터미널 건설 • 부산항 신항 안전항로 확보(도도제거 등) 어업손실보상 • One-Stop 공동물류센터 조성 • 부산항 신항 LNG병커링 기지 조성 • 대형수리조선단지 조성 • 배후물류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항만서비스 제고 및 부산항 경쟁력 강화지원	• 감천항 주변 교통난 해소 및 항만·물류기능 확보 도로망 구축 • 부산항 환적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 지원 • 부산항 신항 근로자 근로환경 지속 개선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항만	남항관리사업소	• 맑고 깨끗한 항만 관리 및 안전하고 질서 있는 항로 확보 • 항만기능의 효율적 개선
해양 관광	해양레포츠 대중화 및 해양레저 시설 조성	• 해양레포츠 대중화를 위한 각종 행사·대회 및 체험지원 • 해양레저 시설조성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 마리나 인프라 확충
수산	부산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기반 강화	• Smart Fisheries 4.0 중장기 비전계획 수립 시행 • FAO 세계수산대학(WFU) 설립 • 부산수산정책 거버넌스 기능 강화(수산정책포럼)
	수산기업 지원 강화 및 수산산업 新 성장 동력 발굴	•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 해상낚시복합타운조성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양식산업 구 조 고도화	• 수산자원서식환경 조성 및 건전한 수산자원 관리 • 4차산업 지능형 양식시스템 표준화 센터 구축 • 낙동강 하굿둑 개방 이후 수산자원 관리방안 마련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 스터 조성 및 유통기 반 선진화 체계 구축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 자갈치 글로벌 수산명소화 • 부산시수협 남포동 위판장 조성 • 기장 수산물 체험·홍보센터 건립
	수산식품 미래 산업화	•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 수산가공선화단지 • 지역 수산가공업체 설비 및 위생시설 지원 • 수산물 가공업체 전문교육 지원
	국제수산도시 도약을 위한 협력기반 구축	• 부산국제수산무역EXPO 확대 •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 거점도시 육성 • 한·일 해협 연안 8개 시·도·현 수산교류사업 추진 • 수산식품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강화
어업 · 어촌	선진 어업환경 조성 및 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및 근해어선 현대화 사업 •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 어선·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및 어업인 안전보험지원 • 어업기반시설 지원 • FTA 직접피해 보전제도 운영 • 한·일, 한·중 EEZ내 어업협정 이행 및 관리 • 순직선원위령탑 이전(건립) 추진 • 원양어업 종사자 및 가족 축제 행사지원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어업	안전하고 질서 있는 어업환경 조성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어선 및 낚시어선 안전점검반 운영 • 불법어업 없는 바다환경 조성 • 청소년 바다안전 체험학습 실시
어촌	어촌·어항 복합 다기능화를 통한 6차 산업화	• 배후지역 복합 다기능 어항개발 • 안전한 연안어항 조성사업 • 체험과 관광의 공간, 어촌
해양 환경	고품격 연안 친수공간 조성 및 연안방재대책 추진	• 체계적인 연안정비사업 추진 • 부산 연안방재대책 수립 • 연안방재대책사업 중장기 추진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 조성	• 해양오염원 관리 및 방지 대책 마련 • 해양생태계 건강성 유지 보전

자료: 부산광역시 해양수산국,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8.

2. 인천광역시

1) 주요 여건과 현안⁴¹⁾

인천은 항만·항공, 해양관광·레저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이 시작된 도시라는 역사적 정체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천은 1883년 인천항 개항 이후 해양 역사가 시작된 해양도시로 우리나라 최초 등대인 팔미도 등대, 최초 해수욕장인 묘도 해수욕장 등 해양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68개의 섬, 갯벌 면적 709.6km², 30여개 해수욕장 등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해양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의 해양수산 정책여건은 물류·항만기능과 관광기능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개장한 인천 신항이 물동량 306만TUE 달성하고, 22만톤급 크루즈 전용부두(총 8선석)를 건설함과 동시에 국제여객터

41) 2018 해양수산 전국대토론회 중 인천시 토론했던 내용을 재정리

미널(19.上 개장)을 개장하는 등 인천의 물류·항만과 관광인프라 규모는 여타 시도와 비교하여 최상위 수준의 경쟁력을 보인다. 또한 18km의 경인아라뱃길을 개통하고 인근의 아라인천터미널, 생물자원관, 안개협곡 등 다양한 수변 볼거리가 분포하고 있다는 점도 해양관광 측면의 강점이다. 송도 워터프론트사업과 6~8공구 공공마리나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 또한 해양수산 자원을 활용가치를 높이는 정책현안으로 꼽힌다.

반면 인천항은 내항 기능 상실에 따라 단계별 기능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유희항만이 발생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인천 내항 1·8부두에 개항창조도시(문화·예술) 사업인 인천내항 상상플랫폼을 추진하고 해양수산 분야 유희자산과 도시재생 사업은 연계·추진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 측면에서는 육지와 도서(섬)를 연결할 수 있는 소규모 marina 계류시설 구축과 연안 여객선 대중을 위한 여객운임지원 등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매력 있는 애인섬 프로젝트를 통해 168개 섬에 대한 가치 재조명 및 섬의 다양한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하여 40개 유인도서의 어항시설을 활용한 소규모 요트장 확대 추진사업 또한 구상 중이다.

〈표 3-3〉 인천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친수 관광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 송도 수로 호수 연결 친수공간 및 해양생태도시 조성으로 관광활성화
도서 교통	제3연륙교 건설사업	• 영종 청라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주민 장기 숙원사업 해소 • 국토부와 사업추진 기본협약서 협의('18.1.), 실시설계 발주 등('18.1.~3.), 사업추진 협약체결 (인천시↔LH공사 도시공사), 공사착공('20)

자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2018 주요업무계획, 2017.

인천은 지역 내 해양 친수공간 조성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송도 해양랜드마크, 거잠포 일출물 조망테크 등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청라산단 해양테크, 여차리 갯벌정원, 작약도 카페섬 등 해안변 시민여가공간 조성사업과 북성 문학포구, 분오항 저어새 테마 친수공간 등 포구 문화공간 조성도 주요 정책현안 중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해안철책선 제거작업(10개소 26.88km → 2018년 1개소 2.4km 제거, 5억원)을 통해 시민의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인항 해양레저·교육단지, 영종 해양바이오산업단지 등 해양산업기능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은 서울-경기와의 우수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수도권 관광수요를 유입하기 위한 해양레저 인프라 확충과 섬 접근성 개선사업을 주요 정책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그 일환으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업을 통한 관광지 및 맞춤형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마케팅 및 팸투어를 통해 정기항로 개척(천진, 상해, 대만)을 위한 초기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크루즈 관광상륙 허가제 도입 및 입국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 한강 뱃길을 연결하는 유람선 개통,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 중이다.

반면 인천의 해안지역 대부분은 군사보호구역 또는 항만보안구역으로서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며, 인프라 측면에서도 해양레저산업의 기반시설(마리나항만, 요트계류장 등) 미비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해양레저·관광 측면에서 인근 지역과의 무분별한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바, 인천의 해양관광사업을 체계화 하여 경쟁우위를 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역내 168개 유·무인도의 발전 측면에서는 접근성 개선사업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와 영종~신도 연륙교, 강화 서도(주문~아차~보름) 연도교 등 건설을 검토 중이다.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인천은 기 구축된 해양수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항만과 연계한 해양도시 건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항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천신항의 물류체계 정비, 인천항만 중심의 배후단지 조성, 철도수송체계 구축, 항만·물류 분야 인력양성 등의 정책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둘째, 인천은 해양문화도시를 슬로건으로 체험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마리나계류 시설 조성, 크루즈산업 육성, 해상교통접근성 개선, 해수욕장 환경관리 등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천은 도서지역 관리와 북-중 접경지역의 안전조업 지원, 해양환경 보전사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서해5도를 비롯한 도서주민 생활지원, 서해 NLL 해역 불법조업 단속 등 수산자원 관리와 어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중이다.

〈표 3-4〉 인천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항만	글로벌 항만 인프라 확충	• 新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 추진 • 인천신항 항로 중심 사업(14m→16m) • 인천 제1항로(팔미도~북항) 계획수심 확보(12m→14m)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성 • 인천신항 철도수송체계 구축
항만	항만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 인천항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지원(신규)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분원 건립 추진(신규) •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신규) • 물동량 창출을 위한 공설CFS(컨테이너 화물작업장) 운영 • 인천항 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항만	도시와 항만이 조화로운 해양도시 건설	• 해안철책 철거 및 대체사업(신규) • 인천 해양항만 발전전략 중장기계획 수립(신규) •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 •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양 관광	해양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객 편의 증진	•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추진 • 소규모 마리나 계류시설 조성 추진계획 • 해수욕장 이용을 위한 환경 개선 추진
	인천 해양 문명도시 조성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컨퍼런스 개최 •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
도시 · 환경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섬 발전	• 매력 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지원 • 서해5도민 주민생활 지원 • 섬 활성화 센터 구성·운영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	• 청정한 인천앞바다 만들기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 연안 습지의 복원 및 관리
수산	어업인 복지 향상 및 어선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다기능 어항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살고 싶은 어업인 복지 구현 • 어업인 안전의식 고취 및 경영기반 안정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장비 현대화 및 기반시설 강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	• 연안생태계 회복을 통한 바다목장 조성 •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증강으로 어장생산성 향상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순환형 자원관리 • 서해 NLL 해역 안전조업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 추진
	수산물 유통기반 조 성 및 명품화 추진	•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 수산물 명품화 추진으로 유통·소비·수출 활성화
	유용 수산종자 생산 · 방류 및 병성감정 기관 운영	• 인천 연안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품종의 우량 수산종자 생산·방류 • 수산생물 병성감정 운영을 통한 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 저수조 보수·보강 사업
	어촌 수산 기술보급 및 전문 수산인력 양성	• 지역 적품종 기술개발 보급 및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원 • 맞춤형 기술 교육을 통한 수산전문인력 양성 • 수산어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조성

자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2018 주요업무계획, 2017.

3. 울산광역시

1) 주요 여건과 현안

액체화물처리 국내 1위의 울산은 최대 규모의 상업용 탱크터미널을 보유하고 있으나, 세계 해양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항만 및 해운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되는 LNG 벙커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개발하였으며, 기존 에너지 거점항만의 장점을 살려 친환경 에너지 벙커링 사업을 조기 정착시켰다. 또한 지역주력사업인 조선소를 활용한 수송선 건조를 통해 조선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선·해운 기반을 바탕으로 LNG 벙커링사업과 동북아 에너지 허브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울산항을 세계적 LNG 벙커링 허브항으로 육성하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울산항은 유희항만부지의 활용방안 모색과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울산은 석탄야적장 이전에 따라 유희 석탄부두 등을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사업을 고안 중이며, 화물 운반시 석탄 및 사료 부원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친환경 항만조성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울산항을 북방경제협력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북방물류산업 지원을 추진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3대 벨트 중의 하나인 환동해권(에너지·자원벨트)을 활용한 북방경제협력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북방물류활성화 방안과 울산항 연관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관광·레저 인프라 측면에서는 고래문화특구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연계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에 제기된다. 고래문화 특구의 경우, 모노레일, 어린이테마파크, 워터프론트 조성사업 등 인프라 확충과 인근 고래박물관, 고래생태관, 고래바다 여행선과 연계·운영함으로써 울산 장생포 인근을 고래테마 관광명소로 발전시키는 계획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 울산의 어촌을 재생시키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방어진 대왕암, 나사항과 동구 주전, 북구 우가 어촌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한 어업외 소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침체는 조선해양산업을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은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해양플랜트 산업 역량을 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 '18.8.8)으로 동해가스전 시설물을 해상풍력용도로 재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19년 상반기 용복합클러스터 지정을 추진 중이다.

울산은 상술한 정책여건을 종합하여 '제1차 울산 해양수산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울산은 해당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양산업 진단과 산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의 해양수산 산업 활성화와 체계적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표 3-5〉 울산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 사항
항만 · 물류	친환경 LNG 병커링 구축	- 친환경 에너지 병커링 사업 조기 정착 - 지역주력사업인 조선소를 활용한 수송선 건조 추진
	울산항 비산먼지 등 환경문제 제기	- 울산항은 화물 운반 시 석탄 및 사료 부원료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환경문제 제기 - 항만 미세먼지 환경오염 저감으로 친환경 항만조성

분야	정책과제	현안 사항
항만 · 물류	석탄부두의 이전에 따른 항만 재개발	• 석탄야적장 이전에 따른 석탄부두와 유류부두를 활용한 수변공간 조성
	동구 하리항 및 일산항 정비	• 소규모 어항 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어항기능 활성화와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 •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예비비 국고보조금 교부
북방경제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	• 한반도 신경제 구상 3대 경제벨트 중 하나인 환동해권(에너지·자원벨트)을 통한 북방 경제협력의 북방경제협력 연구 및 컨설팅 지원 사업 • 북방물류산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북방경제협력특별위원회 운영 및 한-러 지방협력포럼 유치
	북방물류산업 지원 및 활성화	• 북방경제 지역정책 대안 개발 필요 • 북방물류 활성화 방안 및 울산항 연관산업 육성방안 모색
해양산업	해양에너지산업	• 조선해양산업을 대체하기 위한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
	해양산업 통계분석	• 울산지역 해양산업 통계조사가 전무한 실정으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에 활용
관광	방어진 대왕암 바다소리길 조성	• 해양수산물 어촌뉴딜 300사업 과 연계한 해양관광상품 개발 • 동구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수산	수산물 선별기시설 지원	• 수산물(멸치) 적기 출하 및 상품성 제고로 유통·판로 확보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 해양수산자원을 연구·개발하는 대학, 연구소 등 인프라 구축
환경	해양쓰레기 정리	• 범시민 일제 바다 정화 행사로 쓰레기 수거

자료 : 울산 해양수산과, 2018·2019 주요업무계획, 2018; 울산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중간보고서 활용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울산의 해양수산 정책은 조선·해운산업의 고도화와 신·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울산신항의 기능재편을 꾀하는 등의 포괄적인 항만인프라 정비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지역의 산업경쟁력 제고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조선·해운산업 고도화와 유관 기자재산업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

과 울산항 LNG병커링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조선해양산업을 대체하고 지역경제의 재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구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항만공사-해양수산청과 MOU를 체결하는 등 청정한 해역환경 조성사업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수산·어촌 정책은 체험중심의 해양관광 기반조성과 어업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어촌재생의 일환으로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한 어항과 아름다운 바닷길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며, 방어진 대왕암 바다소리길 조성, 동구 하리항과 일산항 정비, 강동관광단지 조성 등이 사례사업으로 꼽힌다. 수산 측면에서는 수산자원연구소 설립으로 울산 인근 해양수산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표 3-6〉 울산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운 · 항만	주력산업 고도화·첨단화	• 조선·해양산업 고도화 • 조선해양 기자재 산업 지원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추진	• 동해가스전 활용한 부유식해상풍력단지 조성 추진 • 울산항 활성화(신항 개발, 인입철도 건설),
	항만기반 구축	• 울산신항 개발사업 •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 • 울산항 LNG병커링 인프라 구축방안 연구용역
해양 관광	연안지역 관광단지 조성	• 영남알프스 및 강동권 해양복합 관광단지 조성 •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울산안전체험관 착공, 브로로 테마파크·리조트 건립 MOU 체결)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방어진 대왕암 바다소리길 조성
수산 · 어촌	수산·어촌 경쟁력 강화	• 바다숲 조성(2개소, 5ha), 어촌자원복합산업화(2개소), 어항 내진보강(TTP 1,092개) • 정자활어직매장 건립('18년 1월~6월, 30억원) • 어촌종합개발(진하, 평동, 강양, 송정, 나사 어촌계) • 수산자원연구소 설립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양 환경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 항만구역 대기환경 개선 MOU체결(항만공사, 해양수산청 등 협약체결) •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사업 • 해양생태복원 폐기물 수거
	환경거버넌스 구축	
	연안 환경정비	

자료 :울산 해양수산과 , 2018· 2019 주요업무계획, 2018; 울산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중간보고서 활용

제2절 도의 해양수산 현안 및 정책과제

1. 경기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⁴²⁾

경기도는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여 해양레저와 어촌관광의 시설과 접근성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도내 연안 5개 시지역(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평택시)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청년층 유입과 신규 해양레저·관광기반시설이 우수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전국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수도권(27,824천명)에는 해양레저·어촌 체험관광의 주요 수요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해당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357.2km에 이르는 경기도의 해안선을 따라 안산어촌민속전시관, 누에섬등대전망대, 대부도, 월곶포구, 평택호관광지, 제부도(모세마을, 갯벌체험), 궁평항유원지 등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기지역은 아시아 3대 보트쇼 중의 하나인 경기국제보트쇼(KIBS)를 매년 개최하여 해양레저산업과 인력을 육성에도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42) 2018 해양수산 전국 대토론회 중 경기도 토론문을 재정리

반면 높은 수준의 해양레저 잠재수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해양레저·어촌관광 관련 프로젝트가 단순화되어 있는 관계로 해양관광 상품화에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 육성계획(19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항만 분야에서는 평택항의 화물유치와 항만산업화를 위한 인력육성 등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평택항 화물유치 확대를 위해 선사·포워더를 대상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물류창고임대와 운영대행사 선정, 중소수출기업 등 물류비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항만의 효과적 운영 측면에서 이용자 One-Stop 항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국내·해외 포트세일즈 강화와 온·오프라인을 통한 항만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택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종합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택항 마린센터 관리와 해운·물류 분야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해운물류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매칭 상담회 등을 통한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어촌·어항 관광 인프라 구축, 수산양식과 가공산업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지목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방어항 정비,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어촌체험관광시설 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시흥갯벌공원 조성, 선감체험마을, 선감·종현·풍도·백미리 등 어촌체험마을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3-7〉 경기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항만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지원	•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항로개설 추진 • 해운·항만 종합행정지원센터·평택항 마린센터 운영 • 해운·물류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항만	평택항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1단계) 완료 •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추진(2단계) 추진
해양 관광	해양레저 기반구축 및 활성화	• 제부 마리나항 건설, 제부도 內(경기만 마리나 사업 일부) • 안산 해양레저 아카데미 사업(시화호 뱃길 조성)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 화성 해양아카데미 운영
해양 환경	해양재난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 유류저장시설 등 해양시설 관리 및 해양안전 대응체계 확립
	해양생태계 보전	•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운영 • 경기도 해역 환경 재생 연구 용역
	기후변화 대비 연안정비 및 갯벌 보호	• 연안침식모니터링 방아머리 구봉도 등 6개소 • 안산 방아머리지구 친수공간조성 등 연안정비사업 • 해양보호구역관리(시흥 안산 갯벌), 2개소
	아름다운 섬 지원	• 도서민 삶의 질 향상 도모사업 추진
수산 · 어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육성	• 인공어초시설 인공산란장 및 어도설치, 치어방류 • 유해생물 퇴치 및 외래어종 수매처리, 어장정화 및 낚시터 정화
	어항 ·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	• 지방어항 정비 및 유지관리, • 전곡항 어촌관광단지 및 수산물센터 건립 • 화성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 관광시설 조성
	수산양식과 가공산업 활성화	• 친환경어업 패류양식 경쟁력 강화 및 아쿠아펫랜드 관상어 생산단지 조성 • 내수면 어업 및 고품질 친환경 김 양식어장, 수산식품산업 지원
	어업경영 안정화 및 어선사고예방	• 자율관리어업 육성과 귀어 귀촌 활성화 • 어업소득 보전 및 보험가입, 어선 노후장비 지원 • 어선사고 예방설비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 실용 연구 및 수산물 안전성 강화(해수면, 내수면, 양식장위 판장 등 유해물질 검사, 수산 전염병 예찰 등) • 경기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2단계 등 추진 • 어촌지도자 협의회 교육,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등 어업인 편의지원

자료: 경기도 농정해양국, 2018년 주요 업무보고, 2018. 2. 22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경기도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평택항의 화물유치, 어촌의 어업 외 소득 증진을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해양관광·레저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재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해양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주력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유인도서 스킨스쿠버 교실 운영(해양아카데미 활성화), 경기마리나 / 요트 통합관리 사업 추진, 평택항 크루즈 접안부두 조성, 해양복합낚시공원 조성이 있으며, 수도권과 1일 접근성의 강점을 살려 어린이 갯벌체험현장 등 체험형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표 3-8〉 경기도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항만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인프라 확충	• 평택항 포트 세일즈 통한 물동량 증대 및 항로 개척 • 항만배후단지 1단계 관리·운영 및 2단계 개발 추진
관광	해양레저 활성화	• 해양 레저기반 구축 및 활성화 •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육성계획 수립
안전	해양재난 예방	• 해양안전체험관 건립(안산 대부도)
수산	체계적 수산자원 증진	• 치어방류와 인공어초 조성 • 깨끗한 어장관리 및 유해생물퇴치 • 생산량 : '11) 16천톤 '13) 18천톤 '16) 22천톤
	수산자원 기반 확충	• 어항시설개발·정비 • 양식산업과 가공산업 활성화 • 고품질 수산물 생산기반 지원

자료: 경기도 농정해양국, 2018년 주요 업무보고, 2018. 2. 22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강원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⁴³⁾

강원도는 ‘평화의 바다’ 조성사업을 통해 해양수산 부문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⁴⁴⁾. 동해 북방한계선

43) 2018 해양수산 전국대토론회 중 강원도 토론회문과 업무보고자료 등을 재정리

(NLL) 기준으로 육지는 남북 20km, 바다는 동서 20마일(37km)을 평화 협력 특별지대로 설정되어 있으며,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어로 조업, 바다목장화 등 수산자원조성, 명태·다시마 자원회복, 내수면 토종어류 부화장 건립, 가리비·연어 양식장 개발, 수산물 가공·유통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북한경제수역인 원산 동방 90마일(167km) 해상에 국내 어선의 조업을 추진 중이며 연간 1,000억 원의 중국어선 입어피해 방지, 대체어장 확보와 오징어 등 회유성 어종 자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어로한계선 설정으로 인한 조업제약, 해안의 군사시설물 설치와 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에 따라 발전이 제한된 측면 또한 존재한다.

강원 동해지역은 지형특성상 해상시설물 설치가 어려워 양식어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연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어선세력은 2000년 이후 33.9% 가량 감소했으며(2000년 4,240척 → 2010년 2,998척 → 2017년 2,801척) 생산실적 또한 24.5% 가량 감소하였다(2000년 60,687톤 → 2010년 58,009톤 → 2017년 45,841톤). 이에 따라 강원지역 수산업의 쇠퇴와 어가인구 감소,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어촌 공동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는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해안의 해양특성을 청정 해양환경으로 차별화하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에서 비교우위를 지닌 수산물 생산과 청정해역의 가치를 부각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어·돌기해삼·가리비·우렁쉥이 등 경쟁우위 품목에 집중하고, 심층수 활용과 명태자원 회복 및 산업화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44) 강원도 환동해본부 보도자료, “강원도,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회의’ 개최, 2018. 7. 23.

또한 강원도는 풍부한 해양관광·레저자원과 동해안 접근성 개선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강원 해역은 요트 등 서핑의 최적지이자, 넓고 깨끗한 백사장과 아름다운 해안경관, 어촌체험마을 등이 입지하는 등 해양관광에 유리한 자원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서핑업체 70여개 중 41개가 양양군(58%, '16.9월 기준)에 위치하는 등 주요 해양관광 업체가 신설되는 중이다. 또한 속초국제크루즈터미널, 양양국제공항, 영동·동해고속도로 확장,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강릉고속전철, 동서고속철도 건설 등으로 동해안권 관광접근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반면 강원지역의 해안 침식은 심각한 수준으로, 강원 동해안 102개 해변 중 90% 이상이 침식우려해변으로 지목되는 등 체계적인 연안지형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환동해권을 둘러싼 국제교류의 활성화 및 급격한 변화추이 역시 강원도의 해양수산 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이다. 최근 동해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부각되고 북극항로 상용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강원을 중심으로 한 LNG 생산단지 기반구축과 국제 크루즈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속초·동해~러시아·일본 간 항로개설에 따라 수산물·교역·여객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극의 해빙시기에 따라 강원을 기점으로 북극을 포함한 오호츠크해, 베링해까지의 원양어업과 자원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9〉 강원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남북협력	평화의 바다	• 지속적인 남북협력교류를 위한 동해안 '평화의 바다' 조성 • 북한 원산 해상어로 추진과 어족자원 조성 등
수산	수산식품 선진화 체계구축	• 2018~2022(5년간)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산지가공, 직매장, 해양수산복합타운 조성(12개소) 예정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수산	연어 양식산업 클러스터 조성	- 연어 외해 양식은 성공, 반면 기반시설 부족·양식기술·경험·전문성 부족 등으로 양식연어 생존율 저하 → 계획생산 차질 - 외해양식 설계·시공·양식 등 기술표준화 미확립, 초기 투자자금 과다소요, 자연환경 요인에 의한 리스크 부담 등 투자자 유치 한계 - 환경부,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 어종 지정(‘16.6월)으로 양식 용 발안란 수입 불가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양식장 첨단관리 시스템 구축	- 양식장 대부분(87%) 생산성이 낮은 양식(지수식, 유수식)에 의존, 불안정한 종자수급 등으로 생산기반 취약 - 도내 내수면 양식장은 소규모로 자부담 과중 등으로 첨단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기피
	명태 자원회복 및 양식 산업화	- 자연산 명태어미 확보 어려움, 인공어미 다년간 종자생산에 의한 우량 종자생산 지남 및 유전적 열성화 상존 - 명태양식 산업화를 위한 민간양식 기술축적 및 기반시설 부족 - 명태전문연구센터(‘19~’22), 290억원(국비) 건립 중 - 강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육성지원
	돌기해삼 브랜드 특화산업 육성	- 동해안 돌기해삼은 품질이 우수하여 중국에서 최고 인기·고가,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 필요 - 어업인 생산소득 증대를 위한 어린해삼 방류, 건해삼 고부가가치 품질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구축, 수출 선도기업 육성
해양 관광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	- 서핑 편의·경관·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거점 도시화 및 활성화 가능 - 양양이 서핑 명소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광객 급증, 편의시설 부족 - 파도 등 자연여건은 좋으나, 체류 가능한 휴식·문화 요인 부족 - 국내최초 서퍼들의 Line-up 및 관광을 위한 기능성 비치피어 조성으로 서핑특화 공간구축 필요(골드비치 랜드마크, 비치피어)
	속초항 국제크루즈 수용 기반조성	- 세계 크루즈 22만톤급 대형화 추세로 속초항 기반시설 확충 시급 - 동계올림픽 이후 국제 대형 크루즈선사 입항 희망, 인프라 부족으로 접안 곤란 - 속초항 기본시설 수정계획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
해양 관광	바닷속 체험활동 (마린워킹) 대중화	- 스킨스쿠버 보다 간단한 해양레저기구로 바닷속 수중레저 체험관광 대중화 필요 - 바닷속 체험활동 대중화사업 추진계획 수립(‘18.01), 현재 효과분석 사업 추진 중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	- 사계절 해양관광 다변화 필요 - 사계절 테마해변 조성 세부계획 수립 완료(‘18.01) 후 시범사업 대상지 심사 중 - 관동 해중전망대 조성 및 가족친화형 해상낚시공원 조성
	스토리텔링이 있는 어촌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	- 거진항 어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이 있는 고성지역 대체산업 육성 - 동해안 고유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과 전승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어촌관광 활성화 필요 - 현재 어촌생활사 조사 및 어업인 생애사 발간 중, 이후 콘텐츠 별(해녀 생활사, 실향민 정착사) 도서발간 예정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해양 산업	해양헬스케어 산업기반 조성	- 강원도형 해양헬스케어 산업기반 마련 필요 - 해수부,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예정 - 동해시·고성군, 해양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연구 필요
연안 관리	제3차 연안정비기 본계획 추진	- 연안침식모니터링 지속 추진 -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 - 최적화된 연안침식방지 시설과 대안 마련 등 추진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올림픽 이후, “국제 강원” 추진을 위한 「新 강원」 추진전략 실행계획, 2018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강원도의 주요 해양수산 정책은 남북협력사업, 수산업과 항만·물류 기반의 선진화,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강원지역은 ‘평화의 바다’ 조성을 통한 남북협력 추진, 동북아 크루즈 전진기지 조성, 새로운 해운항로 개발 등 해운물류 분야의 성장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는 정책을 계획 중이다.

다음으로 친환경·에너지 저감 양식산업, 주요 품종에 대한 자원회복 사업과 가공·유통체계의 선진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는 해양레저특구 조성을 위한 해양레저서비스업 육성이 중점 추진 중이다. 더불어 항만·어항과 연계한 해양관광추진과 배후지역 활성화로 강원도를 해양관광의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표 3-10〉 강원도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남북 협력	평화의 바다 조성	- 우리 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근거 마련, 접경해역의 조업제한 완화 -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남북 동해안의 공동발전 추진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양 관광	해양레저 특구 지정과 사계절 해양관광 추진	• 양양서프시티 조성을 위한 골드비치랜드마크 및 비치피어 추진 • 서퍼의 해양레저 지원체계 마련 • 속초 크루즈항의 활성화 추진 • 강원형 해양헬스케어 시범단지 조성 추진
수산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	• 친환경, 에너지 저감 양식어업 생산기반시설 구축 • 수산식품산업·유통기반 선진화 체계 구축 •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해운	동북아 해운물류 거점 육성	• 동북아 크루즈 전진기지 조성 및 신 해운항로 개척 • 수출입화물유치추진단 구성·운영 등 국제해운물류 성장 기반 구축
항만	항만기능 특성화 인프라 구축	• 속초항 : 크루즈 운항 인프라 확충 • 삼척항 : 공원, 경관시설 등 해양친수시설 조성 • 주문진항 : 복합공간 조성
연안 관리	제3차 연안정비기본 계획	• 침식심각해변의 최적 침식방지시설 설치 계획 추진 • 연안방재

자료: 강원도 환동해본부, 올림픽 이후, “국제 강원” 추진을 위한 「新 강원」 추진전략 실행계획, 2018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충청남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⁴⁵⁾

충남은 해양이용의 다양화·복합화 등에 따른 해양공간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주요 해양수산 정책현안으로 삼고 있다. 해양이용·개발의 수요가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항만,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해양생태 보전 등에 관한 요구가 커져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심화되는 실태를 반영한 결과이다. 특히, 충남은 해양공간(연안·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기반 구축과 항만·도서 지역의 계획적 특화개발 추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충남 해양공간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전 정보수집 및 거버넌스 구축

45) 2018 해양수산 전국대토론회 중 충남도 토론회와 충남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자료 등을 활용해 재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화항만 육성대상으로는 당진항, 대산항, 보령신항, 당진 왜목마리나항만 등이 검토 중에 있으며, 해양 기반의 새로운 지역혁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연안·해양지역별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미래 해양도시 육성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충남은 서해안 공동 상생발전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상, 기후변화 등 서해안을 둘러싼 가치와 발전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조사·연구 및 정책협업을 위해 중앙-연구기관-서해 5개 시도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서해안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상생 발전협의체를 구상 중이다. 주요 과제로는 서해안의 수산자원과 해양생태환경 보전, 해양레저·관광, 해양신산업 고나련 정책 협업과 법제개선 사항이 논의되고 있다.

해양관광·레저 측면에서는 관광수요 증가로 해양관광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충남은 중국·수도권과의 근접성, 다양한 해수욕장(대천, 춘장대), 수려한 도서자원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 개발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보령 머드엑스포, 당진 왜목 마리나, 원산도-안면도 연륙교 개통('19) 등이 관광사업을 위한 주요 인프라로 조성되었고,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치유센터 유치('19)를 통해 체험·관광기반 구축하고 있다. 또한 마리나항 개발(왜목, 안흥 등 10개소), 비즈니스 센터 건립(요트임대, 수리, 교육, 체험), 서핑 안전교육센터 건립(태안), 해상관광공원 및 낚시터 조성(홍성, 보령, 서산) 등을 활용한 서해안 레포츠 드림라인을 조성 중이다. 더불어 『보령 해양머드엑스포』개최(유치 확정시), 해상관광 테마파크 조성(태안), 연안 크루즈 항로(영종도~가로림만), (장기) 크루즈 기항지 개발(보령신항) 등을 통해 해양관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해양레저스포츠 안전, 해수욕장 안전장비 등 해양관광·레저 안전문제를 정책현안으로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서관리 측면에서는 찾아가고 싶은 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의 33개 유인도서는 육지로부터의 접근성이 취약하고, 소득 및 생활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충남은 해당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도서개발사업의 성과 진단과 주민·관광객의 수요 분석, 섬의 식생·수산·역사문화·관광자원 등 종합적인 자료수집 및 조사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살기 좋은 원산도(‘16~’20), 맛과 멋의 해삼당화 장고도(‘17~’20), 해프는 바닷길 웅도(‘17~’21) 사업이 그 사례이다. 도서주민의 접근성 개선사업으로는 대천~외연도 연안여객선 운항 등 8개 노선 접안시설 확충 및 증편으로 도서-육지 1일 생활권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소규모 SOC, 체험마을, 어촌 공동체 육성 등 각종 사업의 공간적 통합과 연계를 통해 섬의 특성에 따른 종합적인 맞춤형 개발·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수산·어촌 분야에서는 어업 외 소득증진을 위해 개별 어촌의 강점을 살린 해양·어촌체험 관광 확대가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충남 연근해의 수산자원 감소로 어업 외 소득 향상을 위해 어촌 체험형·체류형 관광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반면, 어촌은 어업 전업인이 많고 고령화로 인한 경영능력의 한계와 숙박·편의시설 부재 등이 관광활성화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해양역사문화 기초조사, 해양수산 탐방코스 발굴 등 스토리 발굴, 도로 및 숙박·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접근성·편의성 향상 병행(가로림만, 천수만 등), 수협(어촌계)·어민과 협력하여 숙박·휴식, 역량강화, 관광서비스 지원사업 등 어촌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10개 어촌테마·체험마

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소규모 어항·포구 개발과 우수 어촌마을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 자율역량 강화 지원정책을 계획 중이다.

충남은 자원·환경 측면에서 수산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충남에서는 수산자원 및 어업생산량 감소, 수산업 침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도 차원에서는 4대 명품(바지락, 김, 굴, 해삼), 첨단 양식장(19개소), 인공어초, 연안 바다목장, 종자방류 사업 등 경쟁력 있는 4대 전략품종 육성, 어장개발 및 서식지 조성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라사 수산+가공·유통+체험·관광 등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스마트 첨단양식을 지원하고자 정책개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연근해 업종 간 갈등관리, 자율관리어업 내실화를 위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적극 활용하고 「어촌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개설 등 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해양환경 측면에서는 보령호·홍성호 등 인공담수화의 환경개선, 육상기인오염원의 유입차단,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지원 확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갯벌복원사업 등과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충남의 연안은 매립·간척으로 갯벌면적 감소, 화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연안·하구환경이 악화된 반면, 연안·하구 및 갯벌은 해양생물의 서식, 수산물 생산, 해양경관 측면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는 해양보호구역(가로림만, 서천 갯벌, 태안 신두 사구), 갯벌복원(서천 유부도, 서산 고파도리, 서산 고파도리, 태안 근소만)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문화·관광·힐링을 연계한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충남은 환황해 해양역사문화를 통해 바다의 가치를 제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험한 바다, 무서운 바다, 더러운 바다’가 아니라 해양역사문화를 통해 ‘이야기가 있는 바다, 삶이 있는 바다’로 인식할 수 있는 해양역사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발굴과 보존, 홍보 및 교육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해양역사 문화자원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전문가 양성,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 지원정책 등이 절실하다.

또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해양 신산업 육성은 충남의 중장기적 정책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충남은 갯벌(머드), 염전, 해수 등 풍부한 자원, 양호한 경관·접근성, 해양치유산업 최적지로, 해양치유 산업을 미래 해양신산업의 축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해양치유 시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항생태산단·국립생태원과 연계한 해양바이오산업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립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건립, 해양바이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해양 고세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수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표 3-11〉 충남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해양 산업	해양헬스케어산업 (치유산업) 육성	• 해양치유센터 건립('18~'19, R&D) • 의료·치유·관광을 결합한 융복합 「해양치유 시범단지」 조성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 국립 해양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추진 • 해양바이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해양 고세균을 이용한 「해양 바이오수소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 서해안 레포츠 드림라인 조성 • 해양레저관광 기반 및 저변 확대(보령, 태안, 영종도~가로림만 등) • 해양문화 원형조사·발굴 및 관광자원화 방안 연구(역사문화원 협업)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수산 ·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및 어업질서 확립	· 어민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강화 · 어촌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개설(갈등관리, 자율관리어업 내실화)
	수산자원의 안정적 생산 및 서식기반 구축	· 친환경 스마트 양식단지, 대규모 내수면 양식단지 및 해상 특구 조성 · 수산종자산업 발전 방안 마련
	어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 증진	· 여성어업인 삶의 질 개선방안 종합 대책 수립 · 어촌특화지원센터 활용, 어민의 역량강화 확대(경영·기술 컨설팅)
	고소득·신품종 개발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신규 종자 연구, 현장맞춤형 양식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수산물 안전조사 장비 확충을 통한 자체 분석체계 구축
	수산식품 인프라 확충 및 소비수출 촉진	· 품질위생형 유통장 조성 및수산물 로컬푸드 마켓 조성 · 마른 김 시설개선,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어촌·어항을 지역 경제핵심공간으로 육성	· 충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과 연계 『어촌재생사업』 추진 · 전통어항·포구 복원, 어촌 테마마을 조성 · 어촌 전통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수산 · 어촌	귀어·귀촌 활성화	· 충남 귀어·귀촌지원센터 개소, 귀어학교 개설 · 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유치('19), 체계적인 귀어인 관리 체계 확립
해양 환경	연안·하구 및 갯벌의 복원·보전	· 해양보호구역지정 확대(근소만, 소항사구) ·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 달린 하구·담수호의 해수유통 우선추진(보령호, 홍성호, 부남호 등)
해양 환경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선진화	· 민간자율 연안·섬 등 취약지역 수거·관리 강화, 수거인력·장비 확충 ·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분석 및 처리비용 분담, 저감모델 연구 중 (장기) 「충남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 검토
항만 · 물류	환황해 물류 거점항만 조성	·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금년 내 완료(해수부·대산청·서산시·해경·CIQ기관과 협업) · 보령신항 부지 조성 및 화물부두·마리나·배후부지 조성 ·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추진 · 충남 신해양도시 모델 연구
도서	누구나 살고 싶고, 찾 아가고 싶은 섬 조성	· 테마가 있는 섬 마을조성(헬스케어, 친환경에너지, 전통문화, 체험, 레저관광 등) · 제4차 도서종합개발 계획 추진
해양 재난	해양재난 예방 및 안 전관리 강화	· 안전체험교육 확대(해양레저 체험교실 등) · 제도개선(재해보험 의무화 등) 및 레저선박(낚시어선 등) 안전 종합대책 마련 ·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도·시군·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자료: 충남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 2018. 6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충남은 해양·어촌관광·문화사업, 해양바이오산업·해양치유산업 등 해양신산업 추진기반 구축, 전통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생태 보전·복원 등의 정책추진에 도내 해양수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충남 고유의 어촌경제·생태·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추진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발전정책이 개발 중에 있다.

이어 해양신산업 발굴 특면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생태산단, 국립생태원 등 해양생물자원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정책사업이 진행 중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생태분야에서는 단한 하구환경의 생태·환경개선, 가로림만·천수만·근소만 등의 해양생태 보전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축제식양식장, 화력발전소 유희부지를 활용한 스마트양식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2〉 충남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양 어촌 관광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확충	• 어촌재생사업 등을 통한 어촌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 • 서해안 레포츠 드림라인 조성 • 연안·섬 관광 인프라 조성 추진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섬 개발) • 다기능 명품어항 육성 • 낚시어선 등 안전관리 강화
해양 산업 · 항만	해양자원을 활용한 미래 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 해양치유산업(헬스케어) 육성 • 미래 해양수산정책 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 충남권 내 항만의 특화 개발
수산 · 어촌	안정적 수산자원 생산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어업기반 구축 • 4대 전략품종의 생산기반 구축 • 미래 수산인 육성 및 수산물 안정성 확보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수산 · 어촌	수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수산식품 산업화 인프라 강화 및 시장 확대 ·친환경 스마트 해수면·내수면 양식단지 개발
해양 생태 · 환경	해양환경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활성화 및 피해민 지원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저 저감 ·연안하구 및 갯벌 복원·보전 ·육상기인오염원 저감 및 해양쓰레기 수거·관리체계 개선 ·기념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유류피해민 안정적 지원

자료: 충남 해양수산국, 해양수산물 주요 업무보고, 2018. 6

4. 전라북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⁴⁶⁾

전북의 해양수산 정책여건은 새만금사업, 고령화, 해양환경 변화 등에 의해 약화된 수산·어업기반체계에 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2016년 기준 어가수는 2006년에 대비 30.4%, 어업인은 46.2% 감소하는 등 어업인구의 감소와 어업인력의 제한적 이용 등으로 어촌지역사회가 쇠퇴고 있다.

전북은 어업인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한 활력 넘치는 어촌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촌의 특성과 다양한 자원의 연계개발을 위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투자대상을 전체 일반농산어촌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어촌·어항 등 생활맞춤 SOC에 대한 투자확대 및 시설 재생으로 어촌뉴딜 300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마을 특화개발, 가공공장, 특산물 레스토랑 및 판

46) 2018 해양수산 전국 대토론회 중 전북도 토론회문과 업무보고자료 등을 재정리

매장, 상품개발 등을 진행 중이며, 고부가가치 생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하고 있다. 더불어 장비·보험료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어업활동 보장, 어촌관광·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북의 연안·어촌지역에는 수산물의 순환적 생산지원을 위한 해양생태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의 어장은 해양환경 악화, 자원 남획 등으로 인해 수산물생산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전북은 연안 해역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수산자원 관리 측면에서는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실현과 서해안 주요 소득어종의 자원량 감소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대응하여 전북에서는 인공어초 설치, 연안바다 목장조성, 바다 숲 조성 및 주꾸미 산란·서식장조성 시범사업 등 바다 생태계 복원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해수온도 상승과 환경오염 등으로 서해안의 대표적 어종이 감소해 어민소득에 직접적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북은 전국 상위권의 내수면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내수면 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의 내수면 양식장 면적은 250ha로 전국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전국 1위, '17년 기준), 대표 양식어종은 미꾸라지(전국의 76%), 향어(전국의 72%), 메기(전국의 50%), 동자개(전국의 49%) 순으로 분포해 있다. 더불어 민물고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내수면 양식의 마케팅 지원, 유통·가공·체험·관광을 동시에 활성화하고 내수면 산업의 활력 도모하고자 유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항만 측면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이와 연계한 해양 신산업

확대, 군산항 활성화 대책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전북은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2조 5,482억 원을 투입하여 중국 수출입 거점항만인 새만금 신항만을 건설하고,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확충, 새만금 공공매립 기본구상 구체화 등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의 조기 건설을 추진 중이며, 새만금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조성 및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새만금 관광명소화를 목적으로 주요 관광인프라 조성 및 고군산군도 해안·섬관광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다.

군산항 활성화 대책으로는 금강하구 종합관리체계와 연계하여 군산항의 항내매물 문제를 해소하고, 군산항의 기능재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군산항의 항로수심 및 물동량 확보를 통해 군산항의 활성화와 중국선도 간 카페리 항차의 증편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군산~새만금~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 신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3〉 전북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수산 어촌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육성과 어촌관광 활성화	-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 -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창출을 위한 어촌·어항 관광 추진 - 귀어·귀촌 활성화와 내실화 추진
	내수면 어업 활성화	내수면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내수면 산업 활력 도모
매립지 활용	새만금 핵심기반시설 확충	- 새만금 광역연계 도로망 확충 - 새만금 내륙연계 고속도로 건설(새만금-전주 고속도로)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개발활성화 및 투자유치	- 속도감 있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 구체화 - 새만금사업 추진기관 현장배치 - 농생명용지·방수제·산업용지 등 내부용지 조성 가시화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매립지 활용	새만금 투자유치 성과 창출 및 한중 경험추진 재개	• 투자유치 협력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투자협약 MOU 7개사) • 새만금 한중 경험단지 추진 재개 지속 건의
항만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군산항 활성화	• 새만금신항만의 진입도로, 호안공사 접안시설 규모 확대 • 군산항의 항로수심 및 물동량 확보로 군산항 활성화 • 군산~중국선도 간 카페리 항차 증편 • 컨테이너·자동차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 및 포트세일
관광	새만금 관광기반시설 확충	• 새만금 관광 명소화를 위한 핵심기반 조기 구축 • 고군산군도 관광선도사업 타당성 용역 • 새만금박물관 착공과 관광홍보 이벤트 개최
	고군산군도 관광 활성화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에 따라 군산 근대문화역사-새만금-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 신해양관광벨트 조성 • 새만금·해안 관광거점조성 용역 추진
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산업 육성	• 기업 및 연구기관 집적화를 통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지원 및 수요창출 •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조성 및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

자료: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18; 전북도 도정계획, 2018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전북의 해양수산 정책은 새만금의 활용가치 극대화 방안과 군산항의 재활성화, 내수면 산업 활성화 측면에 주력하고 있다. 새만금의 활용 측면에서는 새만금 신항만 조기 건설과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된 해양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군산항 문화유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양근대문화유산 보전 등을 위한 군산 근대항만박물관 조성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내수면 어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내수면어업의 6차산업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과 더불어 해면·내수면 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소득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표 3-14〉 전북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새만금	새만금 공공매립 추진	• 속도감 있는 새만금 공공매립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새만금 투자유치와 한중 경협단지 추진 • 새만금 신항만 건설 • 최대 수상 태양광 및 해상풍력 단지 조성 추진 • 고군산군도의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항만	군산항 활성화	• 군산항 매몰방지 대책 마련과 금란도 지속가능 개발 • 군산내항 재개발과 군산 근대항만박물관 건립 • 군산항과 군산 원도심과 연계한 재생사업 추진
수산	수산 전략품종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	• 수산 전략품종 자원강화 및 생태계 복원 • 신품종시험연구로 양식 활성화
	내수면어업의 생산체계 개선 및 소득기반 마련	• 전북 내수면어업 및 6차산업화 계획 수립 •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지원
	양식산업 경영안정 및 부가가치 제고	• 고부가가치 전략 품목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유통단계 축소로 수산식품 공급 체계 구축
	농수산물 수출 확대	•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농식품 수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시장개척을 위한 마케팅 강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육성	•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 및 자원관리 강화로 생산성 향상 도모
어촌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어촌지원	• 수산업경영인 육성 및 현장중심 수산 신기술 지도·보급 • 해난사고예방 등을 위한 이동수리소 운영 및 자율관리 공동체 활성화
	어업인 복지향상 및 안전강화	•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이탈방지 및 어촌의 수산업 존속과 어업경영지원책 마련
	활력 넘치는 어촌개발	•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항의 다기능화 • 어촌관광·레저 프로그램 운영
해양환경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	• 금강하구 종합관리체계 구축·이행 •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로 해양환경 보호 • 고창갯벌, 곰소만 등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도모

자료: 전북도 농축산수산물국,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18; 전북도 도정계획, 2018

5. 전라남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⁴⁷⁾

전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 생산력을 지닌 지역으로,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성이 현안으로 주목되고 있다. 전남은 수산물 생산액은 2017년 기준 2.7조 원대로 성장하였으며 수산물 생산량 또한 전국 57%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산가공 생산량은 전국의 26% 수준에 그치는 등 저부가가치형 원물 판매에 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의 신속한 가공·처리·저장·유통·수출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더불어 적정어획 관리, 어업자원 증가, 양식어업의 규모화·스마트 첨단양식화, 수산재해의 신속 대응 등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전복, 미역 등 어장개발을 억제하고, 해역별 특성에 고려한 지역특화 품종 개발, 노후 양식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양식의 규모화·현대화가 요구된다. 실제로 전남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으로 인해 어업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갯녹음 면적 또한 전체 해저암반의 24%로 확대되는 등 자원·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어업인 자율공동체를 구성해 어장휴식년제, 어획량 축소 등을 실천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여름철 적조 및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예측가능한 어장과과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방제로 유해성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47) 2018 해양수산 전국대토론회 중 전남도 토론회와 전남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2018.8)자료 재정리

18~22년, 200개소)과 양식어장 재배치('14~'18년, 1,089ha), 어장별 사육량 조사, 양식물 조기출하 유도, 중점시설 점검 등 사전예방 작업 등이 어장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지원 사례이다.

또한 전남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물 가공·처리·저장 기반시설 확충과 유통·수출 등 인프라 구축, 창업투자 확대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전남은 수산업 기반확충을 위해 수산물 가공산업 5개년계획에 따라 가공·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산지 거점유통센터 추가 조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어 지역·품목별 생산·유통·물류·관광기능 연계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유통센터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수산 분야 창업투자 확대 측면에서는 2018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공모를 통해 창업·마케팅, 신제품 개발 등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남지역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 내 어업활동은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거나, 저임금·고강도 노동에 따른 청년층의 어촌정착 기피 문제 등으로 인한 인력확보가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의 어가인구는 전국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010년 대비 19.5%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2년 715명에서 2016년 2,102명으로 193%만큼 증가하였다. 이에 전남은 양식어장의 청년 고용지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유희수면 활용 창업어장 개발 등 청장년층의 안정적인 귀어·귀촌을 위한 재정지원 및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전남은 전남형 어촌뉴딜 300 모델 개발을 통해 어촌의 재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소) 중

883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2,295개 어항 중 1,099개소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어항 중심의 어촌재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촌의 정주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해양레저·관광 측면에서는 섬, 갯벌, 해변, 마리나항만, 해양보호구역 등 전남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거점 조성과 해양관광·힐링 네트워크 구축이 주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남은 미래성장 동력으로 ‘섬·어촌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12개 섬별로 테마를 정해 휴대전화 난청지역을 해소하거나, 탐방로 조성, 폐교·빈집을 카페 또는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섬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대상 6개 섬에서 관광객이 4배 가량 증가하였으며(2014년 270 → 2015년 570 → 2016년 851 → 2017년 1,066 천명),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간 조직인 “섬 발전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전남은 지역특성을 살린 해양관광자원 시설 조성, 어촌체험관광지 조성,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확대 등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지원 중에 있다.

또한 전남은 연안여객선 이용객 천만 시대를 맞아 접안시설 확충과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전남에서는 20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911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 소규모 항포구에는 여객선(모선)의 직접 접안이 불가능해 소형선박을 이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뿐만아니라, 전남지역 유인도서 276개 중 여객선과 차도선이 운항하는 곳은 148개 수준에 불과하다(차도선(129), 여객선(19), 도선(43), 미운항(48), 연도·연륙교(37)). 이에 따라 전남은 유인도서의 무인화 방지와 도서지역 1일생활권 구축, 뱃길 대중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지속적

으로 주장하고 있다.

해양관광 측면에서는 요트마린 실크로드 조성(23개항 4개로드, 2,202선석), 여수 웅천의 거점형 마리나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국제 파워보트 대회, 전국 윈드서핑 등 8개 대회, 목포 평화광장 수역 내 해양레포츠센터 건립 등이 추진 중에 있다.

전남 여수의 순천만 등에는 갯벌의 생태적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폐염전, 폐양식장 등 훼손된 갯벌지역을 복원하는 사업과 더불어, 순천만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순천·보성·신안 등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등 전남 갯벌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사업을 도모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항만은 소형선박 건조사업의 다각화와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추진을 통해 항만경쟁력 제고와 다기능 항만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조선산업의 활력 회복을 목적으로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구축, 레저선박부품기자재 고급화, 중소형선박 공동건조 기반조성 등을 추진 중이며, 해경 제2정비창을 유치해 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항만시설 확충과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동북아 물류선도지역으로 육성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남에서는 노후항만 현대화, 해역준설, 석유화학 돌핀시설 건설, 묘도 항만재개발 사업 등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이어 목포항은 자동차·철재(신항), 마리나(내항), 수산(북항), 해양관광(북항) 등의 기능재편을 통한 특화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어항·항만에는 자연재해에 강하고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기능 항만개발 사업이 예정 중에 있다.

아울러 전남 해양수산 부문의 신성장 선도사업을 발굴하고자 수산 식품 클러스터 유치,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양치유산업 실용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수산식품 클러스터는 전국 최대 생산량 (90%)을 차지하는 해조류 특화품목 중심의 종합단지형 수출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둘째, 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천연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 등 해양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해조류, 해양기후, 해수 등을 기반으로 해양 치유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발전 견인사업으로 육성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표 3-15〉 전남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수산	여름철 수산분야 재해피해 예방	• 여름철 적조 및 고수온현상, 해파리 고밀도 출현 등에 대응지도 • 해파리 피해예방을 위해 구제작업 지속 실시
항만	신마항 화물선 운항 중단에 따른 대응상황	• 강진 신마항 ~ 제주 서귀포항간 화물선 운항재개 및 안전 항로 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운영 • (쟁점사항) 어촌계, 선사 등 이해관계자 갈등 • 선사, 어민과 함께 항로 안전성 검증, 안전항로 확보방안 마련
도서	전라남도 섬 발전 지원센터 설립·운영	• 섬 발전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행정 · 법령	사파리 아일랜드 매입부지 활용 방안	• 민자유치 실패 등으로 '14. 9. 중단된 「사파리 아일랜드 조성사업」 매입부지에 대한 환매요구 민원 대응을 위한 처리 대책 필요 • 취득일 대비 토지가격 상승으로 환매가격 협의 난항 예상
	해양수산분야 법령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현장민원, 어업인 단체 등을 통한 규제 및 애로사항 발굴 • 시군, 실과, 과학원 등 현장중심 개선과제 발굴 • 현장사례 중심으로 제도개선방안 마련 중앙부처 건의

자료: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2018 업무계획, 2018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전남의 해양수산 정책방향은 수산전략품종 개발과 양식어업 집중 육성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가능기반 조성, 지역특화형 어항·어촌·항만·도서·갯벌 발전전략 마련, 미래 해양신성장사업 기반 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수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전략품종 육성을 통해 수산업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수산물의 고차가 공과 수출판로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철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한 어패류 양식장 피해예방 및 대응체계 또한 수산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안이다. 더불어 전남은 높은 풍부한 해양수산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신성장산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표 3-16〉 전남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수산 · 어촌	수산자원의 고소득기반 구축	• 양식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기후변화 등 미래대비 전략품종 개발·보급 • 수산물 고차 가공 및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 • 수산물 수출기업 육성 및 어가 경영안정 지원 • 천일염 가격안정과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어업환경 조성	•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기반 구축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깨끗한 바다환경 관리 • 수산재해 예방 및 안전조업 강화
	어촌공동체 회복	• 살기 좋은 어촌 정주여건 조성 • 미래 농어업인 육성
해양 관광	관광인프라 확충	•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 기반 확충 • 생태문화자원을 연계한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
항만	항만 경쟁력 제고 및 다기능 항만 개발	• 해양항만 SOC 확충으로 지역경제 뒷받침
해양 산업	해양신산업 육성	• 해양수산 신성장 선도산업 육성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조성 본격화

자료: 전라남도 해양수산국, 2018 업무계획, 2018

6. 경상북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⁴⁸⁾

경북은 21세기 해양시대 선점을 위해 2018년 1월 환동해지역본부
를 출범하고, 내륙과 해양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북의 환동해지역본부는 해양수산·
에너지의 행정·정책수요에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5개 시·군
의 정책 기획·이행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다.

경북은 주요 해양수산 경쟁력으로 청정해역, 해양과학 R&D 기관
입지, 풍부한 해저자원(광물, 생물자원) 등을 꼽고 있다. 경북의 청정
한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는 지역 수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
며, 이에 강도다리, 조피볼락, 해삼, 전복, 우렁챙이 등 전략양식품종
의 육성과 청정한 환경에서 자란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식품
개발·생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게(전국생산량의 80%), 붉
은대게, 오징어, 가자미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보유한다는 장점이 있
다. 심해 해양자원으로는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인산염암 등 해양광물
자원, 해양심층수, 암반수 등이 경북 해안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관광자원 측면에서는 해수욕장, 해안누리길, 축제, 어촌민속 등 다
양한 연안 관광자원과 마리나항, 해양레포츠센터, 바다낚시공원 등
다양한 해양관광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경북은 청정 동해안 해양레
저·휴양벨트를 조성하는 일환으로, 후포 마리나항만을 환동해 거점
형 국제 마리나항만으로 개발함으로써 해양관광산업 육성, 요트 관
련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훈련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울
진 거북초 해중공원, 울릉 남양 친수공원, 해파랑길 등대주변 체험형

48) 2018 해양수산 전국 대토론회 중 경상북도 토론회와 업무보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정리

해양문화공간 조성, 영덕 강구연안 유희지 개발, 포항동빈내항 랜드마크 조성과 경주 주상절리 해양경관 조성 벨트, 영덕 고래볼 해양복합타운 조성 등 지역별 주요 관광자원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의 해양과학 R&D 역량으로는 도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국립수산물과학원 독도연구센터, 사료연구센터, 경북해양 바이오산업연구원, 포스텍 등 우수 연구인력과 기술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경북은 이러한 해양과학 연구·교육역량을 바탕으로 해양과학교육 벨트를 구축하고, 해양과학기술산업 선도와 해양신산업 육성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과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국립청소년해양센터) 등을 연계하여 경북을 해양과학연구 및 교육 중심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아가 해양과학교육벨트를 바탕으로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실용화 연구추진(‘18~’19)’, ‘울진군 평해읍 월송정 주변에 해양치유 R&D 센터와 치유센터 건립(‘20~’22)’ 등 해양신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지리적으로는 포항구항, 포항신항, 영일만항 등 포항항을 통해 환동해 및 북극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내륙으로는 상주~영덕과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등 내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도시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경북은 해양수산 부문의 강점을 기반으로 2014년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역 차원의 종합적인 해양수산발전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산 측면에서는 오징어·대게 등 경북의 주요 수산자원에 대한 자원회복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해양환경 변화, 중국어선의 동해 북한수역 조업, 어린 오징어 남획, 불법 공조조업 등에 의한 오징어 자원량 감소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경북의 오징어 생산량은

2008년 91,416톤에서 2017년 27,427톤으로 약 70%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은 강원도 등 인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 어선의 북한 동해수역 입어에 따른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안정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업종의 업종전환 지원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게는 경북이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대표 어종으로, 불법조업(암컷포획, 통발어구사용 금지구역 및 금어기 조업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지역간·업종간 조업분쟁 등이 자원관리 측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자원회복사업 지속적 추진 및 조업규제 강화, 경영지원, 중앙정부와 연계한 TAC 제도개선 등이 요구된다.

또한 경북은 지역특화 양식품종을 육성하고 수산물의 6차산업화와 연계하여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양식 특화품종으로는 강도다리 양식을 고려하고 있으며, 강도다리 양식은 대부분 육상수조양식장에서 진행되어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는 이점이 있다. 정책적으로는 경북 강도다리 특성화 사업, 브랜드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양식업이 취약한 경북의 수산양식 분야 사업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차원에서는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방안이 주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경북의 수산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산지거점유통센터, 가공단지조성, 처리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이에 도 차원에서는 포항을 중심으로 수출가공업체 집적화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수산물 생산,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신항 배후단지 내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을 계획·제안 중이다.

나아가 경북은 도내 해양수산 역량을 결집하여 신해양·항만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일만신항의 항만 배후단지 및 산업단지를 연계한 해양 신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며, 포항항 구항의 항만재개발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철강도시에서 신해양산업도시’로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다. 포항항 구항 재생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첨단 해양레포츠 융·복합 플랫폼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해양MICE산업지구, 환동해 문명사 박물관 등 복합예술·문화지구, 기상·방재 ICT 융·복합지구 조성 등이 추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북은 독도가 지니는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예술을 통한 독도 홍보, 체계적인 영토주권 논리 개발과 교육 강화 등 독도영토주권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표 3-17〉 경북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현안	추진과제
수산	수산식품 수출 거점단지 조성	• 부지확보의 어려움: 포항영일신항만 배후단지는 자유무역 구역으로 법인, 개인기업, 개발공사 등이 입주할 수 있음 (지자체 입주 불가) 또한 항만부지 전대행위 금지
수산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 후포항 인근 어시장과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명소로 개발
	대게·오징어 자원회복 특화품종 개발	• 오징어·대게의 자원회복을 위한 장기대책 마련과 불법어업 단속 강도다리 등 경북 특화 품종 개발 추진
항만	영일만신항	• 영일만신항의 배후부지 활용
	포항항	• 포항항구항의 ICT 해양산업 플랫폼 구축
해양 산업	동해안 해양과학벨트 구축	• 해양연구·교육을 위한 동해안 해양 R&D 벨트 조성
	해양치유(헬스케어) 관광단지 조성	• '18~'19: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산업·실용화 연구용역 • '20~'22: 해양치유 R&D센터, 치유센터 등 건립 추진

분야	정책현안	추진과제
해양 산업	울릉도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 정부 에너지신산업 육성정책에 맞춰 친환경 명품에너지자립 관광섬으로 개발, 관광환경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8년까지 태양광·소수력 시공 완료
	동해안 부유식 해상 풍력단지 조성	동해안의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 시범단지 조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해양 영토	독도해양주권 강화	독도영토주권 공고화와 홍보사업 추진
연안 침식	연안정비사업 추진	- 연안침식 방지와 친수공간 조성 - 울진 봉평해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자료: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2018 주요업무계획, 2018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경북은 새로운 해양전략산업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조성 등을 주요 해양수산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도내 해양수산 부문의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해양과학교육기반 조성, 동해안 해양레저 휴양·관광벨트 거점개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협력체계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해안 원자력 안전클러스터 내실화, 독도 영토주권 정책 추진 등 해양영토 및 안전 분야의 정책을 수립·집행 중이다.

〈표 3-18〉 경북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양 산업	해양신산업 육성 및 동해안 관광기반 구축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육성 - 청정 동해안 해양레저 휴양 관광벨트 거점개발 - 동해안 해양과학교육벨트 구축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산	-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 에너지 신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추진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수산	미래성장동력이 넘치는 가치 있는 바다구현	- 건강한 생태계 및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식품 유통기반 선진화 - 어촌/어항 복합다기능화 지속 가능한 기반조성
어촌	전략품종 연구 육성 및 새로운 소득원개발	- 동해안 특성에 맞는 품종 방류 및 생물다양성 확보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수산물 안전검사 체계 강화 - 새로운 소득원 개발, 고객 지향적 사업소 운영
항만	항만경쟁력 강화	항만물류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마리나항만 개발
영토	독도영토주권 강화사업 지속추진	- 독도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문화 예술을 통한 독도 홍보 - 체계적인 영토주권 논리 개발과 교육 강화
안전	원전 안전운영 산업기반 육성 및 방사능방재 역량 강화	-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과 연관기업 육성 - 동해안 원자력 안전클러스터 추진 내실화 - 도민이 안전한 원자력 방재대책 추진

자료: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2018 주요업무계획, 2018

7. 경상남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⁴⁹⁾

경남은 국내 최대의 패류 생산·가공지로서 패류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해역은 미국 FDA 수출용 패류생산지정해역의 75%를 보유하고,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점유하는 등 한국을 세계 3위의 굴 수출국(2016년 기준 1위 프랑스(82백만불), 2위 미국(77백만불), 3위 한국(62백만불)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 대응을 위한 양식 생산량 증대가 필요한 반면, 양식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친환경 기반의 양식산업 도입이 절실하다. 더불어 굴 산업구조에 의존한 수산경영의 문제와 활패 의존형 유통 구조와 수산식품의 개발

49) 2018 해양수산 전국 대토론회 중 경남도 토론회와 업무보고자료, 각종 보고서를 정리

부족 등으로 고부가가치의 수산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경남에서는 패류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생산체계 개편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전략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역별·품종별 특화단지 조성 및 소규모 개별업체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종자생산, 가공, 위생, 유통, 수출 통합형 양식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해역별 특화품종, 식품 위생·안전성, 수산종자 열성화 문제 해결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또한 도내 양식어가의 이상고온 등 환경변화 피해에 대응에 주력하는 것도 수산·양식 분야의 주요 정책현안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다.

첨단 스마트양식과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내 유희부지에 스마트양식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스마트양식 다기능복합단지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스마트양식 실증센터에서는 발전소 온배수(25~30℃, 8백만톤/일)를 이용한 고급어종 및 수산종자 양식 연구를 계획 중이며, 스마트 종자배양장 및 시범양식장에서 자동화·지능화 양식시스템을 실증하고 양식데이터 수집·분석시설 운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더불어 경남은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으로 수산식품 연구·홍보·전시·판매·가공 등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남형 수산식품가공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스마트화된 고차가공시스템 보급, 경남의 주요 수산물 활용한 신제품 개발 추진,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위생관리체계 도입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경남은 남해안의 섬·어촌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 거점벨트를 구축하고,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천혜의 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사계절 치유와 휴양이 가능한 남해 힐링아일랜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힐링·웰니스 중심 콘텐츠 개발 등 70개 단기사업 우선 추진하고, 시군 연계 프로그램 운영, 권역별 공동 마케팅 강화 등 권역단위의 관광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해양레포츠 대중화와 해양레저산업 기반 구축 측면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마리나시설, 해양레포츠 아카데미 센터 등 해양레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는 명품 해수욕장(28개소), 해양낚시공원(2개소) 등 체험·체류형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남은 해양치유·웰니스체계를 구축하여 첨단 해양항노화산업을 선도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해양항노화산업 육성전략(2017)’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형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방안을 구체화하였다. 해당 전략에서는 첨단 해양노화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통합형 해양항노화산업기반 구축’, ‘맞춤형 기업지원체계’, ‘특화형 해양항노화-웰니스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도 사업으로 해양치유 복합관광단지 조성, 폐교활용 해양치유 스테이션 및 해양항노화 장수마을 조성, 해양웰니스 거북선 바닷길 조성, 해양항노화웰니스 개발 운영 등을 추진 중이며, 경남 고성외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LNG병커링 클러스트 구축 등 제시하고 있다. 경남의 조선해양산업은 2015년 기준 제조업 생산액 중 22.2%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산업이나, 글로벌 경제 침체 등으로 도내 중대형 조선소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선박발주량은 전 세계적으로 2017년 이후 회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량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며 회복세 또한 완만하다. 이에 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및 관련 기자재 수요의 확대 전망을 반영하여,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LNG병커링 클러스터, 조선해양산업구조 고도화, 조선해양기자재산업 지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남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대기업(설계·건조), 중견기업(모듈제작), 중소기업(단품납품) 등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해양플랜트 모듈 중심 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한 LNG 병커링 클러스터 구축,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및 친환경 선박 수리·건조산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을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 중 위기업종인 조선기자재 기술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는 부산항신항을 동북아 물류산업 전진기로 육성하고, 선박수리·선용품공급·정박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등 복합제조물류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항만 서비스자유구역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남 중심 친환경 LNG 신산업 지도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항만물류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북방향로 개설에 따른 물류 수요에 대비하고, 연구기반 및 사업화 방안 마련, 항만물류 관련 신산업 발굴과 스마트항만 조성 연구 등을 추진 중이다.

해역활용과 관련된 환경·행정갈등 측면에서는 남해 EEZ 바다골재 채취 등과 관련된 경남-전남 해상경계 갈등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해 EEZ 바다골재 채취에 관한 어업인피해 대책위의 반대가 심화됨에 따라 국토부, 해수부, 어업인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는 시·도간 해상경계가 명확

하지 않아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남해 EEZ 골재채취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굴 폐각 등 양식폐기물 처리용량 확대 및 해역환경 분야 정책현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표 3-19〉 경남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해양 산업	남해 EEZ 골재채취 관련 추진상황	• EEZ 골재채취 관련 도내 어업인 의견 최대한 반영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시 마련된 안정화대책 이행되도록 노력
	굴 폐각 탈황원료 생산시설 건립	• 굴 폐각 처리시설 부족으로 굴 폐각의 해안변 아적등 환경오염 우려 • 한국남동발전(삼천포발전본부)과 협력, 굴 폐각을 탈황 원료로 활용, 굴 폐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도모 필요 • 굴 폐각 자원의 재활용 사업을 통한 환경문제 및 어업인 숙원 해소
수산	활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운영	• 세계 최초 개발·독점 운영 ‘해상운송 특수컨테이너’ 활용 양식 어류 수출 확대 • 활수산물 수출 다변화와 물류비 절감을 위한 전용 물류센터 건립
	적조, 고수온 발생 및 대응	• 여름철 폭염으로 고수온 유지, 어류피해 발생 예상 • 양식보험 가입 어가 보험처리(피해금액의 80~90% 정도) • 폐사어의 신속한 처리로 2차오염 방지(매물, 퇴비 재활용) 필요
해양 관광	마리나산업 활성화 추진	• 해양레저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마리나 기반시설은 부족한 실정 • 레저선박 및 해양레저기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음성적 거래 및 사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 우려 • 마리나산업 활성화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국비 확보 추진
해양 관광	통영항 강구안 친 수시설 정비공사	• 통영시(시민연대)에서 사업규모 대폭 축소 및 어선 상시정박 요구로 당초 친수시설 사업계획 일부 조정 추진
권한 쟁의	경남-전남간 해상경계 권한쟁의	•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는 시·도간 해상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조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분쟁 발생 • 유·무인도(갈도, 세존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 추가자료 확보 및 제출

자료: 경상남도 해양수산물, 주요업무보고자료, 2018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경남은 해양수산 정책은 조선해양산업 침체에 대응한 친환경 해양 플랜트 기반의 해양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조선해양산업의 고도화와 구조 전환을 위해 LNG 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지역경제 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추진 등을 통해 경남 수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내 관광역량 증진과 새로운 산업 분야 개척을 위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치유산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남해안을 거점으로 하는 해양항노화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0〉 경남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조선 해양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추진	•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속 승인 추진
	조선해양 고부가가치 신규산업 발굴·육성 및 경쟁력 강화	•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기술지원사업 • 해양플랜트 모듈산업 육성 • 선박수리·개조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 LNG벙커링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 추진
해양 관광	남해안권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육성	• 남해 힐링아일랜드 추진과 해양관광특별권역 지정 추진 •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와 폐조선소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 • 남해안권 발전거점 조성사업 추진 •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 거제 테르앤뮤즈리조트(Terre & Muse Resort) 조성 •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해양 관광	지역특화 글로벌 관광콘텐츠 집중 육성	• 남해안 낭만여행 및 한류웨딩여행 상품 활성화 • 해양레저산업 및 여촌관광 기반 강화 • 해양레포츠 아카데미센터 건립
해양 산업	남해안 거점 해양 항노화산업 육성	• 해양 항노화산업 육성전략 수립 및 실행 • 해양 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협력 사업 • 해양항노화 신규 사업화 과제 및 정부 공모사업 지속 발굴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수산 · 어촌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스마트양식 추진	• 패류양식산업 클러스터 구축 • 첨단 양식산업 육성 및 수산자원 서식기반 확충 •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
	맞춤형 농어촌복지 확대 및 정주여건 조성	• 농어가도우미 지원 및 어업인, 어선원·어선 재해 등 수산정책보험 •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40백만원)
	풍요롭고, 살고 싶은 명품 어촌	• 어촌의 6차 산업화 추진 • 해양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연안 관리 • 기후변화 대응 어업피해대책 추진 • 어업인 복지 확대 및 어업안전망 구축
항만	도시와 조화로운 항만 운영 및 인프라 확충	• 지방관리항만 효율적 운영 • 도서민 및 항만이용자 교통불편 해소 및 합리적 어업 보상 • 지방관리항만 인프라 체계적 구축 • 항만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자료: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자료, 2018

8. 제주도

1) 주요 여건과 현안⁵⁰⁾

제주는 풍부한 해양자연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통 해양수산업과 해양신산업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주는 세계가 인증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청정 해수자원, 해녀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안·해양에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으로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용암해수자원, 제주해녀문화유산 등 해양문화와 자연문화유산이 분포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연·문화여건에 기반하여 제주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청정과 공존의 해양산업육성 등을 추

50) 2018 해양수산 전국 대토론회 중 제주도 토론회문과 업무보고자료 등을 활용하여 재정리

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업의 1조 1천억 원, 해녀공동체 육성,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구축, 국제크루즈선의 최적 기항지 등을 통한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산 분야에서는 전통수산업 1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 수산업 신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7년에는 1946년 도제 실시 이후 71년 만에 수산생산액 1조원을 돌파하였으며, 이에 제주는 제주미래 수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수산물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수산물 수출물류 거점센터 건립, 광어가공유통센터 건립, 어선어업 경영안정기반구축 등 총 50개사업에 54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 수산물에 대한 유통·가공산업의 고도화와 광어양식산업의 체질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전국 1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시설로 신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산지유통을 다기능화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성산포항 수산물위판장 건립 추진과 수산창업·투자지원 확대를 통한 제주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양식산업과 가공·관광시장을 연계한 6차산업화 기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광어의 경우, 제주광어 식품안전성 확보와 신뢰회복을 위해 품질관리의 공익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제주 전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행복 바우처 지원과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사업 또한 주요한 정책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해양환경 측면에서는 해안자원 보존, 생태적 연결성 확보, 연안침식 최소화 등을 위해 해안변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

연해안·해양환경 보전과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해안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유수면관리 강화지침을 마련하고, 해안도로와 인공호안 건설 등으로 훼손된 해안생태계와 연안침식 방지를 위해 해안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제주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제정하고(17.6),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제도의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변 관리로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는 해녀어업과 문화복지 기반구축을 통해 세계유일의 해녀매카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제주는 제주해녀문화가 글로벌 문화유산으로 공인됨에 따라 해녀문화보전 등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제주의 해녀문화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16.11.30),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15.12.16),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17.5.1)에 등재되었으며, 이에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17.6.2)하고 도청에 해녀문화유산과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해녀들의 소득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해녀의 날」과 연계한 제주해녀축제 개최 등 유무형의 해녀문화 유산을 활용한 향토문화산업 활성화와 사회교육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현업 해녀의 소득보전을 위한 소라가격 안정지원, 마을어업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등 안정적 조업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어촌관광의 체계적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는 크루즈관광객 1백만명 시대 도약을 목표로 제주를 해양관광의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남북한 평화 크루즈라인 개설 등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제주국제크루즈 포럼 개최, 아시아 크루즈리더스 네트워크를 창립·운영할 뿐만 아니라, 크루즈관광 맞춤형 상품개발, 서귀포 크루즈항 정상 개장 및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제주산품 크루즈 선식 공급 확대, 안정적인 선용품 공급을 위한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이어 해양레저산업 육성과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현안들을 종합하고 관련 대응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제주를 스쿠버다이빙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최적의 다이빙 여건조성, 해양레저 기반시설 조성, 교육·훈련,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안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둘째, 강정 공공마리나를 개발하고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모슬포남향 해수풀장 정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어항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희어항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기능을 강화하고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산업을 모색 중이다.

제주는 동북아거점 항만물류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항만인프라 확충으로 세계적 국제자유도시로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제주의항 2단계 건설과 상습 월파에 따른 탐동 매립지의 재난 대비, 제주 신항만 개발과 연안항(6개항)을 융·복합 선진 항만으로 육성 등의 항만안전 및 기능제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도내 항만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제주항에 집중된 여객선 운항을 연안항으로 분산·배치하고, 연안항 항만시설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어업안전과 해양사고 등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따라 제주해역의 불법어업 단속, 어선·낚시어선 해양사고 방지

대책 마련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긴급한 정책현안으로 추진 중이다.

〈표 3-21〉 제주 해양수산정책 분야별 주요 현안

분야	정책과제	현안사항
수산 · 어촌	불법어업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강력단속 추진	• 야간, 기상악화 시 등 불법조업 성행, 불법어선의 대형화, 지능화, 고속화로 단속 한계 • 중국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조업 등 상존 • 해경보유 항공기 활용 불법어업 현장 촬영 대응,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협력 및 합동단속 강화
	어선 해양사고 방지대책 강화	• 원거리 조업중 사고 발생시 신속한예인 등 구조·구난 한계 • 연근해 어선은 대형 선박에 비해 안전장비 및 설비 취약
	해녀수당 등 복지지원제도 정비	• 현업에 종사하는 연로한 해녀에게 수당 지급함으로써 조업을 조장하는 결과, 조업 중 사고발생 증가 우려 여론 •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제도 등 어업인 공감대 부족 • 해녀수당 지급조례 규칙 개정계획 추진 중
항만 · 물류	제주 신행만 조기 개항	• 제주신행만 조기개발을 통한 제주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신행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고시(
	서귀포(강정)항 크루즈선 터미널 공사 준공	• 서귀포 크루즈항 개항의 차질 없는 준비로 원활한 크루즈 입출항 도모
해양 관광	제주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제주를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선 급증에 따라 크루즈 선용품 공급물량도 함께 증가 •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사업비 11.2억원 삭감
해양 관광	해녀의 전당 건립 추진	• 한반도와 국외지역에 분포하는 해녀의 삶의 특색을 한 데 모은 종합전시관 조성 • 해녀의 전당 실시설계 및 착공, 준공 예정('19~'21년)
	서귀포 크루즈항 개장 운영	• 서귀포 크루즈항 입항 관광객들이 쇼핑인프라 부족으로 제주시내 면세점 이용에 따른 신체주권 교통혼잡 예상 • 대형버스 100대 주차장 필요 •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변 및 물양장 배후부지 활용한 임시주차장 마련

자료: 제주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2018

2) 해양수산 주요정책·사업

제주의 해양수산 정책은 해양관광업,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제시 측면에 주력하고 있다. 관광정책 분야에서는 제주형 해양관광 특성화를 위한 요트마리나·크루즈 등 항만기반 조성, 전통 해녀문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형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어 환경·자원관리 차원에서 제주지역 해역관리를 위한 자치관리제도인 ‘청정제주바다 지킴이’ 사업을 신설하고 확대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3-22〉 제주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과 사업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해양 관광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 산업육성	• 요트마리나 및 해양관광 기반 조성 • 특화된 어항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 제주 수중비경 관광 자원화
	해양관광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국정과제와 연계한 아름다운 어항(김녕항) 개발 • 피서리나형 위미항 개발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레저관광 특화개발	• 어촌·어항 특화개발 확대 및 신해양 R/D 역량강화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추진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및 세계화브랜드 가치제고	• 유·무형의 해녀문화 유산을 활용한 향토 문화산업 활성화 • 해녀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해운 · 물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시장 다변화	• 아시아크루즈협회 등 신규노선 유치 및 국제홍보 강화 • 크루즈관광 질적 성장 및 지역경제 낙수효과 극대화
	동북아거점 항만물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제규모의 항만을 위한 제주의항 2단계 개발 • 지역 거점별 특성에 맞는 연안항 항만시설 개발
수산 · 어촌	제주 미래 수산업 발전	• 수산물유통·가공산업의 고도화 • 제주광어 양식산업의 체질 개선
	어업인 복지기반 조성	• 6차산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밀착형 종합서비스 제공 •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지속 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 마을어장 관리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

분야	정책방향	추진내용
연안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연안관리	• 연안지역 환경복원과 상습 피해시설 보강 및 침식방지 • 청정 제주바다 보전
환경	쾌적한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 청정제주 바다 지킴이 확대 운영 • 제주해안의 보전·관리

자료: 제주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2018

제 4 장

해양수산 지역혁신 추진방향과 사업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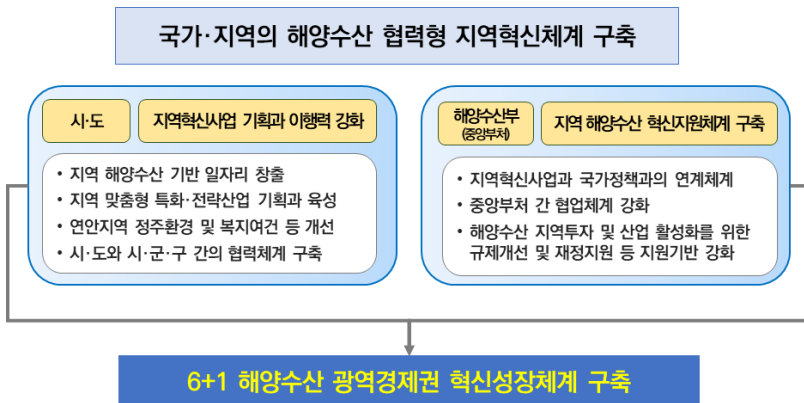
제1절 해양수산 지역혁신 추진방향

1. 기본 추진 방향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는 제도적·재정적으로 안정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지역의 협력형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추진 방향은 해양수산부와 시·도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은 해양수산 혁신사업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사업에 관한 지속적 투자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 추진 방향은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이행을 통해 지역의 경제·사회·환경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해양의 동질성과 차이성에 기초한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광역경제권 기반하에 해양수산부와 지역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 방향은 해양수산 부문의 지역균형과 혁신성장 등을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담아야 한다. 해양수산 등을 비롯한 연안·해양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중앙부처와 사업과 시·도 해양수산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 해양·연안권역별 해양수산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방향은 중앙부처는 지역의 해양수산 혁신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허용-사후규제'방식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허용하고, 지역은 자율성과 책임성에 기초하여 해양수산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혁신역량과 경험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안·해양지역의 특성과 발전역량, 일자리·주거안전·복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의 연계 혁신패키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림 4-1〉 해양수산 지역혁신체계 추진방향



주: 저자 작성

2. 목표 및 추진전략(안)

1) 목표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의 목적은 연안·해양지역의 해양수산 자원의 가치와 산업, 문화, 사회경제, 제도적 여건과 특성 등에 따른 지역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할 수 있는 자립적 역량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과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을 함께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혁신성장의 목표(안)는 ‘연안·해양의 지역가치의 실현과 국가 해양수산 혁신성장 강화’로 정하고, 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안)으로 ‘국가-지역 협력형 해양수산 혁신성장’, ‘해양수산 융합형 일자리 창출’, ‘해양수산 지방권한 강화와 상생협력’, ‘어촌·연안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으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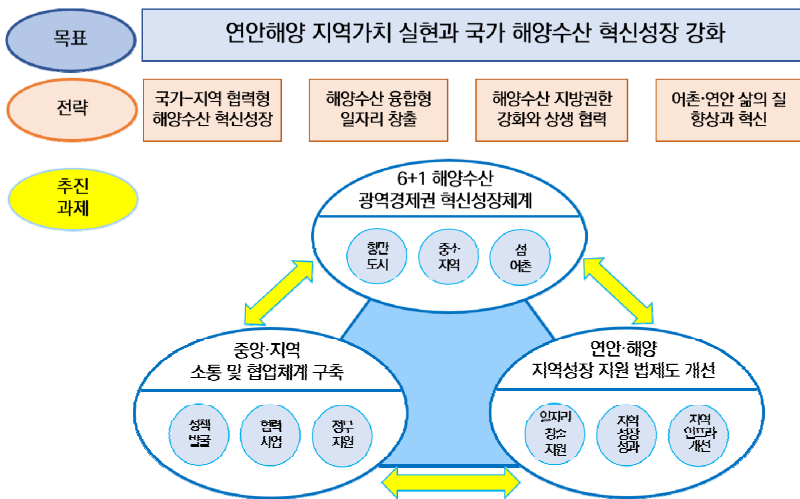
2) 4대 추진전략

첫 번째 전략인 ‘국가-지역 협력형 해양수산 혁신성장’은 지역은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 특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기획·추진하는 한편, 국가는 해양수산 혁신성장체계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인 ‘해양수산 융합형 일자리 창출’은 전통적 항만·해운·수산·양식·관광 등 산업과 지역산업인 제조업·서비스업·과학기술·금융·법률서비스, 예술·문화·디자인업 등과 융합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해양수산 지방권한 강화와 상생협력’은 지역 스스로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지방정부

의 균형 있는 권한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소통의 다차원 채널이 마련하여 정부, 시민, 전문가, 학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협력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촌·연안의 삶의 질 향상과 혁신’은 전통적으로 형성해온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폐쇄적 조직을 개방형 조직으로 혁신해 어촌·연안 지역경제의 성과를 공정·형평 분배·공유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4-2〉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의 목표와 전략(안)



주: 저자 작성

3) 3대 추진과제

해양수산 지역혁신성장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이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중점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혁신성장체계 구축’이다. 이 과제는 연

안·해양에 접한 시·도를 6개 광역경제권과 1개 내수면 권역을 설정해 권역의 공통·유사정책과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한 권역 내 분포해 있는 항만·산업도시, 수산·관광기반의 중소지역, 어촌·섬 등 소규모 마을 등을 통합적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체계’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국가정책사업과 연계된 거점개발 방안, 해양수산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방안, 지역별 해양수산혁신성장지구 지정방안, 해양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지역 해양수산 R&D 추진, 어촌·연안의 포용전략 등을 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국가·지역 해양수산 현안 해소와 혁신정책개발·이행, 효과적 예산집행 등을 위한 「해양수산 혁신성장위원회(가칭)」와 같은 해양수산 혁신을 주도할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해양수산부와 시·도 간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해양수산 혁신성장과 상생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 위원회는 지역특화사업의 적극적인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지역 융·복합 협력사업 발굴 및 실천방안 등을 지원하게 된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연안·해양 투자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재정지원 등 현안 해소 대책 등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즉,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의 국책사업과 시·도 해양수산 정책·사업을 연계한 전국단위 해양수산 혁신성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시·도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가칭)’의 형식으로 대폭 개선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충분히 수용해 시·도 해양수산 혁신성장의

추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시·도 해양수산종합발전계획(가칭)’의 주요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정책 동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 지역혁신지수체계(가칭)’가 개발·적용되어야 한다. 즉, 해양수산발전계획의 이행에 따른 지역 일자리·창업, 소득증진, 환경개선,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해 계량적으로 지표화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지식기반 제공을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의 기본구상 (안)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은 광역단위의 해양경제플랫폼으로, 해양의 개방성과 동질성에 기반한 상호협력관계에서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을 기획·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은 우리나라 연안·해양에 인접한 11개 시도를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내수면을 1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공존경제해역권(인천·경기)의 방향은 연안·해양의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통한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도약으로 설정하였고, 환황해 연계해역권(충남·전북)은 환황해 연계 해양신산업 거점지 육성과 해양생태벨트 구축으로 제시했다. 섬·新경제해역권(전남·경남)은 전통적 수산업과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해양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동북아거점해역권(부산·울산)은 해양수산물과 지역고유산업의 융·복합화, 첨단화와 해양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해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상생발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심해·북방해역권(경북·강원): 남북교류와 북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동해 경제권을 구축하

고, 해양에너지·해양자원 개발 등 관련 해양에너지·과학벨트를 구축하고, 청정·평화해역권(제주)은 제주 고유의 ‘섬’, ‘평화’와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 마련하고, 건강한 해양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청정·힐링 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내륙해양영토권(육상내수면)은 내수면 수산·관광자원의 지속가능 관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마을의 정주환경 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림 4-3〉 6+1 해양수산 광역경제권 기본구상(안)



주: 저자 작성

1) 공존경제해역권

(1) 기본 여건

공존경제해역권에 해당하는 인천·경기는 수도권과 접해 있고 인천항·인천국제공항 등 동북아 물류의 관문 역할과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는 등, 본 해역권은 인천항 중심의 해양물류 네트워크와 인천국제공항 중심의 항공물류 네트워크 등 융·복합물류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송도·청라·검단지구 등에 해양친수·국제도시 조성으로 수도권 인구가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으며, 인천국가산업단지, 반월국가산업단지 등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강하구와 경기만에 갯벌, 도서, 하구 등 양호한 자연환경이 분포해 있고, 옹진 장봉도 등 해양보호구역 4개소 등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본 해역권은 백령도 물범서식지, 강화갯벌, 한강하구 습지, 도서 201개소 등 양호한 연안·해양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도시민의 해양관광·레저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왕산·전곡·제부 등 7개소 마리나항만 개발·운영 중이며, 도서(섬)·해수욕장·어촌 등의 연안·해양관광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서해 5도와 그 주변해역의 해양안보·안전의 중요성에 관한 항시적 인식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4-4〉 공존경제해역권의 이용현황도



주: 저자 작성

(2) 기본 발전구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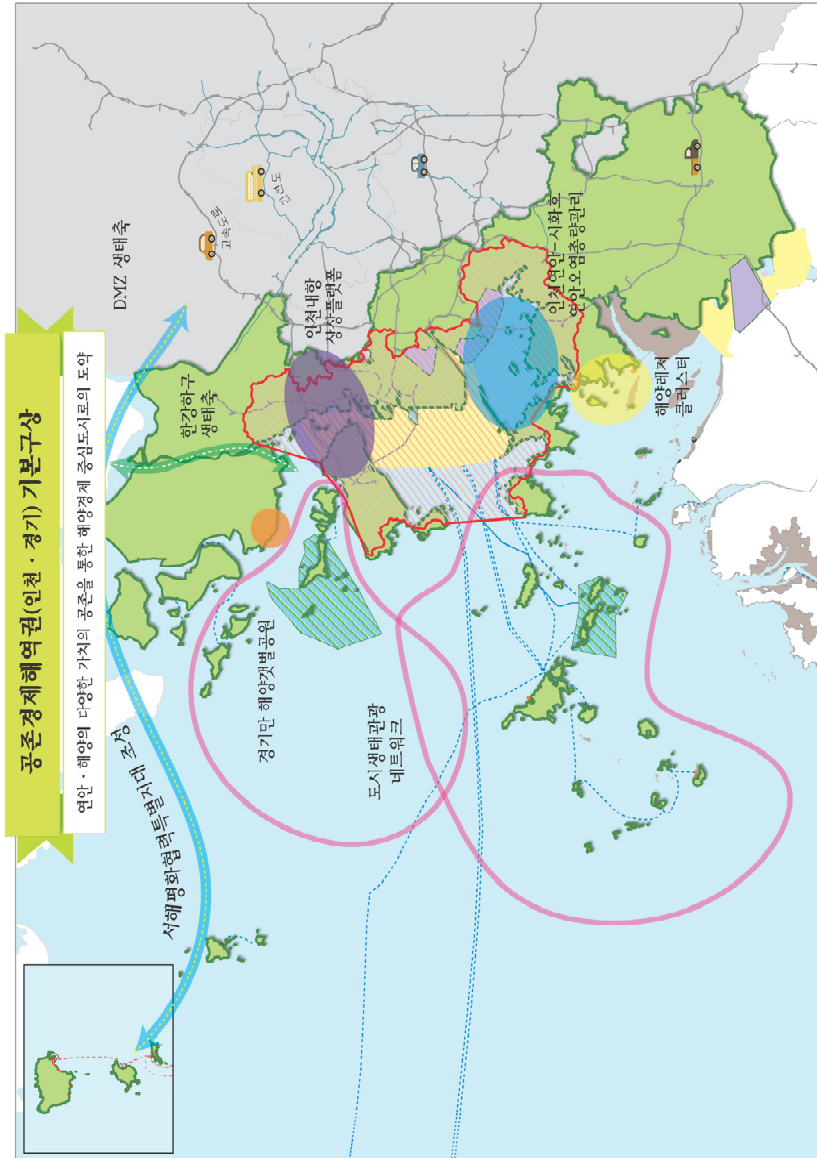
공존경제해역권은 본 해역권이 보유한 경제적·생태적·관광적 가치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가치 등의 공존체계 마련을 통해 해양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것으로 기본발전구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항공물류산업과 항만·마리나 등 해양친수 관광산업의 고도화, 해양역사·문화사업의 추진, 해양도시체계 구축, 섬·갯벌과 어촌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의 추진,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서해5도 주변해역의 평화적 이용 등 현재 시·도와 해양수산부 등에서 추진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사업이 종합적 발전체계 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기본발전구상(안)

연안·해양의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통한 해양경제 중심도시로의 도약

본 해역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지역혁신사업으로는 인천내항의 상상플랫폼, 해양레저 클러스터, 섬의 네트워크사업, 서해특별평화지대 조성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인천내항의 상상플랫폼사업은 해양국제·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인천광역시의 비전에 맞춰 인천항을 해양문화공간과 청년창업과 벤처기업 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로 확대해 해양경제도시의 상생 혁신모델로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 해양레저 클러스터는 인천·경기만의 지역특화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섬 자원과 연계한 해양 웰니스 산업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서해특별평화지대는 서해 5도와 그 주변 해역, 한강하구, DMZ와의 연계축을 설정해 인천·경기와 서울·강원과의 협력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해 볼 수 있다.

〈그림 4-5〉 공존경제해역권의 기본구상도(안)



주: 저자 작성

2) 환황해연계해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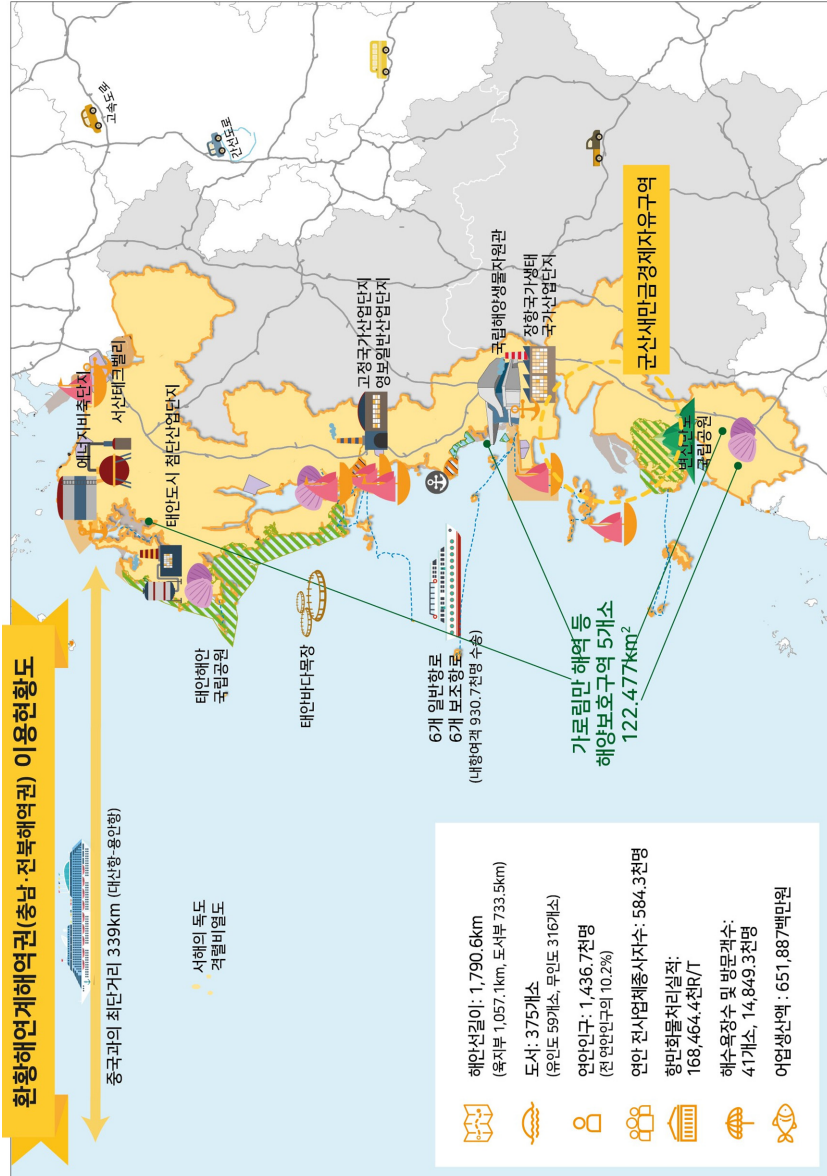
(1) 기본 여건

환황해연계해역권은 충남·전북을 포함하는 권역으로,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중국과의 활발한 해양경제·문화교류를 위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며, 우리나라 서해북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환황해권의 해양경제·생태·문화의 중심축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평택·당진항, 군산항, 대산항, 보령항 등 강소 항만과 국가·일반산업단지 등 다수가 분포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는 등 해양신산업 거점지역의 입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새만금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문화·관광공간, 국제경협부지 등의 조성 등으로 해양신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본 해역권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장항생태산업단지 등이 분포해 있어, 이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해수욕장·갯벌 등을 활용한 의료·관광 등 해양치유산업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가로림만 해역 등 해양보호구역 5개소 및 태안해안·변산반도 국립공원, 다수의 도서가 분포해 있으나, 간척농지, 축산단지, 산업단지, 발전시설 인근 인공호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수산 부문에서는 서해안에 바지락, 꽃게 등 수산물이 풍부하나 어가인구의 감소, 어촌지역의 초고령화 진행,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어장환경 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으로 수산물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그림 4-6〉 환황해연계해역권의 이용현황도



주: 저자 작성

(2) 기본 발전구상(안)

환경해연계해역권은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치유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등 해양 신산업을 선도하는 권역으로 육성하고, 해양생태 복원 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과 섬, 갯벌, 해안사구 등 해양자연자산과 해양보호구역 등을 연계한 해양생태벨트 구축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해양생태·바이오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 다양한 연안·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벨트 조성, 어촌혁신과 수산자원의 회복 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유휴화된 항만·발전·산업시설과 함께 인공담수호·폐염전 등의 종합적 재생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기본발전구상(안)

환경해 연계 해양신산업 거점지 육성과 해양생태벨트 구축

본 해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새만금 신항만과 배후단지 조성 등을 위한 공공주도의 새만금 사업, 해양치유복합단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군산항 재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국립생태원 등과 연계한 해양바이오산업 실증단지와 클러스터를 구축해 서해안의 해양바이오의 거점지구로 조성할 수 있다. 대천항 등 노후·유휴항만과 노후 발전시설·산업단지 등의 재생사업과 인공호·폐염전 등 생태복원을 연계한 지역재생체계를 구축하고, 바다 숲·바다목장 조성사업 등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촌 친환경 양식 특화연구센터 등의 설치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이 가능하다.

가로림만~신두사구~안면도~금강하구~곰소만으로 이어지는 해양

주: 저자 작성

주: 저자 작성

3) 섬·新경제해역권

(1) 기본 여건

섬·新경제해역권에 해당하는 전남과 경남은 우리나라 전 해안선의 61.8%를 차지하고, 2,585개의 섬과 만(灣), 갯벌, 자연해안 등 천혜의 연안·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순천만·무안갯벌 등 10개소의 해양보호구역과 다도해·한려해상국립공원 등이 분포해 있다. 이 해역권은 우리나라 최대 수산생산지로, 최대 규모의 양식단지가 분포해 있고, 바다목장, 해중립 조성사업, 인공어초 시설 등 수산자원 조성정책 추진 등으로 수산업 기반의 지역경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 어업종사자의 노령화, 어선 노후화, 해양환경 오염 등으로 수산업 기반의 지역경제는 악화 추세에 있다. 또한, 이 해역권에는 광양항, 목포항, 여수항, 고현항, 마산항 등 다수의 항만이 분포해 있고, 항만 배후지역은 국가산업단지·조선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으나 조선·해운업 경기침체, 물동량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태이다.

한편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생산·가공·유통의 혁신체계 구축,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해양치유·항노화산업 추진, 섬발전사업,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조선업의 재활성화, 친환경 선박건조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illegible]

125 ↘

(2) 발전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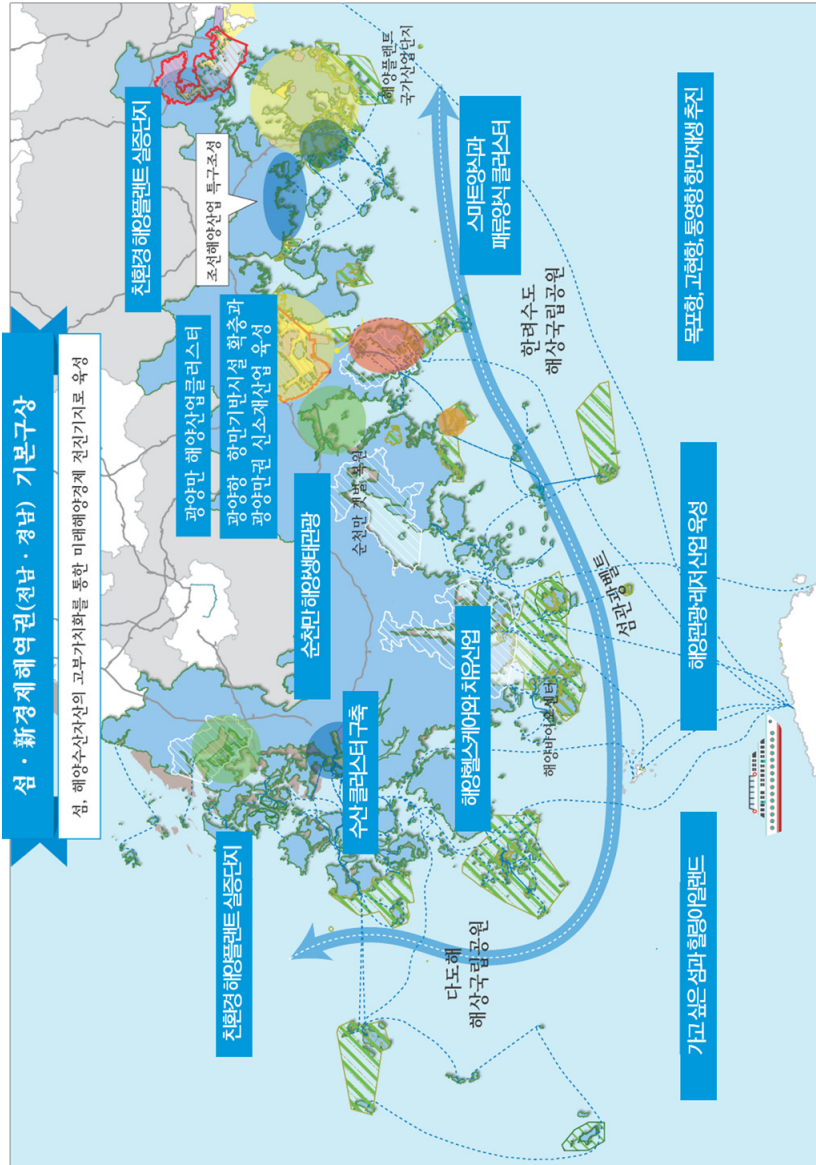
섬·新경제해역권은 지역 고유의 해양수산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특화산업인 수산업과 항만물류·관광산업 등을 지역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으로 전환해 미래 해양경제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섬 경제·산업의 고도화, 수산생산·가공·유통의 거점화, 해양·항만·조선의 재활력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발전구상(안)

섬, 해양수산자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미래해양경제 전진기지로 육성

이 해역권의 기본 발전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을 구체화하고, 다른 부문과의 연계 발전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우선 설정할 수 있다. 섬 관련 2개 시·도에 추진하는 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힐링 아일랜드’ 사업을 연계하고, 섬·연안 크루즈를 기획해 섬관광벨트를 조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수산 부문에서는 경남의 스마트양식·패류 양식클러스터 조성 and 전남의 수산식품 가공·수출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수산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조직할 수 있다. 또한, 광양항과 그 배후지역을 연계한 항만물류산업기지로 활성화하여 일자리 넘치는 항만도시로 육성하고, 조선해양산업 특구와 해양플랜트 기술 실증단지 등으로 조성하고, 목포항, 통영항, 고현항 등 노후항만과 폐조선소 부지 등을 활용한 항만도시의 통합재생체계를 구축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식단지의 자동화 장비와 현대화 시설 도입, 새로운 양식기술 도입 등을 통한 어업생산성 증진 등이 필요하다.

〈그림 4-9〉 섬·新경제해역권의 중점추진과제(인)



주: 저자 작성

4) 동북아거점해역권

(1) 기본 여건

동북아거점해역에 해당하는 부산·울산은 해양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지역으로 항만, 수산, 해양관광 등 해양산업의 집적지로서 해양경제 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부산항은 동북아 최대 컨테이너 노선 확보와 세계 3대 환적중심 항만으로 성장하였고, 해양 금융 기반의 해운 비즈니스 기능 확보,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육성 등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울산항은 동북아 오일허브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정제(精製)와 물류, 금융을 아우르는 선순환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울산은 우리나라 조선업 클러스터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산업 등이 집적되어 있으나, 최근 조선·해운업의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산은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전진기지로 수산생산·가공·유통 중심지로 전통적 수산업이 미래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관광·레저부문에 있어 부산은 도시형 해양레포츠, 국제크루즈, 국립해양박물관, 해운대 등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데 반해, 울산은 도시형 해양관광·레저자원은 부족하나 장생포고래마을, 울주 암각화 등 울산 고유의 해양생태·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해역권에는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과 해양수산 인적자원 양성 기관 등이 집적해 있어 해양혁신클러스터의 완성이 가시화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주: 저자 작성



(2) 기본 발전구상(안)

동북아거점해역권은 국내 대표적 해양도시로서 위상과 오랫동안 축적해 온 항만·수산·해양관광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양수산 산업의 융·복합화, 첨단화와 지역특화 해양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수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상생발전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기본 발전구상(안)

동북아 해양수산 허브로서 위상 제고와 해양혁신 상생모델 구축

이 해역권의 기본 발전구상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시민참여형 부산 항북항 통합개발과 해양혁신지구 STEM 빌리지, 해양레포츠산업의 활성화, 울산항 에너지 허브 및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 울산 해양관광복합도시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은 항만·금융·산업·문화 등이 융합된 친수 공간 개발과 4개 혁신지구와 연계 개발하려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무엇보다 혁신적인 것은 사업 추진방식을 기존 정부 주도의 하향식 모델에서 국민참여의 상향식 모델로 전환해 추진하는 것이다. 울산에서는 사용이 끝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 외 이 해역권에서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고 원양어업 육성과 수산가공업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고, 요트마리나 등 해양레포츠 거점지로 육성하고, 해양 복합 관광도시 및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활성화 등을 통한 해양문화·레저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

[illegible]

131 ↘

5) 심해·북방해역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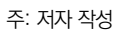
(1) 기본 여건

심해·북방해역권은 강원·경북에 해당하는 권역으로, 중국·러시아 등과 해양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지리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고, 향후 남북협력과 북극항로 등을 활용한 유라시아 교류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본 해역권은 연안역에서 심해저까지 독특한 해저지형이 조성되어 있고, 해양생물 다양성과 건강한 해양생태계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해역은 동해안의 심해자원, 해양생물·에너지자원, 해양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미래 청정에너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인산염암 등 해양광물자원 분포, 동해 특화자원인 해양심층수, 온배수 등 다양한 해양수자원이 분포해 있다.

또한, 포항 영일만신항, 삼척항, 호산항 등 산업·에너지 특화 항만과 배후 산업단지 등이 조성되어 있어 국가기간산업과 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해양산업 발전기만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 일출명소, 어촌체험마을 등 다양한 연안관광자원이 분포해 있고, 마리나항, 해양레포츠센터, 바다낚시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양레저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수산자원의 변화와 생산량 감소, 어업인구의 고령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갯녹음 현상, 연안침식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주민 정주여건과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해·북방해역권(경북·강원해역권) 이용현황도



(2) 기본 발전구상(안)

심해·북방해양권은 동해 접경해역의 평화로운 이용과 북극항로 개발에 따른 북방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환동해 해양경제권을 형성하고, 해양에너지·해양수자원·수산생물·해양바이오 자원을 활용한 해양과학기술의 선도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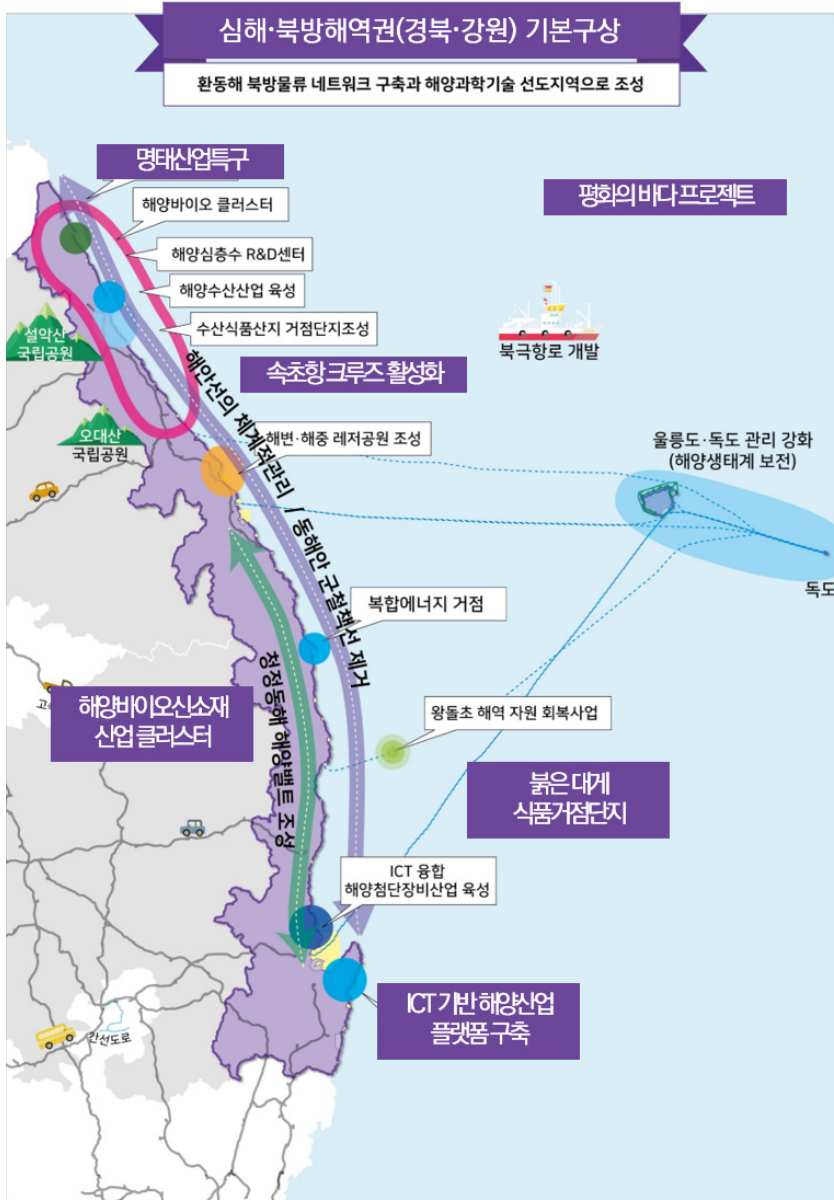
기본발전구상(안)

환동해 북방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과학기술 선도지역으로 조성

심해·북방해양권의 과제로는 환동해권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북방물류 거점지역으로 기능하되, 이와 관련하여 해양산업, 해양에너지, 수산 기반 등의 지역 맞춤형 항만개발방향 설정과 고부가가치 해운물류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해역의 평화롭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 평화의 바다 프로젝트와 함께, 울릉도·독도의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통한 독도의 생태적·경제적·문화적 가치 제고와 국민인식 증진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고유의 해양생물자원 등을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육성, 수산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추진하며, 동해안의 해양자연자원을 활용한 해양힐링벨트 조성 and 지역주민·관광객의 지속 가능한 해안관광 등을 위한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 등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ICT 해양첨단장비산업 육성과 해양바이오신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양심층 수산업, 강원 명태특구 조성 등 지역특화 산업과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4-13〉 북방·심해해역권의 기본구상도(안)



주: 저자 작성

6) 청정·평화해역권

(1) 기본 여건

청정·평화해역권은 제주를 포함한 주변해역을 포함한 권역으로, 제주를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 이미지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4-14〉 청정·평화해역권의 이용현황도



주: 저자 작성

이 해역권은 해안선을 따라 우수한 자연경관과 건강한 생태·문화 환경 등이 분포해 있는 등 청정한 해양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치유서비스와 해양레저·관광을 결합한 해양헬스케어 사업 등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제주해녀는 그 진취성과 생태주의 등에 관한 가치가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정과 평화의 제주의 브랜드가치를 더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주는 제주항과 서귀포 크루즈항, 아름다운 해안선, 연산호 군락, 섬 등의 해양자원을 연계한 해양관광·레저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상품개발·운영 등이 추진해 볼 수 있다.

(2) 발전 기본구상

청정·평화해역권의 기본구상은 제주 고유의 ‘섬’, ‘평화’와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건강한 해양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해양청정·힐링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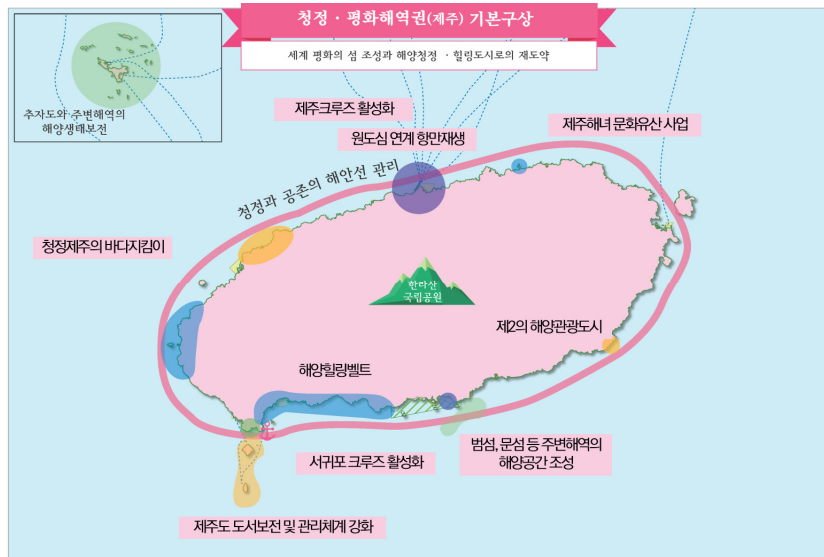
기본발전구상(안)

세계 평화의 섬 조성과 해양청정·힐링도시로의 재도약

이를 위해 제주 크루즈산업특구를 설정해 제주항을 통해 방문하는 크루즈 개별관광객들이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원도심 상권과 관광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일본의 주요 기항지와 연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테마별 해양관광사업 추진하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용 증진 방안과 어촌관광, 요트·유람선 투어 등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⁵¹⁾ 또한, 제주해녀문화유산사업을 계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연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자연해안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51) 예를 들어 제주의 관광창업회사가 '제주의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체험여행 플랫폼'을 만들어 현재 여행 트렌드인 개별여행·체험과 체류형 여행을 테마로 농어민이 직접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그림 4-15〉 청정·평화해역권의 기본구상도



주: 저자 작성

7) 내륙해양영토권

내륙해양영토권은 육상내수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국 내수면 수산·관광자원의 지속가능 관리·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강 어촌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발전구상(안)

내수면 관광·어업 활성화를 통한 내륙 해양수산물 증진

이를 위해 각 지역별 민물양식어종의 양식업 특화전략 마련 등을 통해 강어촌마을의 소득증진과 정주환경 개선 추진하고, 유희 저수지 자원화 등을 통한 내수면 어업기반, 양식단지와 수산식품 거점화 등을 통해 안정적 수급관리체계와 내수면 관광활성화를 추진한다.

〈그림 4-16〉 내륙해양영토권의 기본구상도



주: 저자 작성

제2절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안) 제안

1. 제안 개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재 시·도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에 있는 해양수산 관련 사업 중 지역의 다양한 자산과 산업, 지역적 가치·기능을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의미에서 제안

하였다. 즉, 해양수산의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재설계와 신규 법제 도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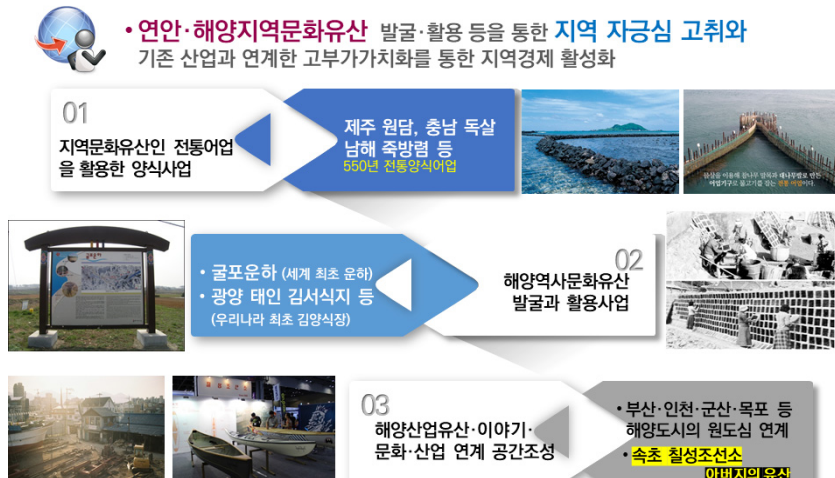
2. 해양수산 지역혁신사업(안)

(1) 연안·해양가치가 살아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구축한 30만 건의 문화원형 중 해양역사문화 관련 원형은 0.7%에 불과하고, 지역별 전통어구·어법, 해양사적 사진·인물, 해양 전통생활양식, 해양근대산업유산 등 해양역사·문화유산과 지역 자긍심 고취 등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해양수산 관련 박물관·전시관, 근대산업유물(조선소, 산단, 항만·어항 등 유형 유산), 해양수산 전통기술·인물(무형유산) 등을 활용하여 연안·해양지역의 자긍심 고취 등과 연계한 사업 등도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지역의 연안·해양문화유산의 발굴·육성·활용 등을 통해 지역의 자부심 고취와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지역밀착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후화된 소규모 조선소를 이야기와 지역유산·문화·산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해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제주해녀문화, 제주원담, 충남독살 등을 활용한 지역 전통양식산업의 재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지역에서 스스로 발굴하여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섬·해안 등의 고유생활양식(의식주), 전통어구·어업 등 해양생활유산, 항만·어항 등 해양근대산업유산 등의 보호·활용·지원 등에 관한 종합적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해양수산물발전기본법」,

〈그림 4-17〉 연안·해양가치가 살아있는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안)



주: 저자 작성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항만법」 등에 해양문화유산 보호·활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볼 수 있다. 「해양수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의 ‘해양문화의 창달 등’에 관한 사항에 해양문화유산의 보호·활용 등을 명시하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6조의 ‘전통 어로의 문화 계승 등’에 전통어로문화의 활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항만법 제51조와 제54조의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재개발 추진 시 항만 관련 산업유산 등 발굴과 활용·지원 명시 등을 명시해 볼 수 있다. 특히, 해양근대문화유산인 노후 항만·조선소와 관련된 시설·건축물의 보전활용을 위해 재정적·제도적 지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YEOSU”, 해양 국제교류도시 조성·육성 추진

여수(YEOSU)에서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에서 채택한 ‘여수선언(The Yeosu Declaration)’에 따라 소도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해양

관련 현안해소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부터 매년 ‘여수해양법아카데미(이하, 여수아카데미)’ 개최하여 세계 개도국의 해양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자국의 해양관련 현안해결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2016년에 개최한 UN총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해양과 해양법에 관한 결의’에서 여수아카데미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따라서 여수를 세계박람회의 경험과 해양법 교육·훈련역량 등을 결합하여, 세계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즉, “YEOSU”를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교류와 협력으로 축적된 지역역량을 활용한 국제 해양지식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의 글로벌화가 가능하다.

〈그림 4-18〉 해양 국제교류도시 조성·육성 추진 (안)



주: 저자 작성

이를 위해서는 해양 관련 국제교류 도시 조성 등을 위한 안정적 재정 확보와 제도 등 특별 지원 등을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해양수산 발전기본계획 등에 YEOSU(여수)를 해양 관련 국제규범 등의 교류

등을 위한 해양법지식플랫폼 구축과 지역발전전략과 연동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UN해양법 및 해양수산 관련 국제법 연구와 소도서국을 비롯한 해양 개도국의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을 위한 “(가칭) 해양법규범연구·훈련센터”를 설치하여, 해양영토 관리, 불법어업, 해적, 국제해양환경규범 등 해양수산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와 개도국 해양전문인력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해 볼 수 있다.

3) 부산 항만배후지역 자유무역지대 확대 설정

부산항과 부산항 주변지역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제조기업 유치 및 부가가치 물류 활성화를 통한 항만배후지역의 발전이 중요하다. 이미 많은 일본⁵²⁾, 중국⁵³⁾, 싱가포르⁵⁴⁾ 등 세계 항만지역은 항만인프라를 활용한 신산업 유치 등을 통해 항만산업과 항만배후지역을 혁신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만인 부산항은 관련 법·제도 상충 및 기능 중복 등의 문제로 추진이 미진하다.⁵⁵⁾

항만 배후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항만법」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타트업 활성화 및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입주업종 관련 ‘포지티브 리

52) 일본 국가전략특구(도쿄권특구 등 10개)도 해당 특구내 여관숙박업법 특례 허용 등 50개 항목 이상의 혁신적인 규제개혁 추진 중

53) 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구는 최초 지정시(‘13.9) 28.78km²에서 ‘15년 120.7km²로 면적을 대폭 확대하며 무역편리화 제도혁신을 통해 화물·자금·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

54) 싱가포르는 차세대 항만 개발 및 국제 해양거점 구축을 통해 2025년까지 항만산업 부가가치 45억 싱가포르달러(SGD) 달성, 5천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

55) 항만 자유무역지역의 최대 강점은 저렴한 임대료이나, 까다로운 입주조건 및 조성 취지에 맞는 기업 유치 등 경직된 제도로 신사업 및 신규 비즈니스 유치에 한계

장기적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대’ 개념을 도입해 자유무역지역을 근간으로 규제샌드박스의 동일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관리권이 산업부(산단), 국토부(공항), 해수부(항만)로 분산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시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나뉘는 등 복잡한 거버넌스로 불필요한 행정이 유발되는 등 수요자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관세 통제기능을 갖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관리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관세 기능 이외의 내외국인 투자 등은 ‘규제샌드박스’의 원칙이 동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부사항 3대 허브 전략

부산 광역자유무역지대 추진



56) 1종 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업으로 화물의 하역·운송·보관 이외 ‘부가가치 창출 물류활동을 영위하고 자 하는 국내외 물류기업’(조립, 가공, 분류, 라벨링, 분해 등)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

4) 지역 맞춤형 해양·섬 관광 추진

최근 국민소득의 증가와 새로운 시대 가치(행복·힐링·올로 등)와 맞물리면서 해양관광의 다변화와 해양레저산업 등의 지속적 성장세에 있다. EU에서도 해변관광, 크루즈관광, 레저보트사업 등 해양관광 산업을 해양에서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해양관광시장은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관광시장의 계절성, 지역편중, 관광시설의 부족 등으로 해양관광의 질적 성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관광의 하계집중 등에 따른 관광지 혼잡, 만족도 저하, 계절적 실업 등 부작용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해양관광 인프라와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지역적 차별성이 부족하다. 특히 도서관광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열악한 도서접근시설과 연안-도서연계 교통수단의 부족, 도서특성을 살린 관광상품 부족 등은 도서관광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양·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섬 교통체계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선·도선사업의 활성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항만구역 내 유람선 운항 허용⁵⁷⁾과 영업 목적 외의 도서지역의 운항 시 보조금 지원 등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기상악화에 의해 보조항로 중단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일부 도서지역 (강원·제주)에 대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운항에 가능한 유선에 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유·도선의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사업면허·신고를 해양경찰서장에서 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에게 이양하여 유·도선사업의 인·허

57) 부산항 일대 유람선 운영을 위해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유선 등의 운항금지구역」을 일부 해제 추진하여 부산 남항·북항 등 일부 항만구역 내 유람선 운항규제 완화

가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서지역 운항이 가능한 유·도선사업에 대해서는 「해운법」과 의 칸막이 조항을 낮추어 면세유, 건조지원 등 유선사업의 보조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해운법」 ‘여객선’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적용범위를 ‘도서지역 운항 가능 유선’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도서의 관광개발 추진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도서 어촌정비·해양레저·관광유람선(해수부), 관광지 지정(문체부), 정주환경 개선(행안부) 등으로 구분해 있어 지역 주도의 협력형 도서 관광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즉, 연안·도서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 개별부처별 도서 관련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서관광개발 거버넌스 구축·이행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 도서, 크루즈, 유희 항만·어항, 어촌마을, 갯벌 등 해양관광공간과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위한 법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해양관광공간과 자원특성을 반영한 해양관광의 거점화와 네트워크화 추진과 지역주민 참여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추진하고, 지역 특화형 해양관광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청년인력·창업육성 프로그램 마련과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추진될 수 있다.

5) 바다·강의 어촌혁신과 어촌비즈니스 확대

우리나라 어촌은 도시, 강, 바다에 모두 분포해 있다. 바다가 아닌 강에 분포해 있는 어촌은 농식품부가 전담함에 따라 해수부 관할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어촌지역에 대한 형평성, 행정 비효율성, 종합적인 지역정책 한계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도시어촌, 강마을)

은 어촌개발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어업지역 재생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강마을을 5대강 수계와 저수지를 기반으로 해수부의 어촌개발사업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물양식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현재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동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상의 수산업 부문은 농축산업 부문과 동일 수준으로 행위제한⁵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축제식양식시설의 경우, 어장면적의 대비 20%에 한함에 따라 80%는 유희(여유)공간으로 두도록 하였는데, 이 유희공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축제식양식장에 필요한 전력사용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귀어·귀촌 창업 등 지원범위 확대를 통한 어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촌지역’ 정의 수정과 어촌비즈니스업 등의 확대가 필요한데,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3조 상의 ‘어촌’과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상의 ‘어촌지역’의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

〈표 4-1〉 어촌지역의 법적 정의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어촌)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읍·면지역 • 동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제외지역
-------------------------	---

58)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수산물육상해수양식시설, 수산물내수면양식시설, 수산물 집하·저장시설에 대해 농업부문과 동일 규모의 허용

귀어·귀촌 창업 등 시행지침 (어촌지역)	• 읍·면 전지역 • 동지역 중 도시지역(생산·보전녹지지역), 관리지역(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 집단취락지구지역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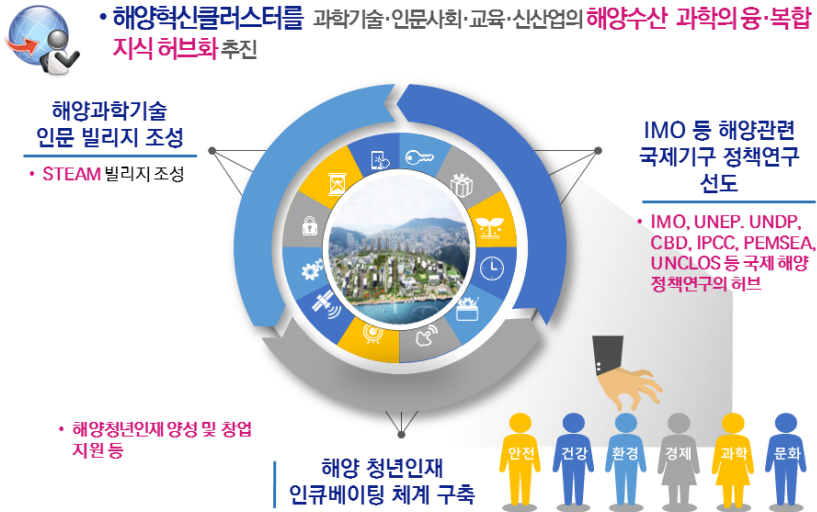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상 어촌비즈니스업의 확대가 필요한데, 현 시행지침에서는 ‘어촌비즈니스업’에 대해 ‘어촌관광(식사, 숙박, 체험 판매 등)’과 ‘해양수산물레저’에 한하고 있다. 어촌비즈니스를 수산생산·가공 등의 기술·서비스, 어촌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 교육, ICT, 건강, 복지 등과 연관된 비즈니스로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6) 해양과학기술 지식허브 클러스터 조성

해양혁신도시가 해양과학기술의 거점과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해양수산 중소기업과의 협업이나 지원, 해양 청년인재 양성, 그리고 창업까지 연결하기 위한 종합적 이행전략이 필요하다. 해양과학기술 지식허브체계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교육기관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위한 협력발전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즉, 해양수산 혁신 연계 범위를 혁신도시와 해양관련 연구특구와 해양산업클러스터, 기업, 금융·법률서비스, 대학 등으로 확대·지정하여 기업연구소와 인재육성, 창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인력·기술·장비 등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해양수산과학 지식허브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연구, 인재육성 및 지식창업 지원을 위한 상설 협업체계 및 정보공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양수산 관련 기업의 유치와 지원 등을 위한 매립지, 조선소 유희부지 등을 활용한 공간 확보와 입주기업 등 임대료 지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20〉 해양과학기술 클러스터의 지식 허브화



주: 저자 작성

7)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역수산 성장거점화

연안·해양지역의 수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의 차세대 수출품목 발굴·육성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별 수산식품 가공클러스터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수산가공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지역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과 어촌지역 발전과 연계한 「(가칭) 수산식품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수산식품의 경쟁력 제고와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 또한(수산식품 가공클러스터와 지역발전 연계체계 마련을 통해 산지와 연계된 수출전략형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업 육성을 위해 권역별 ‘수산식품 가공클러스터’ 조성과 이를 지역수산 성장거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산지와 연계 고

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기관 설립과 수출가공단지 조성 등 지역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지역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수산식품의 생산-유통-가공-수출 등과 해양과학기술·수산환경·지역발전과 연계한 종합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21〉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역수산 성장거점화



주: 저자 작성

8) 지역 수산전통시장의 활성화

지역 수산시장은 국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수산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수산시장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경제·문화공간이 된다. 그러나 지역 수산시장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현재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 취약, 인프라 노후화, 거래 불투명성 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의 지원·관리는 중기부와

지자체 담당, 식품위생관리는 식약처, 산지위판장과 도매시장은 해수부가 관리 분담하고 있다.

지역의 전통수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전국 수산시장 실태조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수산시장의 육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해수부 차원의 국민의 삶과 보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시장 육성·지원방안 마련과 범 부처(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지자체 등)와의 수산시장 위생관리·거래투명성·인프라 지원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 이미 2016년 시행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수부가 전통시장의 수산물 품질관리, 위생·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그림 4-22〉 지역 수산시장의 활성화



- 수산시장, 수산물 유통·판매, 소비, 관광 등 지역의 사회경제문화 핵심 공간
- 수산업의 외연확대와 가치제고를 위해 소매 수산시장과 소상공인의 정책지원과 사업발굴



주: 저자 작성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산시장의 명품화 추진과 소상공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수산시장 가격 표시제」 도입·추진, 수산시장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시장별 대표 먹거리 상품화 등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협업화를 통한 공동판매·공동마케팅 컨설팅 지원, 수산시장 투명화를 위한 소비자 감시단 운용, 수산시장 통역·안내 인력 확충 등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점포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고급 디자인 진열매대 지원, 생계형 노점·좌판 정비 사업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수산시장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수산물을 신선하고 깨끗하게 보관할 수 있는 냉장·냉동시설 등에 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⁵⁹⁾

(9) 민간 주도의 첨단양식 활성화

국제적으로 ICT 기술과 양식기술을 융합한 첨단 양식산업의 지속적 성장세에 있다. 양식산업은 세계선도 해양산업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북유럽의 수산양식 대기업에서는 최적 양식기술과 운영소프트웨어기술을 결합한 첨단 양식산업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첨단양식기술 도입·적용과 민간자본 투자 활성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첨단 양식단지 조성 and 민간자본 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부지 조성 and 해수사용, 원상복

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10조에서 제시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사업’에서 위생과 식품안전에 우선되는 수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 공동으로 수산물을 보관·처리할 수 있도록 냉장·냉동시설 등에 관한 지원 확대

구 등에 관한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

첨단양식장 운영 지원 부문에서는 간척지에 대규모 첨단 양식단지 운영에 필요한 해수사용과 시설설치, 원상복구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한데, 염해 방지 설비를 갖춘 육상 양식장의 양식용 해수사용 허가, 간척지(농지 용도)의 용도변경과 원상회복 의무면제 등이 필요하다. 양식시설도 일반축사시설 등과 같이 농지전용·타용도 일시사용 등은 별도 인·허가절차 없이 시설신축이 가능하도록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도서지역의 대중교통화 사업

도서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은 도서의 일일생활권 확보가 어렵다는 데 있다. 일반항로의 여객운송사업자들이 주말과 성수기를 제외하고, 운항을 꺼려 도서 지역의 일일 생활권 확보가 어려운 사례들이 종종 발생한다. 또한, 선원과 관련된 처우 및 선박의 현대화는 일반항로와 보조항로 모두 낙후한 실정으로, 특히 보조항로선사는 대체로 영세업체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인건비·수리비 등 지출하고 있어, 값싼 선원 인건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해난사고의 위험성이 늘 남아 있다. 이에 도서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선박의 현대화와 선원의 처우개선, 기항지 등 기반시설의 정비, 선원의 안전교육 등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7항 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⁶⁰⁾에 ‘연안항’과 ‘연안선박’ 포함되어야 하고, ‘연안항(항만법 제2조제3항)’을 국가기간교통시설로 지

60) 현재 동 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시설’로 국도·도로, 철도, 공항, 무역항, 복합터미널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연안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정하여 국가교통체계의 효율적 개발·운영·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박’을 「대중교통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수단⁶¹⁾’으로 지정하여 교통편의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연안해운은 연간 1,700만 명 이상(17년 연안여객선 이용객 1,690만명)⁶²⁾이 이용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연안해운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정하여 도서민과 방문객 등의 체계적 교통지원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편으로, 도서민의 일일생활권 확보와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적자 일반항로와 보조항로에 관한 공영제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보조항로 선사의 최저낙찰제를 재검토하고, 선사·선원 등의 진입장벽 철폐 등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박의 현대화, 접안시설의 정비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운송환경 조성해야 할 것이다.

11) 연안지역 통합재생체계 구축

이 사업은 낙후된 연안지역 원도심, 항만, 어촌·어항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safety), 생태적으로 건강하며(ecosystem) 쾌적한(amenity) 연안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이다. 연안·항만·어항·어촌 등에 있는 노후·유휴부지(폐조선소, 폐양식장, 노후항만·어항 등)와 미준공 매립지 등 활용해 연안지역의 재생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버려지고 방치된 산업·항만·어항부지 등의 용도 전환(국계법, 항만법 등 연계 추진)과 미준공 매립지와 폐양식장 등을 친수공간 등으로 활용(공유수면법) 등을 위

61) 「대중교통법」 제2조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버스와 철도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시설’을 ‘버스시설·공작물과 철도시설 등’으로 한정함. 대중교통수단의 조건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와 ‘다수의 사람 운송’임.

62)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연보, 2018, p. 7

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범부처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⁶³⁾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과 생태복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연안지역의 안전·친수·생태 등 복합형 연안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역별 맞춤형 연안정비사업과 국토보존·친환경적 연안조성을 위한 복합형 연안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편성비율(국비 70%+지방비 30%)을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⁶⁴⁾

12) 연안 Startup 육성사업

연안지역의 일자리 부족, 투자기반 붕괴 등으로 청년층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연안지역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인구감소,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와 신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최고령화 및 소득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연안지역의 우수한 발전잠재력에 기반한 다양한 스타트업기업의 창업기회 마련을 통해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⁶⁵⁾

이를 위해 우선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이 필요하다. 주요 해양수산 지자체 및 공기업에서 해양수산 창업거점 지정과 창업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지역기반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다. 또

63) 공유수면 관리 및 재해대응(연안계획과), 해양환경복원(해양보전과/해양생태과), 친수공간(해양레저과, 항만개발과), 연안도시 계획(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공공재원확보(기획재정부) 등

64) 현재 연안정비사업 중 연안보전사업(국비 70%+지방비 30%)과 친수연안사업(국비 50%+지방비 50%)은 차등 지원

65) - Port XL: 로테르담 구항만 노후시설을 활용해 청년들의 해양수산창업 지원과 대기업 매칭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 지원

- COVE(Ocean Ventures and Entrepreneurs): 캐나다 헬리팩스에 위치, 해양관광, 해양에너지, 수산양식, 해상교통, 해상안전 등을 위한 해양창업교육과 해양기술상용화 추진

한 해양수산 스타트업기업을 위한 규제정보서비스 일원화하여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원스탑 정보시스템’ 운영하여 운영 자원에 한계가 있는 초보 창업자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분야 포함 산업 전체 상이한 인·허가 프로세스 및 기준, 투자유치, 기술개발 및 상용화 방법과 펀드지원·운영에 대한 일원화 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림 4-23〉 해양수산 관련 스타트업 예시



주: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관계부처 합동, 조선산업 발전전략, 2018
- 관계부처 합동,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어촌뉴딜 300」 추진계획, 2018.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부문별 계획 초안, 2018.
- 국립해양조사원, 해안선공표통계자료, 2017.
- 국립해양조사원 보도자료,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 상승속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2017.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주요내용, 2018.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권종합계획(2010~2020), 2010
- 국토교통부, 2016 지적통계, 2017.
- 국토교통부·국토계획연구단,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지침, 2018.
- 김정홍 외, 지역경쟁력의 원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2010.
- 대한민국 정부,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12.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발전5개년계획 (2014~2018), 2014.
- 수협(내부자료), 「2016년 어촌계분류평정」, 2017.
-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 통계청, 2017년 어업생산동량조사결과(잠정), 해양수산부, 수산물가공업통계, 2018.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외,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자료집, 2018
- 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통계연보, 2018.
- 해양수산부, 2013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2014.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10~2019), 2015.
- 해양수산부, 2015년 국가 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2016.
- 해양수산부, 2016년 연안침식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016.

- 해양수산부, 2018년 업무계획, 2018.
-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관리유형 현황, 2018.
- 해양수산부,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2011~2020), 2017.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활성화 추진계획, 2018.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2017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조사연보, 2017.
-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2017년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 2018.
- 해양수산부·ADL, 미래 국가해양전략(National Ocean Strategy), 2006.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7년 해역이용협의 2,547건, 전년 대비 12% 증가, 2018.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시민이 주도하는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본격 시동, 2018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인천 내항·곡물창고, 상상 펼치는 미래공간으로 재탄생한다. 2018.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각 년도.
- 행정안전부, 제2018-20호 개발대상도서 지정고시, 2018.
- 홍장원 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차원에서 접근해양, KMI 동향분석 69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국내 문헌: 광역자치단체 해양수산 업무계획〉

- 강원도, 올림픽 이후, “국제 강원” 추진을 위한 「新 강원」 추진전략 실행계획, 2018
- 강원도 보도자료, “강원도, ‘평화의 바다 추진전략 회의’ 개최, 2018.
- 강원도, 2040 강원비전, 2017.
-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2012.
- 경기도, 2018년 주요 업무보고, 2018.
- 경상남도 해양수산 발전 도정 4개년계획 추진과제, 2018.

경상남도, 주요 업무보고 자료, 2018.

경상북도, 신동해안 해양수산 마스터플랜, 2014.

경상북도, 2018 주요업무계획, 2018.

부산광역시, 제2차 부산시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 2016.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부산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 민관합동 토론회 자료, 2018

부산광역시,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2018.

울산광역시, 2018·2019 주요업무계획, 2018.

울산광역시, 울산시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중간보고서), 2018.

인천광역시, 2018 주요업무계획, 2017.

인천광역시, 인천 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 2017.

전라북도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2017.

전라북도, 2018년 주요업무계획, 2018

전라북도, 전라북도 도정계획, 2018.

전라남도 제3차 5개년 해양수산발전계획, 2015.

전라남도, 2018 업무계획, 2018.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 2014.

제주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2018.

충청남도, 해양수산국 주요 업무보고, 2018.

충청남도, 해양수산발전계획, 2015.

〈인터넷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검색일자 : 2018.08.21)

바다생태 정보나라, <http://www.ecosea.go.kr> (검색일자 : 2018.03.04.)

부산일보, “부산 수산가공 클러스터 2022년 개장(2018.02.01.)”,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201000266> (검색일자 : 2018 09.02.)

해양수산부 통계시스템, <http://www.mof.go.kr/statPortal/main/portalMain.do>
(검색일자 : 2018.09.04.)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검색일자 : 2018.08.21)

부록

부록 1. 제주

1. 회의 내용

회의명	제주 해양수산 현안과 혁신정책 간담회
회의안건	제주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현안 청취 및 혁신정책 발굴 -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및 2018년 지역포럼 개최와 연계
일시	2018년 5월 16일(수) 14:00~16:3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자유실
참석자 (17명)	제주도청,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제주해양수산연구원, KMI, 내일신문
현장사진	

2. 주요 내용

- (현안/역할 이해) 참석기관별 해양수산 지역발전 관련 현안 및 역할 소개
 - (제주도청) 제주의 해양수산 현안 발표 및 해양수산부 건의사항(자료) 소개
 - (제주연구원) 해양수산 분야 연구과제* 및 한중 국제학술세미나(해상 실�크로드 발전방안, '18.7.) 개요 소개
 - * 제주 해양경제 시범도시 기초연구, 제주 품질위생형 수산물 산지위판장 조성연구
 - (KMI) 지중해 프로젝트*의 기획의도 및 KMI 해양수산 지역발전연구 센터의 역할 소개 → 주제별로 시도연구원/국책연구원과 공동연구 진행 + 시도별 지역정책 아젠다를 종합/구조화하는 큐레이션 역할 담당
 - * KMI-내일신문 공동기획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지역과 중앙이 해양으로 상생한다.'

- (주제토의) 제주도청의 해양수산 관련 지역이슈 청취 중심, 주제별 질의응답을 통한 이해 심화 및 공동 대응방안 모색

- (주제) 제주도청의 주요 현안 사항은 아래 목록 참조

- ① 해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② 해양자치권 강화
- ③ 연근해 외국인선원 관리 ④ 낚시어선 안전관리
- ⑤ 해양쓰레기 관리를 통한 청정바다 구현
- ⑥ 수산물 산지위판장 관리체계 개선
- ⑦ 기타(국가주도 어장보호 대책 마련, 제주해양진흥공사 설립 등)

- (간담회 결과 활용방안) 지역 중심의 해양수산 정책사업 발굴 및 지역 공통의 이슈 취합을 통한 규제개선 공동 대응

- (지역특색을 반영한 정책사업 발굴) 국정과제(중앙과제) 중심의 기존 해양수산 정책에서 나아가 지역특색을 반영한 지역 주도의 정책사업 확대

- (지역 공통의 이슈 취합 및 법제 개선) 간담회/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안/혁신정책 목록화 → 지역간 공통 이슈 확인 → 관련 현안 해결 및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규제정비/법적지원 방안 구체화

* 금년 상반기 중 전국 13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간담회 진행 예정

- (언론을 통한 공론화) 지역의 현안이 중앙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중해 프로젝트(내일신문)를 통한 지속적인 공식화·이슈화 작업 진행 예정

* 상반기 간담회 결과는 내일신문을 통해 한 달에 2회씩(하반기) 기사화 예정

*** 기사(한 면) 중 1/3은 간담회 결과, 1/3은 지자체장 인터뷰, 나머지 1/3은 지역의 대표적인 해양수산 비즈니스 관련 내용으로 구성 예정

- (연구과제로 구체화) ① 시도연구원과 공동 연구 ② KMI 내 5개 연구본부와 공동연구 또는 특정 연구본부에 이관

3. 주제별 세부내용

1) 해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해녀문화유산 활용의 전문성/재정 문제) 제주의 해녀어업은 대한
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15년)되었으나, 해양수산
부에는 전담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또한 한시적(3년간)
으로 진행되어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어려움

* 해녀 문화는 '16년 유네스코 등재 완료

- (해녀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필요성) 제주연구원의 「제주
해양도시 시범도시 기초연구」에 해녀의 전당 또는 문화마을 조성
등 관련 내용 포함, 반면 도 자체적으로 진행한 해녀문화마을 조성
의 재정영향 분석결과는 국비확보 필요성 제기 → 문체부/문화재청
을 통해 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국책연구기관 또는 중앙정부를 통한 재정지원의 당위성

* 해녀의 전당: 해녀박물관을 확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녀문화 관련 내용을
집대성

- (해녀문화마을의 소득화 연계 방안 필요) 국가주요문화자산으로서
해녀 관련 문화사업과 지역의 경제활동을 융복합/혁신 사업으로
확대 → 제주 해녀문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소득화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제주 해녀는 육지와 달리 어촌계에서 직접 면허를 받아서 조업활동을 하고,
5% 내외의 수수료 외 전액은 해녀에게 귀속. 반면 육지는 조업인이 면허를
빌려 해녀들을 모으고, 수익을 임금의 형태로 지불하거나 50:50으로 배분하는 형태

- (해녀문화와 전국 어업유산 연계 활용) 제주의 해녀문화(국가중요
어업유산 제1호)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어업유산, 수산, 해양문화자산
등을 연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사업 발굴 필요 → 국가중요어업
유산 관리 차원

2) 해양수산 자원관리를 위한 해양자치권 강화

- (지역의 해양자치권 강화 필요) 지방정부가 해역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보장하고, 시도의 해역관리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지역의 해양자치권을 강화할 필요 → 해양자치권 확보는 지역경제의 문제를 넘어, 수산자원 관리 및 조업/영업활동 안전 등 주요한 사항에 관리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해양수산 이슈를 해결 가능
- (해양자치권 관련 법제 개편 필요) 해양수산 관련법에서 시도지사 권한을 보장하되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중앙의 권한을 명시하는 불합리한 법령 목록화 작업 필요 → 해당 목록을 해결의 용이성에 따라 구분하고, 해결이 쉬운 사례부터 법제정비 또는 규제개선 등의 방안 마련

3) 연근해 외국인선원 관리

- (외국인 선원 활용 관련 규제) 제주는 어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리주체의 복잡성 및 노조의 규제부과 등 다양한 규제요인들로 인해 어려움 경험

* 제주 내 외국인 어선원의 비중은 약 50%(약 천명)

- (관리기관 및 비자 등 절차의 효율화 필요) 선급 20T 이상/이하 및 어선/상선 여부에 따라 관리주체가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수산부서/어업부서)로 이원화, 또한 해양수산부는 20T 이상은 선박선원으로 간주하므로 어선/상선 구분이 불가능 → 어선 수요가 높은 제주에 부적합한 상태

* 수협 차원에서 대응을 지원하기는 하나,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해수부 권한

- (어선원 대상 보험유형 정리 필요) 선원에게 부과되는 4대보험 기준이 지역별로 상이, 어선원보험과 고용보험 간 단일화(현행 혜택

중복)가 필요. 또한 어선원은 승선일수 등 일용직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육상근로자와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특성 미반영

- (노조권한 관련 규제조정 필요) 외국인 선원의 승선/조업시 노조의 승인이 필수적이나 노조의 비협조적 태도, 더불어 노사정위원회 등의 외국인 고용 관련 규제사항이 다수

* 노조는 선주들에게 외국인 선원 인당 5만원(승인비용)씩 매월 수령

- (북한선원 활용방안 제안) 제주 내 외국인 관리의 지리적/제도적 용이성을 활용, 언어/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북한선원을 조업에 활용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고려 가능

* 북한선원 고용 및 제주 내 전담센터 설치를 해수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검토의견 없음

**개성공단의 북한직원 월 급여 30만원, 제주 어선원에게는 190만원 지급 가능

4) 낚시어선 안전관리

- (낚시어선 관리주체 모호) 낚시어선관리육성법에 따르면 연안어선(시도지사가 허가/등록) 관리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하위 법령(시행령 등)에서는 중앙정부에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리주체가 모호

- (낚시어선 안전관리의 문제) 관리주체가 모호하여 안전관리 기준이 낮은 배가 진입하거나 시도 경계를 보고 없이 넘나드는 등 관리차원의 문제가 발생

* 추자도 돌고래호 낚시어선 전복사건(2015) 등

- (연접수역의 기준 부재) 연접수역 내 연안어선은 10T 미만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조업을 못하도록 규제하나, 낚시어선은 영업 활동이 가능한 불합리한 구조

5) 해양쓰레기 관리를 통한 청정바다 구현

- (해양쓰레기 집적) 북서풍으로 인해 남해/전라 인근 양식장에서 계속 양식쓰레기가 밀려오고, 제주와 완도 사이 유조선 및 크루즈선 등으로 인해 다국적 쓰레기가 제주에 침적/퇴적
-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문제) 제주지역 어촌계에서 인근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나, 자연현상으로 인해 제주로 몰리는 해양쓰레기를 전액 지방비로 충당하여 치우는 등 비용부담 → 국비지원의 필요성 절감
- (금어기/휴어기 내 해양쓰레기 일괄 수거) 해양쓰레기 관리를 어장 정비사업 형태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휴어기를 활용/지정하여 쓰레기 일괄 수거 및 모래에 사적된 유령어구 정리방안 고민 → 유관사업 지속 필요
- (해양쓰레기 수거 일자리 활용) 금어기/휴어기 중 어선원들을 근해 해양쓰레기(저인망, 통발/그물 등 활용) 처리 및 어장청소에 고용하여 일자리 제공 가능
- (제주 청정바다지킴이 사업 확대) 제주도는 자체예산로 어민들이 참여하는 청정바다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앙의 예산을 활용(지방비+국비 매칭, 또는 국비전액)하여 이러한 사업을 확대 운영할 필요

* 현재 어촌계 인력에게 일당을 주는 형태로 운영 중

6) 수산물 산지위판장 관리체계 개선

- (품질위생형 산지위판장 조성) 제주 내 수산물 산지위판장의 위생여건 및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FPC 또는 HACCP 위판장 등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단계적으로 전자경매/저온위판장

/플라스틱어상자 등의 설치/활용을 확대할 계획 중임

- (일본사례 참고) 일본은 현마다 위판장 개선 등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품질위생형이 아닌 위판장의 영업제한 계획 중

7) 기 타

- (갈치조업 관련 정보제공 및 관세제도 개선) 제주 어선의 갈치조업에 활용되는 미끼는 콩치, 미끼용 콩치는 대부분 일본에 분포 + 주로 대만이 콩치를 미끼화 하여 판매 → 제주의 갈치조업은 일본/대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관련 어업동향 정보 제공 + 축산사료(무관세)임에도 미끼용 콩치는 해외 수입이기 때문에 28% 관세 부과 받는 불합리한 구조 개선 필요

- (제주해양진흥공사 설립) 제주는 해운/조선 분야에 주목하는 부산과 달리, 해양진흥공사/해운항만물류공사(가칭, 지방공사 형태)를 통해 항만관리/물류/크루즈/터미널 관리까지 가능한 형태로 해양물류에 초점을 둔 차별성 확보 필요

* TF조직 완료, 행안부 보고 완료

- (제주물류고속도로 추진) 제주를 물류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물류고속도로 형태의 연결망 확보, 제주항-목포항 간 이권/연계의 문제
- (제주해양전략위원회 운영) 제주의 해양 이니셔티브 강화를 지원하는 전담 위원회 설치
- (국가주도 어장보호 대책 마련) 중앙의 권한으로 어촌계/업종/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가적 차원의 어장 보호 및 수산자원 관리를 실현할 필요

* 중국은 산란기 중 조업중단 등을 통해 수산자원 보존 노력, 반면 우리나라는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으로 인해 혼선 초래

4. 향후 계획 및 일정

- (제주 지역포럼 개최) '18년 중 제주연구원(제주도청)-KMI 공동으로 지역포럼 개최 및 현안 이슈화 작업 진행
 - (일정) '18년 하반기 중 개최 합의, 지방선거 이후 일정 구체화 필요
 - (주제) 주제 확정 필요, 금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제(안)은 아래 참조
 - ① 해양자치권 관련 지방분권(제주도청), 해양경제시범도시(제주연구원), 법령개정 및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KMI) 발표
 - ② 자원관리 차원에서 청정제주바다(해양자원 및 해양쓰레기) 및 제주 중심의 섬관리 방안(제주 내 유관 연구센터 개설) 방안
 - ③ 제주 해양수산물발전 기본계획(해녀문화마을, 수산자원관리 등 중심) 관련
 - ④ 제주도지사(당선자) 공약 중 전국 해양수산 이슈와 공통되는 사항
- (KMI-제주연구원 공동연구 착수) '18년 하반기 또는 '19년 상반기 중 공동연구 주제 발굴 및 착수 협의
 - (참고: KMI-시도연 공동연구 진행상황) '17년 지역포럼 개최지역(충남/강원/전남) 중 충남연구원 및 강원연구원과 공동연구 진행 중
 - * KMI-충남연: 과제명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 ** KMI-강원연: 과제명 '강원도 어촌마을 신활력 제고방안 연구'
 - ***KMI-전남연: (논의중)
- (간담회 정례화/확대 필요) 제주도청 측은 연 2회의 지역간담회 개최를 통해 지역현안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공식 루트의 필요성 강조

부록 2. 전남

1. 회의 개요

회의명	전남 해양수산 현안과 혁신정책 간담회	
회의안건	전남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현안 청취 및 혁신정책 발굴 -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와 연계	
일시	2018년 6월 11일(월) 14:00~16:00	
장소	광주전남연구원 회의실(8층)	
참석자	전남도청	해양수산물 양근석국장, 유통가공과 양진문과장 외 4명
	광주전남연구원	박성수원장, 농수산해양연구실 김동주실장 외 5명
	해양수산과학원	남부지부 정경태지부장 외 1명
	전남 지자체	여수시 수산경영과 이한곤과장, 완도군 해양수산업정책과 안태호과장, 신안군 해양수산물 문성철과장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김삼식본부장, 고흥군 수협 최형진지도상무
	KMI	정명생부원장 외 해양수산업지역발전연구센터 구성원
	내일신문	정연근기자
주요현안 제안사업	① 전남형 어촌뉴딜 300모델 개발 ②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③ 국립 「섬 정책 연구원」 도내 설립 지원 ④ 전남 요트마리나 활성화 ⑤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종합계획조기고시 ⑥ 기후변화피해예방시스템 대응능력제고 ⑦ 참돔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 ⑧ 연안어장 수산자원조사 빅데이터 기반 방안 ⑨ 연근해 어획량 감소 대책 마련 ⑩ 외국 유입 해양쓰레기 영향 실태조사 ⑪ 품질관리형 위판장 모델 개발 협조 ⑫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원 유치 ⑬ 귀어학교 개설 운영 홍보 협조 ⑭ 수산분야 남북 교류협력 기초자료 조사 ⑮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권 지방자치단체 이양 ⑯ 낚시터 및 유어장 규제 완화 ⑰ 이상기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 최소화 방안	
현장사진		

2. 주요 내용

- 전남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식품종의 수급조절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어장관리 등 수산 분야의 현안에 주목
-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별 대응방안은 해양수산 분야의 (1) 지역사업 발굴 및 (2) 시도간 공통이슈 취합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으로 구성

〈전남의 해양수산 현안별 대응방안〉

구 분	현 안	대응 의견(안)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발굴	① 대표 양식품종 수급조절 문제(전복, 김 등)	• 품목단위 생산자 조직 운영 → 생산량 조절 • 어류복지 개념 도입으로 과잉생산 조정(중장기)
	② 양식어민의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활용	• 기후관측장치 설치 확대(사업지역 확대) • 기후정보(5분단위) 앱 활용도 제고 • 관측자료를 재해보험 증빙자료로 활용
	③ 전남의 해양수산 분야 정체성 정립	• 전남의 해양수산 브랜드 발굴(예: 갯벌, 해양 환경 등)
시도간 공동대응	④ 수산업 분야 인력 부족	• 귀어학교 운영 실효성 제고 • 외국인 인력 활용제도 보완
	⑤ 연안어장 수산자원 기초 조사 및 어획량 관리	• 지역별 대표 어업자원 생태계 모니터링 *전남 자체적으로 수산자원조사센터 설치 예정 • 불법어업 단속강화 및 어구어법 혼획 제한
	⑥ 섬 접근성 개선 및 섬 전담연구기관 전남 유치	• 섬주민들의 교통복지(1일생활권) 지원 • 수산물운송 전용 쾌속선 운영 • 행안부-해수부 섬 정책 연계 • 전남지역에 종합관리 센터/사무소 설치 요구 *전국 섬의 68% 위치
	⑦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 면허권 지자체 이양 → 연안항로 운영의 공공성 강화 • 항법안전관리(통제/감독)는 중앙이 전담
	⑧ 낚시터 및 유어장 규제 완화	• 수산자원보호구역/국립공원 내 제한적으로 낚시터/유어장 운영 권한 부여
	⑨ 해양쓰레기 정리 및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	• 외국 유입 해양쓰레기 영향조사 및 관리비용 지원 • 품목별 품질위생관리형 산지위판장 모델 제시

구 분	현 안	대응 의견(안)
시도간 공동대응	⑩ 기타(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장감소, 간척지 어업이용)	• 해상풍력 지역 어장관리, 해양환경 관리 대응 •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관련 조기 고시 지원

① 대표 양식품종 수급조절 문제(전복, 김 등)

- (양식품종의 과잉생산 문제 반복) 최근 전복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 문제 심각* → 체계적인 수급조절 및 어민 인식개선 필요

* 과거 김, 넙치 과잉생산 문제 발생, 품종별로 동일한 문제 반복 양상

- (대안1.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안정화) 수급문제 대응에는 중앙, 지자체, 어업당사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 → 협업체계 및 논의의 장 마련

- (대안2. 품종별 생산자조직 구성) 품목단위로 전국/권역별 생산자조직을 구성하여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한 수급조절 사례(농업분야) → 수산분야에서도 양식품종별 조직구성으로 수급조절 시도 가능

- (대안3. 신속한 품종전환 시도) 수급조절 실패 또는 대량폐사 양식장 발생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신규품종 도입 연구 필요

- (대안4. 어류복지개념 적용) 장기적으로는 동물복지 개념을 통해 어류양식의 밀식화를 지양하는 노르웨이 사례 참고, 장기적인 수급조절 및 친환경양식 가능 → 자연친화적 양식시스템 연구 및 환경수역 법제화 필요

② 대표 양식품종 수급조절 문제(전복, 김 등)

- (이상기온으로 양식어가 피해증가) 고수온, 저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 수산물 폐사율 증가 + 전남은 전국 양식생산량의 70% 이상 담당하나 천해 가두리 양식형태가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 → 실시간

관측시스템 및 예방체계 필요

- (현행 관측장비 부족)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조기대응의 어려움 및 사고시(특보미발령) 보험사 원인규명의 한계 → 관측설비 확대 설치 및 실효성 높은 관측정보* 제공 필요

* 현재 수협차원에서 완도 전복양식장 7곳을 대상으로 어장관측정보시스템 구축 + 스마트폰용 앱(APP) 지원 → 5분단위로 정보 제공(관측은 5초단위)

- (관측주체 및 관측지점 분절화 개선)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일원화* 하여 관측정보 효율적 전송·관리 요구

* 전남 차원에서는 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18~'22년) 착수

③ 전남의 해양수산 분야 정체성 정립

- (전남의 해양수산 자원 활용 부족) 전남은 섬, 갯벌, 양식생산량 등 해양수산 자원이 풍부하나, 현안대응의 시급성 및 자원활용도 부족으로 해양수산 측면의 정체성이 빈약 → 정체성 정립*을 통한 종합적 대응 필요

* 가령 전국의 40~50%를 차지하는 전남의 갯벌은 생산-가공-유통-판매까지 연계하여 활용 가능 → 전남의 정체성으로도 활용 가능

- (정체성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특징점 발굴 및 정체성으로 활용 → 전남의 해양수산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④ 수산업 분야 인력 부족

- (수산분야 인력 감소) 해양수산 분야 인력 감소세 및 구성변화 → 내국인 인력 감소 + 외국인 인력 증가 추이*

* 최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러시아 등지의 외국인 인력 증가세

- (내국인 후계인력 양성 필요) 수산업 분야 인력증대 정책은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인력활용의 제도적 편의 측면에 편중 → 전남은 후

계인력 지원을 보다 주요한 대안으로 판단, 자체적인 어업후계인력 양성정책 확대

- (후계인력 정착지원 제도화) 전남은 다양한 현장실습(어장시설·양식장)이 가능한 귀어학교 운영방안 마련 중 + 정책적으로 후계어업인들의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시도

* 전남 고흥, 신구어장 개발시 귀어인 우선 투입(현재 40명의 귀어인이 어업활동 중)

⑤ 연안어장 수산자원 기초 조사 및 어획량 관리

- (어업자원의 종합 관리체계 부재) 연근해어업 생산량 감소로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위협 → 수산자원 조사 및 관리체계 확대* 필요

* 현재 국내 수산자원 모니터링은 서해 5도, 이어도, 동해북방 등 근해에 국한

- (통합조사센터 설치 필요) 해양환경 및 어업자원의 생태계 변화를 종합적·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국가/권역별 통합조사센터* 설치로 체계적인 관리 도모

* 전남은 '19년부터 자체적으로 수산자원조사 시스템 마련 예정

⑥ 섬 접근성 개선 및 섬전담연구기관 전남 유치

- (섬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 조차시간, 이동거리, 수익성 문제 등으로 육지와 1일생활권이 불가능한 전남 섬지역 다수 → (7)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지방이양 이슈와 연계하여 대응 필요

- (전담연구기관 유치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섬발전센터(강원 홍천) 설립 → 그러나 전국 65%의 섬을 보유한 서남권에 설치 필요성 제기

⑦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권의 자치단체 이양

- (지자체의 해상운송사업 면허권한 부재) 현행 해상여객선 면허권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귀속* → 주민 불편사항** 및 교통단절(선박사

고 등)에 따른 대응체계 개선 필요

*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은 면허권인「해운법 시행령(제27조)」에 근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권한위임

*** 주민 불편사항은 지자체에 접수, 반면 면허권 부재로 지자체 차원의 민원대응 불가

- (연안여객 항로운영의 공익성 제고) 수익성에 근거한 항로개발(민간) → 면허권 지방이양으로 항로의 계획적 편성, 주민들의 교통복지 개선 등 공익적 접근 필요

⑧ 낚시터 및 유어장 규제완화

- (보호구역 지정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 취약)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국립공원 지정 지역에 각종 행위제한 → 주민소득 제고를 위해 제한적 규제완화 필요
- (낚시터·유어장 지정허용 검토) 법령정비 검토사항 → 국립공원 내 지정허용(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허용행위 추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지정허용(수산자원관리법 별표16, 허용행위 추가), 낚시터업을 위한 매립행위 허용(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4조 항목추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기준)

⑨ 해양쓰레기 정리 및 위판장 위생여건 개선

- (외국 해양쓰레기 유입) 계절풍, 조류 등으로 최대 2만톤(추정)의 외국기인 쓰레기가 전남 해안가에 표착 → 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야기
 - * 쓰레기 자체적으로 오염야기, 일부 쓰레기의 납성분이 해안에 용출 가능
- (해양쓰레기 수거비용 문제) 현재 균특예산으로 지자체가 처리 중이나 재정부담 가중 및 지역대응 한계 → 국비지원의 필요성 절감
- (실태조사 인력지원 필요)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영향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필요 →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및 데이터 관리

지원 필요

* 드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국 폐어구 분포 실태조사, 유해물질조사 등
환경영향 평가, 경제성 분석 등

- (산지위판장 시설개선 요구) '18년 하반기 이후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 제정에 대처 → 품질관리형 위판장 건설 및 노후시설 개선 필요

- (지역별·품목별 위판장 모델 차별화) 주요 품목 및 지역별 어획·유통 특성에 따른 위판장 표준모델* 부재 → 전남형 클린위판장 표준화 연구 협조

* 전남은 전국 선어·김 등 위판량 1위(여수·진도수협)임에도 표준모델 조사 미흡

⑩ 기 타

-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장감소) 최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 어장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소득저하, 어촌사회 갈등* 등의 문제

* 발전사와 어민 간 어장감소, 경관, 어민들의 풍력발전 사업 참여 등의 갈등 발생

- (간척지 어업이용 조기실행 검토) 농림부「간척지의 농어업적 활용 종합계획」조기 수립·고시 요구 → 간척지의 어업적 활용 종합계획 조기 고시를 통해 고소득 양식어장 조기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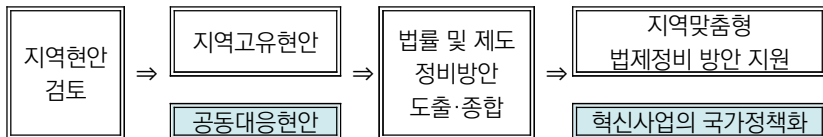
부록 3. 부산

1. 회의 개요

회의명	부산 해양수산 현안과 혁신정책 간담회
회의안건	부산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현안 청취 및 혁신정책 발굴
일시	2018년 10월 4일(목) 13:30~15:40
장소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회의실
참석기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정책과, KMI, 내일신문
현장사진	

2. 주요내용

(검토방향) 지역현안 검토 → 전국 연안시도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제정비·국비확보 방안 도출 중심



- (현안개요) 동북아 해양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자치권한 강화 중심, 항만·관광·수산 분야 특성화 사업 중 법제한계 및 국비지원근거 부족 등의 문제 대응

* 해양수산국의 2018년 6대 추진과제와 연계 추진

- ① 동북아 해양수도 역량강화 ② 新해양시대, 해운하기 좋은 도시 조성
 ③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 조성 ④ 부산 수산업의 미래 新성장산업 육성
 ⑤ 글로벌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 조성 ⑥ 시민친화형, 효율적 사업소 운영

■ 주요의견

구분	의견
부산광역시 박종규 과장	• 부산 해양수도발전조례 개정 필요: (기존) 해양수도는 해양의 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산업, 문화,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해양산업 중심의 선진도시 → (향후) 해양산업 외 부산 내 전 정책분야에 해양관점 적용 필요 • 해양수산 분야 공동 혁신대응 방안 모색시, 특정 이슈에서는 시도간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고려 필요 (예시: 극지타운/해사전문법원 등은 인천과 경쟁구도 등, 수협중앙회 본사이전 등도 여타 시도와 경쟁구도 있음) → 답변: 시도간 경쟁관계에 있는 주제보다는 (예시: 남항지역에 요트 등도 다닐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 항만구역 활용방안 등) 지역특화 주제 중심으로 운영 예정 • 부산발전연구원과 공동연구 주제로 부산 내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제도 개선 + 시 요구사항 반영) 제안 → 지자체의 입장 종합 • * 해양경제특별구역(해양특구)에서 해양산업클러스터로 변경되며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의 실제 손실, 그러나 클러스터는 시너지효과 중요 + 해운항만/수산업을 클러스터화 하는 것이 필요, '18년 WOF의 아이슬란드 오션클러스터 사례 참고 가능 • 회의자료 중 부산의 주요현안 및 제도적 장애요인 소개 (1)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 확보: BPA(現국가공사)가 부두운영권 등 투자를 하려고 하니 제약 많음*, 지방공사화하여 부산과 BPA가 공동으로 부두사용권 운영 등 방안 필요 → 항만공사법 개정 등 필요, 인천 등 5개 PA가 모두 동일한 문제 * 부산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PA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짐 (여타 지역의 PA와 차별화되는 부분), 항만 자체의 기능을 북항에서 신항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항만운영권 등의 문제 발생 → 향후 항만 운영은 신항으로 주요 기능 이전 예정, 항만공사법상 부산의 주체적인 역할이 어려움 (2) 마리나 항만 + 해양관광: 크루즈 운영에는 해수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 지자체 정책추진에 제약 → 다른 시도도 비슷한 문제 있을 것으로 예상 (3) 극지타운 설립: 용호동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부지를 지정해 두었으나, 인천에도 극지연구소가 있다보니 중복성 등의 문제로 반대가 있음 → 반면 부산은 인천은 극지의 기초과학 연구, 부산은 응용과학 중심(산업활용) 측면의 차별화를 하고자 하나 해수부에서는 부산의 극지타운의 역할/기대효과 등의 타당성 문제(현재 연구용역비 6천만원 확보, 타당성 분석, 10월~내년5월까지)

구 분	의 건
	(4) 해사전문법원 설립: 인천과 경쟁구도 (5)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 최근 논의가 시작된 부분 → 금융(제3단계개발) 등과 연계 가능, 반면 관련 부지확보 등 문제 (6) 우암부두 개발계획에 ODCY 포함: 해수부는 우암부두는 승인, ODCY는 민간부지라 포함 불가능 하다는 의견 → 반면 부산 입장에서는 ODCY까지 포함해야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항만 + 배후단지 + 주택종합개발로 광범위하여 추진할 필요 (7) 북항을 2030엑스포 부지로 검토: 북항 + 우암부두 + 감만부두로 광역 개발 → 2030 마스터플랜* * 현재 2030을 포함한 북항개발예산 확보(국비 35억, 용역예산) (8) STEM 빌리지 조성사업: 現시장님 관심사업*, 기존에는 혁신도시의 기술개발+교육기능 등을 활용하여 산업화하는 기능이 없음 →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부산의 해양산업 기능 강화 필요 * 타당성 용역은 KIOST과 공동으로 연구한 이전의 용역으로 같음, 2019 부터 바로 실시설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구 중(용역비 추가 3억 계획)
부산광역시 김미영 주무관	• 해양수도정책과장 언급사항에 대한 부연설명 및 추가 현안 소개 (1) 부산의 해양정책 추진권한 취약: ①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주관이 해수부, 시가 협조부서(해양농수산물 내 해운항만과) 기능 ②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해양수산부 주도(개발계획은 해수부 수립 중) → 부산 연안·해양지역은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구역에 묶여있어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정책 부족 (2) 항만-도시 연계개발 기반 마련 필요: 가령 북항(국가관리무역항)은 국가 관리 →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변경 또는 지방권한을 확대할 경우, 부산 시의 참여 및 북항재개발 + 북항지역세권종합개발 + 초량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 (3) 항만기능 소실 후 재개발: 항만의 기능이 다하여 재개발을 추진 중이나 법적으로 여전히 항만구역 개발에 포함 → 지방재정 투입에도 불구, 재개발에 따르는 이익은 중앙정부 + BPA이 이익은 기재부에 귀속 (4) 선박금융 활성화: 現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선박금융 활성화를 위해 농해수위, 기재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 중 • 공동연구 주제로 언급된 해양산업클러스터 연구는 이미 용역으로 추진한 바 있음 → 향후 클러스터의 잠재적인 역량, 집적효과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점의 용역추진 필요 • 해양수도‘팀’에서 해양수도정책‘과’로 승격에 따른 업무범위 변경 → 기존 해양산업과의 업무에 해양산업 + 해양레저의 일부 기능 통합,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부산시 해양정책의 입장 확보 (시설 등은 해운항만과가 총괄)

구 분	의 건
KMI	• 당초 항만공사법의 주요 이슈: 5개 항만공사의 지방공사화, 해외항만개발사업 • 최근 균특위에서 특정 개발분야 관련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였으나,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제외대상에 미포함 • 감천항 기능쇠퇴, 재생사업 등의 일환으로 수산물가공 등으로 특화시키는 방안 고려 가능 • 우암부두는 지분 제공, 공공구매 등의 방식으로 공동추진 제안 (예시: 마르세유 → 도시 + 항만재생을 포함, 도시는 협조적이나 항만관련 항운노조의 반대로 어렵게 추진 중, 별도의 청 개설 등 독립된 조직을 통해 추진 가능) • 해양오염쓰레기는 국가 + KOEM이 수거, 그러나 육상유입 쓰레기는 지자체에서 수거 실정 • 해운항만과의 연안개발팀이 연안정비 이슈 담당, 다대포 지역은 완료 + 기장군은 예정 → 제4차연안정비계획에 부산 연안을 포함시키기 위한 기획기사 발표 중(10회이상)
	• 해양자치권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조정 방안 → 제주와 공통의견, 공동대응 가능한 부분 • 항만연계형 도심개발 등에 제도/갈등 조정 논의 필요 • 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 요청 + 법제정비 방안 구체화 → 여타 연안시도와 공동대응 방안 발굴 • 부울경 정책세미나: 시도 국장님들이 토론주재자(Chair)로 역할 필요 • 여타 시도의 업무계획을 종합 → 지역별 정책차별화, 공동대응 파트 추출 (KMI) → 추후 시도에 연계 필요 • 주요 항만, 낙동강 하구(문화재+습지보호지역 등과 연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관리항 • 부산시 현안 중 수협중앙회 부산 이전은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하여 논의 중
내일신문	• 10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분석(예산부서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 국비:시비) 결과 요청, 자치권 확보사업 제외 • 해양농수산국의 업무분장에 조선사업/조선기자재 부분 포함 여부 확인 필요 → 경제산업부(산통부)가 담당 • 부산시는 조선산업을 해양수산 분야에 포함시키지 않음(=해양관련 일자리/산업통계/전후방연관효과 등에서는 조선산업 등 제외) → 일자리국 단위에서 포함 → 경제부지사가 총괄 관리 • 해양농수산국의 사업비, 예산? → 시의 재정자립도 등의 문제로 모든 사업을 지방비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움, 전체 국 예산을 확인하여 국비지원 요청 사항 등 확인 필요 • 자료요청 사항: 해양산업통계조사(매년) 자료* * 부산이 유일, 해양산업 관련 조례를 통해 (유일) 통계조사 중 + 제주도가 해당 조례를 참고하여 해양경제도시 추진 중

부록 4. 충남

1. 회의 개요

회의명	충남 해양수산 현안과 혁신정책 간담회
회의안건	충남의 해양수산 분야의 지역현안 청취 및 혁신정책 발굴 - 국가정책화 사업 및 지역 현안 논의(22건-도6, 시군16)
일시	2018년 10월 30일(화) 14:00~16:00
장소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회의실
참석인원	21명(도 7, 시군 6, KMI 7, 충남연구원 1) - 박정주 도 해양수산국장, 최재선 KMI 선임연구위원, 6개 시군 과장(팀장) 외
현장사진	

2. 주요 내용

■ KMI 중점 연구사업 계획

-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규제정비, 법적·재정적 근거 마련 등

※ 지역문화유산 활용, 해양국제교류도시 육성, 항만배후지역 자유무역지대 확대 등

- (균형발전과 재정분권) 국고보조금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전환

- ※ 어촌계 인력양성, 주민생활 기반시설(민박·가공), 공공서비스 지원(병원 등)
- (지역연구 큐레이션) 정책 어젠다 제안, 성과의 확산·홍보·정책화 등

■ 주요 현안 및 정책

① 해양바이오산업 분야(KMI 장정인, 최재선) ⇨ 기능재편, 지역특화 필요

- 해양바이오산업은 헬스케어산업으로 확장 분위기
 - 기존 식품 이외 의약, 의료기기, 장비 등에 관심이 높음
- 정부의 산업화를 위한 R&D, 상품화 등을 고민하고 있음
- 해양바이오기업은 서해안에 거점(클러스터, 산업단지)의 필요성을 요구
-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충남의 강점이 무엇인지 고민 필요
 - 중국 청도 해양바이오특구(해조류인 미역에 특화, 명월그룹 입주)

② 항만 분야(KMI 이종필, 최지연) ⇨ 거점항만 육성, 기능적 다양화 필요

- 신항만 기본계획, 제4차 항만기본계획, 항만 배후단지 개발계획에 반영 필요
- 당진항과 평택항은 물류비용 격차가 발생, 신항만은 물동량 확보가 관건
 - 먼저 산업을 유치해야 물동량이 늘고 신규항만 개발수요가 발생
- 이를 위해 중국(산둥)·동남아시아, 어촌·어항·관광과의 연계·협력 필요
- 국가계획의 체계화 필요(항만기본계획의 기간을 20년으로 늘려야)
- 거점항만을 육성, 네트워크화하고 기능재편과 방향 설정이 중요

- 항만과 수산의 공존 필요(정주·친수공간으로 미활용, 제도개선 필요)
- 2019년 북한 항만 물동량을 파악하는 연구를 할 계획
- ③ 수산 분야(KMI 황재희, 최지연) ⇨ 어구수선장을 어촌 복지거점으로 활용
 - 어구수선장·위판장을 여성·노인의 복지공간으로 조성
 - 해수부의 “청정어항” 사업과 연계, 어구수선장·위판장 위생개선 필요
 - 수산, 어업, 스마트양식, 낚시는 환경 및 안전과 연계 필요
 - 스마트 양식을 외해로 확대하는 방법 고민(경남 통영 사례)
 - 위판장의 어류보관함을 나무에서 플라스틱(위생형)으로 변경(제주 사례)
- ④ 해양레저·관광 분야(KMI 이종훈, 최지연) ⇨ 어업인과 지역갈등 해결방안 모색
 - 레저 전용 계류장 조성은 해수부의 “어촌뉴딜사업”과 연계 추진
 - 모터보트는 육상에 안전·보관·편의시설 확보가 되어야 함
 - 낚시·레저객과 어업인과의 마찰(남획, 불법유통, 주차장 등)은 지역 내 시급한 문제로, KMI에서 현안과제로 추진 검토
 - 어항 내 레저시설 설치에 대해서 어항+관광+수산 분야의 협업 필요, 법·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하겠음

3. 후속 조치계획

- (과제 구체화) KMI의 실증연구 → 국가정책화·반영되도록 최선 노력
- (추가과제 발굴) 현장진단을 통해 협업모델, 충남 특화정책 개발 지속

기본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해양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연구	박수진
02	공유수면매립 정책의 개선과 전환에 관한 연구	윤성순
03	도서지역 해양관광 발전전략 연구 : 관광행태 분석을 통한 수요 대응을 중심으로	홍장원
04	양식장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방안 연구	김경신
05	수산업 전망모형 「KMI-FOSIM」 구축연구 - 양식산업 전망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이현동
06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임경희
07	인구소멸 시대의 어촌사회 정책 연구	박상우
08	국내 가두리 양식장 어장환경개선 방안	마창모
09	어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연근해 어업의 허가제도 개선 방안	엄선희
10	과학적 해양사고조사체계 도입 및 구축기반 연구	박한선
11	컨테이너 해상물동량 예측 모형 구축방안 연구	고병욱
12	해운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황진희
13	건설용 모래 공급사슬관리(SCM) 방안 - 바다모래 가치 재산정을 중심으로 -	이연경
14	항만산업 종합통계 연구	하태영
15	항만 위험물 컨테이너 공급사슬 관리방안 연구	최나영환
16	국내 컨테이너항만의 비용 함수 추정 및 효율성 연구	최석우
17	신규 해사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박한선
18	환동해권 물류 및 지역개발 기업진출 사례 분석 및 추진전략	이기열

2017년

01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김대영
02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윤성순
03	해양준조세 산정체계 개선방안	장정인
04	해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도서 활용 방안 연구	최지연
05	반려동물산업 성장에 따른 수산분야 펫푸드 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박상우
07	Post-2020 국제기후변화 규범체계에 대응한 해양정책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08	한국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 수립 연구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임경희
09	양식산업 재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마창모
10	해운기업의 선박투자 행태 분석과 대응방안	김태일
11	IMO 지속발전 전략계획(SP) 대응방안 연구	박한선
12	컨테이너 해운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고병욱
13	동북아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전환수요 분석	이기열
14	컨테이너 해운기업의 환적 패턴 분석과 항만의 대응방안	김은수
15	현장수요기반 IoT/빅데이터 항만하역 안전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전형모
16	지진에 대비한 항만기능 유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김우선

수시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선화주 상생발전을 위한 해운산업투자 확대방안 연구	윤재웅
02	새로운 어선등록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엄선희
03	낚시관리 실행력 제고 방안 연구	이정삼
04	해양생태도의 정책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박수진
05	국내 항만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조치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안용성
06	농축산물 등의 관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한 항만배후단지내 FTZ활성화 방안연구	조지성
07	최저임금상승이 항만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기열
08	수산업·어촌분야 공익적 가치 평가체계 수립 및 사회적 경제 도입방안 연구	류정곤

2017년

01	파나마운하 확장에 따른 해운물류환경변화와 정책대응 방안	박용안
02	해양문화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홍장원
03	4차 산업혁명과 해운산업 정책방향	황진희
04	제주도 항만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5	수산물 산지경매사 직무 및 시험체계 개발	장홍석
06	한·중·일 신선물류산업 활성화 방안	장홍석
07	연안항 지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김근섭
08	지속가능한 갯벌어업을 위한 로드맵 마련 연구 - 갯벌어업 패류양식을 중심으로 -	마창모
09	해양수산 공공부문 인재육성 정책 방향	홍현표

현안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미안마 국립수산대학 설립 추진 방안 연구	정명화
02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김태일
03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인증을 중심으로-	이상철
0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양수산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제물류 청년인력을 중심으로 -	박광서
05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계약 개선방안 연구	윤재웅
06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김은수
07	자율운행선박 도입 관련 대응정책 방향 연구	박혜리
08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윤성순
09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연구	최일선
10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최영석
11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정보 생산·활용방안	정지호
12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하태영
13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한기원
14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15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이정삼
16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항만물류 부문의 협력사업 발굴	이기열
17	한국 제조기업의 SCM 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수용
18	제3자 물류산업 발전방향 연구-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병욱
19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한-베트남 수산식품·가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정명화

20	신 해양도시 조성 필요성 연구	최지연
21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최지연
22	학교급식의 수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문석란
23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 연구	박상우
24	페루 수산업 실태 및 수산 협력 방향	엄선희
25	경제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한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	한광석
26	서해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남정호

2017년

01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전형진
02	한투발루 협력 증진을 위한 참다랑어 외해양식 투자의 타당성 분석	마창모
03	AMP 설치 수요조사 및 추진과제 연구	이연경
04	해외 진출 무역업체의 한국인 포워더 수요 추정 연구	신수용
05	선박교통관제(VTS)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	박한선
06	부산 영도구·중구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안 -한진중공업·자갈치시장 사례 중심-	최나영환
07	수산시장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	이현동
08	산업정책적 관점에서의 주요국 해운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고병욱
09	연안형 도시재생 기본구상 -부산 원도심 및 영도지역 사례 분석-	최지연
10	갯벌 복원 수요 확대에 따른 복원 표준모형 개발 방향	육근형
11	항만보안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김찬호
12	전자상거래 기반 상업항 개발전략	최상희
13	항만 내 여항구 개발과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광석
14	해운 얼라이언스 개편과 부산항 신항 환적 운영 개선 방향 연구	김은수
15	PA관할 항만 항계 확장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 부담기준 마련	김근섭
16	페루 수산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정명화
17	러·일 간 남쿠릴 열도 분쟁의 최근 동향	현대송
18	부산항 신항 혼합형 전용터미널(Hybrid liner terminal)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김근섭
19	해양경비 여건 분석과 역량 강화 방안	윤성순
20	바닷모래의 이용실태와 관리 개선방향	윤성순

21	우리나라 구조조정 정책사례 및 시사점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황진희
22	한국 컨테이너선대 육성의 필요성	김태일
23	어촌지역 고용지표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구	한광석
24	우리나라 항만산업 고용통계 조사 연구	하태영
25	뉴질랜드·노르웨이의 양식 수산물 수출 전략	임경희
26	빅데이터 적용 해운항만산업 연구분석 우선순위 연구	최종희
27	해양수산 생명자원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박수진
28	미·중 수산물 수출 비관세장벽 동향 및 대응 방안	임경희
29	도시-어촌 상생협력 인식도 조사	이상철
30	크루즈산업의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책과제	황진희
31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영체계 개선방안	김태일
32	우리나라의 배출규제해역(ECA) 도입 방안 연구	이기열
33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강화에 따른 항만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심기섭
34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분야 및 고용효과 분석	박광서
35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방안	안용성
36	해양휴양복지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홍장원
37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의 국내 이행 방안	김경신
38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평가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신수용
39	2018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40	도시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형 어촌 개발 콘텐츠 발굴 연구	박상우
41	4차 산업혁명시대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방안 연구	이연경
42	원양어선 승무 선원의 스트레스 분석에 관한 연구	이승우
4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나라 항만 경제특구 발전 방향	박성준
44	해양주권 강화를 위한 무인도서 기초정보 개선 연구	정지호
45	세계경영을 위한 해외 터미널 및 물류시설 투자방안	박주동
46	연안 소규모 하·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원근
47	거대선사의 시장지배력 확대에 대한 국적선사의 대응 방향	전형진
48	해양법 관련 최근 판례 및 동향 분석 - 남중국해 분쟁 등 해양법 판례 중심 -	최지현
49	화주 관점의 항만배후단지 역할 제고 방향	김은수

일반연구보고서 발간목록

2018년

01	전라남도 작은 SOC사업 활성화 방안- 소규모 항·포구 개선사업 -	김근섭
02	2019 국내 물류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	최상희
03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참여 방안 연구	김민수
04	물류기술 R&D 추진동향 분석 연구	강무홍
05	우리나라 기업의 일대일로 물류분야 협력방안 연구	김형근
06	북한 동해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윤인주
07	해양수산 분야 북극권 4차 산업기술 수요조사 및 분석연구	김민수
08	경상북도 논 생태양식 육성 방안	이상철
09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해운협력 기반 구축 방안	황진희
10	영토 권원 이론의 현대적 발전과 한계	김원희
11	동해표기 문제 연구 - 동해 지명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 방안	현대송
12	우리나라 기업의 창장물류 활용방안 연구	김형근
13	태국의 수산물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수출전략 연구	임경희
14	제주 해상풍력발전지구 제도 개선 연구	육근형
15	해양수산 분야 「9 브릿지」 구축 방안 연구	박성준
16	강원도 어촌 신활력 제고방안	박상우

지역 해양수산 혁신사업 발굴과 추진방향

인 쇄 | 2019년 4월 28일 인쇄

발 행 | 2019년 4월 30일 발행

발 행 인 | 양 창 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조판·인쇄 | 애드원플러스

판매 및 보급: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0337
정가 6,000원

